
2015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주최 | 강정마을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참여연대,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오키나와 민중연대,
국회의원 장하나

주관 | 기지평화네트워크

(군산미군기지우리땅되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본 자료집은 2015년 4·9통일평화재단의 공모사업
“다섯번째 동행”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

- 14:00 개회** **개회사 및 환영사**
유경희 녹색연합 상임대표
장하나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14:20 발제1**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과 한국에서의 MD전개과정**
박석진 /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 14:40 발제2** **일미 MD전개과정과 동아시아의 평화**
오오완 무네노리 / 미군X밴드 레이더기지반대 교토연락회
- 15:20 영상1**
- 15:25 보고1** **반환미군기지 협상을 통해 본 환경오염문제**
신수연 / 녹색연합
- 15:40 보고2** **일본 안보법제 추진과 문제점**
이토카즈 게이코 / 일본 참의원의원
- 16:10 영상2**
- 16:30 보고3** **울(all) 오키나와의 헤노코, 전쟁법안 반대**
다카하시 토시오 / 후텐마기지 폭음소송단
- 17:00 보고4**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과 미래**
고권일 / 강정마을회
- 17:15 보고5** **주한미군의 생물무기반입 및 실험훈련의 문제점**
이미현 / 참여연대
- 17:30 질의응답**
- 17:50 선언** **한국 · 일본 · 오키나와 공동선언문**

목 차

개회사 유경희 녹색연합 상임대표

인사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인사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제1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과 한국에서의 MD전개과정 / 박석진	07
발제2	일미 MD전개과정과 동아시아의 평화 / 오오완 무네노리	26
보고1	반환미군기지 협상을 통해 본 환경오염문제 / 신수연	37
보고2	일본 안보법제 추진과 문제점 / 이토카즈 게이코(대독)	42
보고3	올(all) 오키나와의 헤노코, 전쟁법안 반대 / 다카하시 토시오	49
보고4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과 미래 / 고권일	49
보고5	주한미군의 생물무기반입 및 실험훈련의 문제점 / 이미현	54

개회사



유 경 희 / 녹색연합 상임대표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 기지평화네트워크가 구성된 지 8년입니다. 그동안 기지평화네트워크는 경기북부, 군산, 평택, 제주 강정 등 곳곳에서 미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주민 피해, 범죄, 환경오염 등에 대한 감시하고 알리는 등 문제제기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여러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평화·환경 활동가들과의 연대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여기’는 평화보다는 군비 증강이 앞서고, 안보 논리 앞에서 환경의 가치는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미국의 지원 아래 미일 군사동맹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하여 냉전시대로 돌아서고 있으며, 아베정권의 집단적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시민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사배치를 늘려가고 있고, 한국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MD, Missile Defence) 구축 및 강화 등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재편 움직임을 통해 또 다른 냉전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평화 위협으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오키나와-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대규모 미군기지로 인한 인권·환경·안전 및 건강권에서의 피해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항공기 비행과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 고엽제 매립 의혹, 각종 유류에 의한 토양·지하수 오염, 온갖 포탄과 미사일·실탄으로 인한 중금속 및 화약류 오염 등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드러나도 한미 양국 간 힘의 불균형으로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주권의 침해로 이어지고 그 규모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한 미군의 환경관리 기준 강화 등 책임성을 확인시키고, 정보를 공개하며, 한국 정부 주도의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일어나는 피해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미군에 의한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 사안도 간과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군기지의 74%가 집중해 있는 지역으로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시 헤노코 해안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한 갈등, 바다 매립에 따른 산호초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훈련 소음과 주변 환경오염, 미군에 의한 사고 또한 미군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 되고 있어 오키나와 현과 일본 정부는 갈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국민건강권 위협, 불평등한 SOFA 협정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꾸준한 관심과 문제 공유를 통해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연대체의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갑시다.

동아시아 평화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



장 하 나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환영합니다.

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가 벌써 8회째를 맞았습니다. 군산에서, 오키나와에서, 그리고 강정과 평택에서 군사기지 감시활동을 끈질기게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군사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주로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많이 알려졌듯이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서식 실태조사를 3년째 매 분기마다 실시함으로써 환경부가 방치한 군사기지로 인한 오염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탄저균배달사고 과정에서 오산공군기지에서도 근무하는 약 1천 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자국민 근로자보호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자국민을 위협에 자국민을 위협에 빠트렸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군사기지는 치외법권으로서 국내법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블랙홀처럼 되어버

렸습니다. 이럴 때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수단의 미약함에 저 또한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각자의 지역에서 군사기지로 인한 폭력을 감시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보며 다시 한 번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늘 많이 배웁니다.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힘이지만 불러주시는 자리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한 충 목 / 한국정보연대 상임대표

아시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오키나와, 일본, 한국의 평화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동아시아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 패권의 약화속에서도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이라는 명목으로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대중국, 대북 압박정책에 일본과 한국 정부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모두 미국의 아태 전략과 한 몸으로 움직이며 역내 갈등을 격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X-BAND 레이더와 한국의 미사일 자산은 '상호운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미국의 군사자산과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민중들의 복지에 쓰여야 할 세금들은 미국산 무기 도입으로 낭비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앞세워 한국과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권리를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평택, 군산, 용산 등지에서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사건은 미국주도하의 패권정책이 주권과 생존권, 평화권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가, 정부가 이 같은 사태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굴욕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헤노코, 제주 강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강행하

는 과정 역시 그러합니다.

한미일 패권동맹, 군사적 갈등의 격화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모두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고, 현존하는 전쟁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진영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미국의 아태 패권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미국 패권정책에 편승하여 추진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시도와 재무장 움직임, 한국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 또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폭력과 패권에 맞선 각국 시민들, 민중들의 적극적인 평화행동이 절실합니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의 일체성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맞선 아시아 평화세력의 연대 또한 중요합니다.

그동안 오키나와와 일본, 한국의 평화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연대해 온 것을 토대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맞서는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토론회가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과 한국에서의 MD 전개과정

박석진 /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Civilian Military Watch)

I. 서론

미국은 2011년 말 아시아 회귀 전략을 천명한 이래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군사전략과 미군 재배치 정책을 진행시켜 왔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군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이다. 적국의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으로 시작된 이 군사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데, 첫 번째는 MD가 미국과 그 상대국간의 전략적 안정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이자 군사전략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방어가 아닌 위력적인 공격의 측면을 가진다는 점이 그것이다.¹⁾ 이런 이유로 러시아, 중국 등 미국의 MD 대상국들은 미국 MD의 전개양상과 확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 문제는 최근 미국이 기존의 미·일 MD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을 미국 MD의 주요 참여국으로 설정하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는 데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MD 참여 요구는 아시아 회귀 전략이 본격화 하며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미국 MD에의 참여 요청이고 두 번째는 기존

1)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영역에서 MD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온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의 정리가 명쾌하다.

“어느 일방이 MD를 갖게 되면, 다른 일방은 그 방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 많이, 더 빠르고, 더 다양한 미사일을 만들려 한다. 전략적 안정의 한 축인 ‘군비경쟁 안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동시에 MD를 갖고 있는 나라는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MD로 막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선제공격’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전략적 안정의 또 다른 축인 ‘위기 안정’이 극히 어려워진다” - 정옥식 [MD본색, 은밀하게 위협하게] (2015년 3월, 33p)

미·일 MD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방식이며 세 번째는 소위 한국형 MD(KAMD)와 미국 MD와의 연계(상호운용성)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어떤식으로든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적인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그 변화는 관련국들간의 보다 첨예한 군사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MD의 전개 방식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미국 MD 참여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토론의 형식으로 최근 한국 내에서 도입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MD 무기체계인 사드(THAAD)가 갖는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해보려 하였다.

글을 작성하는 즈음, 아베정부의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일본의 주요 정치인과 양심있는 학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움직임이 한국 언론을 통해 연일 주요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미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 국제심포지엄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실천적 연대로 이어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미사일방어 체제

1.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주지하다시피, 현재 미국이 천명하고 있는 세계패권전략은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²⁾이다. 2011년 11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캔버라 선언으로 가시화 된 이 전략은 이후 경제·외교·군사적 측면으로 구체화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전략은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의 활로로 대폭적인 수출의 확대를 설정³⁾했으며 그 주된 시장으로 세계 인구의 40%가 몰려있고, 세계 GDP의 절반이 넘는 규모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였다. 수출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5대 중점과제⁴⁾를 설정하고 그 주요한 실현 수단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2) 이 전략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또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정책’,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등, ‘회귀(pivot)’ 대신 ‘재균형(rebalancing)’을 쓰기도 한다. 이는 pivot이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이에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2년 대선 이후 오바마정부는 ‘pivot’보다 순화된 뜻과 어감을 갖는 ‘rebalancing’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군사적 측면을 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3)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2014년까지 수출을 2배로 확대해 재정적자의 해소 및 경기회복, 고용 창출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이후 국가수출구상(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으로 정책입안되었다.

4) 수출 확대를 위한 5대 중점과제 (2010, 3)

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⁵⁾을 제안하고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미국은 무역적자의 절반이 넘게 차지하던 중국⁶⁾을 상대로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다.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은 기존의 전통적 동맹국들(일본, 한국, 호주)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동아시아의 다자간 국가협약체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기 시작했다.⁷⁾ 마지막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2012년 1월 '신국방전략 지침'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에 맞설 수 있는 공해전투전략⁸⁾으로 작전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아태지역에 현재 52% 수준인 미 해군전력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에는 건조 중인 신형 항공모함 제럴드포드호를 포함해 현재 5척인 항모전단을 6척으로 늘릴 것이며 B1·B2전폭기, 글로벌호크 등 공군력의 상당 부분도 함께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⁹⁾

이와 같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경제·외교·군사적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미국의 국가전략이며, 그중에서도 군사전략은 이 총체적 국가전략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지렛대라고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도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의 주된 대상인 중국에 대해 절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수단이 된다.

2.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미사일 방어전략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ce)라는 개념¹⁰⁾이 처음 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로까지 거

- 기업 지원 확대 / 자금지원 / 통상장벽 제거 / 통상법 강화 / 국제협력 강화

- 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모든 상품의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FTA. FTA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상품시장과 서비스 뿐 아니라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등 비관세 분야를 망라한 21개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TPP가 체결될 경우, 전 세계 GDP의 38%, 교역규모의 26%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6) "...11일 미 상무부는 6월 무역적자가 18.8% 급증한 499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6월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261억5천만달러로 확대돼 2008년 10월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유인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포맥스 2010년 8월 11일자 보도 중 일부 발췌
- 7) 오바마정부는 '아시아 회귀'전략이 가시화하기 전인 2009년 7월 ARF(아세안안보포럼, 1994~)각료회의에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을 참석시켰으며, 2011년 11월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1989~)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 8) 공해전(空海戰, Air Sea Battle) - 미 공군, 해군, 해병대가 합동전력을 구축해 중국의 거부전략을 무력화하고자 구상된 신냉전 전쟁계획. 2011년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공해전부대가 창설되었으며 팬타곤은 이 군사전략을 통해 전지구적 특히 아태지역에서의 '접근의 자유'(freedom of access)를 유지·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9) 2012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례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대화)에서 당시 리언 페네타 미 국방장관 발표내용 발췌
- 10)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ce)란, 적성국가 또는 적대세력으로부터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공격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여 방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 개념이다. 미사일 방어는 그 형태와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슬러 올라간다. 1944년 연합군의 대공세에 대한 반격으로 독일이 영국에 발사한 1만 여기의 V1미사일은 2만명이 넘는 영국인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미사일 방어 구상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후, 냉전시기 미국은 소련과 경쟁적인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체제를 연구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개념이 최초로 정책화 된 것은 1983년 3월, 레이건정부가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ce Initiative, SDI)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천문학적인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폐기된다. 레이건에 이은 부시행정부는 SDI가 추구하던 범위를 축소하여 전 지구적 제한공격 방어계획(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Initiative, GPALS)으로 추진했고, 클린턴행정부는 이를 다시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방어를 위한 TMD와 미 본토의 방어를 위한 NMD로 나누어 추진했다.

2001년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거의 20여년 동안 미국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시도했지만, 실제 무기체계화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1972년 미·소가 체결한 탄도요격미사일제한조약(Treaty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ABM Treaty)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미·소간의 전략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성립한 이 조약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언급한 미국의

<형태에 따른 분류>

- ① 공격 작전 :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직·간접적 시설은 물론 발사 및 통제시설, 군수지원시설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통해 적국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 ② 적극 방어 : 일반적으로 일컫는 미사일 방어를 뜻한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 하는 방법
- ③ 소극 방어 : 적의 공격에 대한 표적 제공을 억제함으로써 미사일 공격 확률을 감소시키고 적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단계에 따른 분류>

이 분류는 기본적으로 위 분류 중 적극방어의 형태에 적용되는 분류이다.

- ① 부스트 단계 : 미사일이 발사되어 상승하는 단계 / 이때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사일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탐지가 어렵고 적 미사일 기지까지의 접근성이 제한된다.
- ② 중간 단계 : 부스트 단계 이후 종말 단계까지 주로 외기권을 비행하는 단계 / 이때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비행경로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고 가용시간이 많으나 수백, 수천킬로미터 밖의 미사일을 타격해야 하며 기만체 등과 구별해야 하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 ③ 종말 단계 : 미사일 탄두가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목표물을 타격하기까지의 단계 / 고속으로 돌진하는 미사일의 속도가 높고 시간이 짧아 반응 속도가 빨라야 하고 타격 후에도 탄두 파편들로 인한 아층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탄도미사일의 고도에 따라 미사일 이륙단계 방어, 하층 방어, 상층방어로 분류되기도 한다.

MD 구상들은 이 조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들이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MD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2001~2008)는 ABM조약 자체를 문제 삼으며 당면한 불량국가(북한, 이란 등을 지칭)들로부터 오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BM조약을 수정이 아닌 새로운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시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양한 MD프로그램을 통합해 미사일 방어청(Missile Defence Agency, MDA)을 신설하고 2002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는 한편 클린턴행정부의 TMD, NMD 구분을 없애고 육지·바다·우주에 기반한 MD로 통합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나섰다.¹¹⁾ 2001년 발생한 9·11테러는 부시행정부에게 MD를 추진하기 위해 좋은 정치적 지형을 형성해주었고, 2002년 6월 ABM조약을 공식 탈퇴함으로써 MD 추진을 본격화했다. 2009년 들어선 오바마행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부시정부의 MD정책을 승계하면서 유럽에서는 이란의 핵개발을 명분으로 단계적 MD 추진방안인 EPAA¹²⁾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북의 핵개발을 명분으로 삼아 기존 미·일 MD를 강화하면서 주변 동맹국들을 포함시키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MD 추진 과정은 후술하겠지만 미국의 새로운 패권전략인 아시아 회귀 전략에서 MD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언급한 바대로 미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기도 하지만,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절대적 강자로 존재해 온 미국의 새로운 세계패권 유지 전략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은 경제·군사적으로 발흥하고 있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1970년대 말 개방화정책을 추진한 이래 중국은 GDP 기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했으며 군사비 역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지출하고 있는 강국으로 부상했다. 앞서 기술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움직임은 모두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 그리고 압박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MD 역시 그 주된 대상은 중국이다. 2013년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을 중심으로 양자동맹관계들을 연결시키는 중심축과 바퀴살모델에 따라 동맹국들과 탄도미사일 방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분명히 명시하고 한미일 MD 협력이 아시아 회귀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¹³⁾ 결국,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에의 참여 요구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11) 고재남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 추진과 러시아의 대응] (국제문제연구 2013, 겨울 81~82p)

12) 2009년 9월, 오바마행 정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럽 MD 정책을 수립했다. EPAA(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는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인 SM-3에 기초한 단계적 MD 구축 계획으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SM-3미사일의 발진 정도와 배치 계획들을 고려해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유럽 MD 구축과 관련해서는 NATO에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주요하게는 동맹국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성, 정치·외교적 해결보다 군사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 미 방산업계의 요구가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 고재남 [상계서] (86~94p)

13) 엄상윤 [한·미·일 MD 협력의 양상과 전망] (국가전략 2014년 제20권 2호 44p, 55~56p)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MD의 양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III. 한국에서의 MD 전개 과정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MD 참여 요구

미국이 처음 한국에 MD 참여를 요구한 시점은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1996년 중국이 대만에 미사일을 발사하고¹⁴⁾, 1998년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광명성 1호¹⁵⁾를 발사한 즈음으로 파악된다. 이 발사체의 성공여부는 논란이 되었지만 미국은 이를 인공위성이 아닌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기존에 일본과 진행되던 MD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MD 참여를 요구했다. 일본은 북의 미사일 발사를 주요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해, 미군과 해군전역방어(Navy Theater Wide Defence, NTWD)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2002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회를 통해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03년에는 일본 안보장회의와 각의의 결정을 통해 당시 미국이 개발하고 있었던 지상 요격미사일 체계인 PAC-3와 해상 요격미사일 체계인 SM-3(Block I A)를 획득해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¹⁶⁾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당시 김대중정부는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 경제적 부담,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에 MD에 보다 적극적인 부시정권이 들어서고 한국의 MD 참여 요구가 거세지자 2001년 2월,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은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미국의 TMD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으나 우리 실정에 맞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처음으로 MD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이지스함과 패트리엇미사일 도입을 결정하고 미국은 한미연합사 내에 연합합동미사일작전기구(Combined and Joint Theater Operations Cell, CJTMOC)를 신설함으로써 미국 MD 참여의 단초를 열어주었다. 이후 노무현정부 역시 미국 MD 참여에는 부정적이었으나 정권 말기 한미 또는 한미일 해상 MD 체제의 전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고,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내에 MD체계의 일부인 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엇 지휘부대의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미국 MD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수단들을 강구해나가기

14) 1996년 3월 8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 3기가 대만 근해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대만은 즉각적인 전쟁 준비상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같은 노골적인 위협과 도발은 양안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민족통일을 위한 길을 더욱 멀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미국은 중국 주재 미대사관을 통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파견해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 보도]

15) 광명성 1호(光明星 1號) -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첫 번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를 북한이 발사한 첫 번째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미사일을 발사한 곳의 옛 지명이 대포동이어서 ‘대포동 1호’로 불려지고 있다.

16) 박휘락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사례 분석과 한국에 주는 교훈] (국가전략, 2013년 제19권 4호)

시작했다.¹⁷⁾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미국의 MD 참여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던데 반해 한미동맹 강화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MD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2010년 10월 개최된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는데 미국의 확장억제가 핵우산, 재래식 전력, MD 등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간 MD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실제 한미 SCM 이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면서 MD체제에 가입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중 하나로 북한의 핵·대량살상 무기(WMD)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 측의 '지역 MD'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이런 의혹을 현실화했다. 2011년 4월, 브래들리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과 양자 MD 협력 문제를 논의해왔고 최근 한국이 MD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요구·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약정과 협정에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한미 간에 MD에 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미일 MD의 경우도 일본이 미국 MD에 참여를 공식화 한 2003년 보다 훨씬 이전부터 탄도 미사일 방어 연구를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사례¹⁸⁾를 감안하면 미국 MD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보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갓 들어선 박근혜정부를 안보위기에 몰아넣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의 일체 금지를 포함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임기 첫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미사일방어망의 강화를 선언했다. 이후 오바마정부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해 미 서부해안의 MD 전력을 50% 증강하기로 하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되어 있던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체제(Ground Based Interceptor, GBI) 30기에 더해 1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하는 한편 콤팩트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제인 THAAD 배치를 결정했다. 이어 미국은 아태지역의 MD 강화와 한국과의 MD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데 2013년 6월 1일, 상그릴라회의에서 당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미 본토와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5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는 한미 간의 미사일 방어 협력이 명시화 되기 시작한다.¹⁹⁾

17) 정육식 [상계서] (195~201p)

18) 일본은 1993년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전구미사일 방어실무단(Theater Missile Defence - Working Group, TMD-WG)을 구성하여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19) 공동선언에서 한미 간의 MD 협력을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책임있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MD에의 참여 논란은 구체적인 무기체계의 도입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드(THAAD)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이 요격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중 종말단계의 상층 고도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다.



<미국 MD 개념도>

후술하겠지만,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과는 별도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MD 체계의 핵심 요격미사일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의 도입에 대해 한사코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정황은 정부의 말만 믿을 수는 없도록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 파열은 미 군수업체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2013년 9월 10일, 미국 최대의 군수기업이자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부사장 마이클 트로츠키는 미국 내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설명회에서 “한국이 패트리엇 요격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다음 단계의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들(한국정부)이 록히드 마틴의 사드에 굉장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으나 몇 개월 뒤 미 국방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부지조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²⁰⁾ 미 군수업체 마케팅 담당자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기밀누설인 셈인데 이는 미 군당국의 한국 MD 참여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미국은 보다 본격적으로 한국에 사드 도입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얼마 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

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 ‘미, 한국에 사드 배치 검토, 부지조사도 실시’ [한겨레신문, 2014년 5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인용 보도]

령관은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종전의 입장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 배치 요청과 관련해 두 달 뒤 한미연합군사연습 참관차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위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THAAD와 KAMD와의 상호운용성의 확보”라고 언급함으로써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드러냈다.

2015년 3월, 주한 미대사에 대한 테러사건은 사드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건으로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한 한국 보수여당의 몇몇 의원들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당론으로 결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No Request), 협의한 적도 없으며(No Consultation), 결정된 것도 없다(No Decision)는 소위 3NO로 불리는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천명하며 진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부 발표 다음날,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1년여 전에 진행한 한국 내 사드부지 조사결과를 다시 발표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려 들었다. 5월 9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발사를 공개한 이후 미국의 한국의 사드 도입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5월 18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용산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에 대해 말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미국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모르지 않는 미 외교부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쉽게 넘길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어 다음날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보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노골화했다. 이어 7월 12일, 미 의회조사국은 2015년 연례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이 독자로 사드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사드 도입이 한미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2.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한미일 MD

기술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MD 참여 요구는 미일 MD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클린턴 정부 당시 미 국방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부시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클린턴정부 당시부터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추진을 본격화 해 왔다고 말한다.²¹⁾ 그리고,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집단안보에 관한 합의문 (collective security agreement)’을 거의 발표 직전까지 진행했으나 한국이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뺐다며 한·미·일 간의 ‘준 군사동맹’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증언했다.²²⁾ 그리고 이 ‘준 군사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선언 이후 MD를

21) 이용인, 테일러 위시본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묻는다] (2014년 창비, 341p)

통해 진전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핵심인 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한 방어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은 곧 MD 협력을 의미한다. 그런점에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한미일 MD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모체는 2012년 6월, 이명박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다 한국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이다. 이미 미국과 한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1987)이 체결되어 있고 미·일 간에도 군사비밀보호협정(2007)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만 군사정보공유가 이루어진다면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추진된 한·일 GSOMIA는 앞서 마이클 그린의 말한 ‘집단안보에 관한 합의문’의 또 다른 형태였다. 한·일 GSOMIA가 실패하자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방안을 모색했고 그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국을 끼워넣는 방식이었다.

2014년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모두 연설을 통해 “한미일 간 외교와 군사 양 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그 협력은 MD 체제와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미·일 MD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질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빠르고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오바마의 발언이 있는 지 두달 뒤인 5월 31일, 상그릴라 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3국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12월 8일,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법을 확정하며 “(미)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방안을 평가해 이를 법안 발효 뒤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수권법이 확정된 지 불과 20여일 뒤인 12월 29일,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1주일 전인 12월 23일, 미국이 서명했고, 한국과 일본은 26일 서명이 마쳐진 상태였다. 2012년 한·일 GSOMIA가 막판에 무산된 경험을 살린 정부의 또 한 번의 국민 속이기였다.

이러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그 첫 번째는 언급했다시피 한·일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미국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감을 상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군사정보 공유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조약(TREATY)이나 협정(MOU)이 아닌 ‘약정(PACT)’의 형식으로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는 조약이나 협정의 형식으로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수반해야 하는데 반해 약정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

22) 이용인, 테일러 워시본 [상세서] (326p)

다. 세 번째는 MD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 미사일에 대한 탐지·식별·추적·요격 등과 관련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인데 한·미·일 3국은 약정을 통해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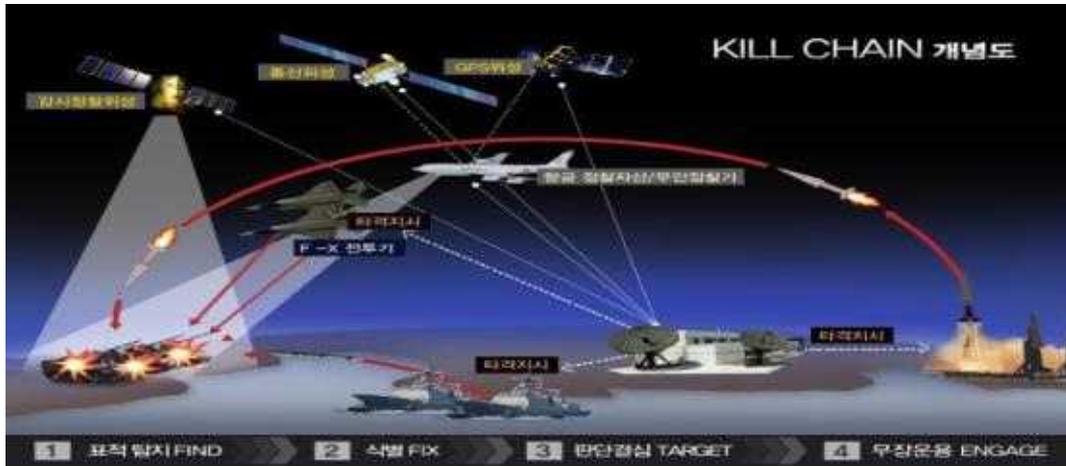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에 대해 미국은 이를 반기는 속내를 숨기지 않으며 한·미·일 MD 협력을 보다 구체화 하고 있다. 올해 2월, 미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인 애니타 프리드는 “지난해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으며, 이런 성공을 토대로 한미일의 삼각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방한한 마틴 템프시 미 합참의장은 “아태지역에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우리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 구매에 일부 약속을 했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3.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의 문제

한국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일본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일본이 그 초기부터 미국 MD에의 참가를 선언하고 공동 MD를 추진한 반면 한국은 미국 MD에의 참여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MD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소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가 그것이다. KAMD의 개념이 처음 언급된 것은 앞서 기술한대로 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부시정부가 한국에 MD 참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던 2001년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였다. 당시, 김대중정부의 KAMD 구상은 천문학적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상층방어 위주의 미국 MD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북한과 중국의 반대가 불을 보듯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의 강한 MD 참여 공세를 막아낼 대안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구상으로만 존재하던 KAMD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2월, 국방부가 북의 미사일 탐지·요격 임무를 전담할 탄도유도탄미사일 작전통제소(AMD-Cell) 구축을 2012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명시하면서부터다. 박근혜정부 들어 KAMD는 보다 구체화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다음해인 2013년 10월 건군 65주년 기념사를 통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 등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을 발표했다. 이어 2014년 11월, 정부는 KAMD의 핵심 구성요소라 언급해 온 패트리엇 미사일(PAC-3) 136기의 도입을 결정했으며 2015년 4월,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 킬 체인과 KAMD 구축 예산으로 8조 7천억원을 배정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대단히 공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KAMD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킬 체인(Kill Chain)이 그것인데, 킬 체인은 북한이 핵,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한국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으로 탐지(find)-식별(fix)-판단·결심(target)-무장운용·타격(engage)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탐지(find)

단계에서는, 정보위성·무인정찰기 등 정찰자산을 이용해 표적을 발견한다. 이때 주된 표적에는 미사일 발사대나 북 지휘부까지 포함된다. 식별(fix)단계에서는 탐지된 표적의 정확한 좌표를 찾아 추적하여 놓치지 않도록 한다. 판단·결심(target)단계에서는 탐지·식별된 표적에 대한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상·해상·공중의 모든 타격수단 중 어떤 것을 사용할 지 판단하고 대통령, 국방부장관과 같은 교전승인권자의 승인을 획득한다. 무장운용·타격(engage)단계에서는 판단된 타격자산을 통해 표적을 타격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재공격 여부를 판단한다.²³⁾ 군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30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킬 체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은 이와 같은 킬 체인을 2016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로 언급한 ‘2016~2020 국방중기계획’에 6조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인 KAMD 구축에 배정한 2조 7천억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이다.



<킬 체인 개념도>

사실상 킬 체인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는 시한성(時限性) 표적에 대해 탐지(Find)-식별(Fix)-추적(Track)-결심(Target)-교전(Engage)-평가(Assess)라고 하는 미 공군의 역동적인 표적 처리절차(Dynamic Targeting Step)에 대한 별칭이며 'F2T2EA'라 일컫는다.²⁴⁾ 미 공군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이동식 스커드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기 위해 이 개념을 구상하고 연습해왔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킬 체인이 명백한 선제공격전략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 상으로 볼 때 적극방어를 넘어선 '공격작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세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해당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공격적 판단과 그에 따른 선제공격은 전쟁의 가능성을 전쟁으로 현실화 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다.

23) 권혁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킬체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정책연구 2013년 가을, 36~38p)

24) 권혁철 [상계서] (35p)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역시 미국 MD 참여의 주요한 통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4월, 앞서 언급한대로 미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 브래들리 로버츠가 한미간에 공동 MD에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발언하자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그것은 KAMD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약정의 당사자인 미 미사일 방어국의 패트릭 오라일국장은 “우리는 전 세계 20여개국과 미사일 방어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그 중 하나”라고 밝힘으로써 한미 간의 협의가 KAMD에 국한된 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해 10월 한미는 미사일 대응 능력위원회(CMCC)를 구성하는데 합의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정보공유와 가용자산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KAMD를 매개로 한 한·미 간의 MD 협력이 공동 연구단계에서 공동 운용단계로 진전되었음을 의미했다. 2012년 6월, 한·미 군당국은 오산에 구축될 한국군의 대 탄도미사일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미사일 요격통제소를 연동해 그동안 별개로 추진해왔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구미사일 방어체계(TMD)를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미 간의 MD 협력을 무기체계의 공동 운용으로까지 진전시켰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MD로 편입되는 또 하나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KAMD를 지지하는 국내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한결 같이 KAMD를 추구하더라도 지휘통제체제나 정보통신 및 감시체제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MD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²⁵⁾

4. 한국의 미국 MD 참여, 동북아 군비증강과 신냉전의 도화선

한국의 미국 MD 참여 문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짚어져야 할 문제는 주변국들의 반응, 특히 중국의 입장과 태도이다. 이는 언급한대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MD 체제 구축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은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0년대 대만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미군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진입한 이래 명시적·잠재적 적대국이 자신의 세력권 내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반접근·지역거부전략(Anti-Access/Area Denial, A2AD)을 채택했다. 미국의 안보전략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2AD전략은 미 해군의 항모 차단 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항공기, 미사일, 잠수함 등 중장거리 타격무기체계를 동원한 공격능력 구비하고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해외 미군기지의 기습·무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

25) 정철호 [미국의 동북아 MD정책과 한국의 KAMD전략 발전방향] (세종정책연구 2013-6, 33~35p)

고 있다고 적시했다.²⁶⁾ 이에 중국은 미국의 MD 체제 구축이 A2AD 전략의 핵심인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중국의 역지력을 훼손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미·일·한, 한·미·간 MD 체제의 진전에 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미 하원이 국방수권법에 한미일 미사일 협력 강화 방안 수립을 입안하고 미 국방부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지조사를 마쳤다는 보도가 있자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해가 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며 중국 관영 신화통신(新華通訊)은 “사드를 한국이 받아들일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이 시스템은 한반도 정세의 경호원이 아닌 뇌관이 될 것”이라고 논평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난해 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이 가시화되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상호 대화와 신뢰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라며, 그 반대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발언해 완곡한 우려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인터넷 사이트인 환구망(環球網)을 통해 “미·일·한 군사정보공유약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미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북한을 만만한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며 “결국 미·일·한 동맹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고 이는 중국에 불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논조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미국 MD 참여 그리고 미일 MD의 강화가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 사안이 동북아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과 전반적인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2월, 미일은 미사일 요격용 레이더인 X-밴드레이더를 일본 교토의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하고 이듬해 6월 이 장비들을 운용하기 위한 MD 지휘통제시스템인 C2BMC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올해 4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에 즈음하여 5조 규모의 미국 무기를 대거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MD 체제로 운용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3월, 1조 6천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PAC-3) 도입과 성능개량사업을 결정했으며 1개 포대 당 2조 규모의 사드마저 도입 여부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속도가 마하 10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인정했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18개월간 극초음속 비행체를 모두 4차례 실험했고, 이 실험이 다른 국가나 특정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상하이정법학원의 허치쑹(何奇松) 국방정책 전문가는 “WU-14(이 비행체를 지칭)는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으려고 설계됐다”고 밝힘으로써 중국 역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기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6) Entering the Dragons's Lair, 2007

이렇듯 각국의 MD 관련 무기체계의 도입 및 개발이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군비증강의 또 하나의 원인임은 분명하다.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MD 예산은 총 86억 8850만 달러(한화 약 9조 2000억원)로 미 국방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3억 달러가 증액된 것으로 재정적자로 국방비 삭감 요구에 직면한 미국으로서는 이례적인 증액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역시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에 오고 있다. 올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국방예산을 8890억위안(한화 약 155조 3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국방비 5,340억 달러(한화 약 624조원 / 2015년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지만 전년 대비 10% 증액된 금액이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강시키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이후 국방비를 감축해 왔으나 아베 신조 총리 집권 뒤 3년 연속 증액해 4조 8994억엔(한화 약 44조 9500억원 / 2015년 기준)에 이르렀다. 한국도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40조 1395억원을 제출해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 40조 시대를 예고했는데 여기에는 KAMD와 쉴드 체인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70% 늘어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한·중·일의 국방비 증가는 2012년부터 환산했을 경우 아시아에서 증가한 국방비의 5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MD 체제 구축이 가져오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MD에 대응하기 위한 중·러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냉전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러시아는 2002년, 미국이 ABM조약을 파기하고 자국에 대한 MD 배치를 넘어 동유럽에 MD 배치를 추진하자 이를 심각한 핵안보 위협 요인 또는 전략적 불안정 요인으로 규정하고 유럽에서의 미국의 독자적 MD 체제 구축에 강력히 반대해왔다.²⁷⁾ 최근 들어 러시아는 이를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까지 옮기고 있는데 2013년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뚫는 신형 ICBM을 전략미사일군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 3월, 미국이 폴란드에서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 계획을 공개하고 나토가 발트해 연안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러시아는 45,000명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맞불을 놓았다. 러시아는 유럽의 미국 MD 체제 뿐 아니라 한국의 MD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작년 7월,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MD 시스템의 한반도 전개는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따라 동북아 MD가 본격화하자 중·러는 이에 대응하며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올 5월, 처음으로 열린 중·러 동북아 안보대화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러 관계를 전면적인 전략 협력 동반자관계로 설정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새로운 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27) 고재남 [상계서] (96p)

중·러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MD를 지칭하며 “일방적으로 전 지구적 범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국제 정세의 안정에 유리하지 않고 국제 안보도 손상시킬 것”이며 “다른 나라 안보의 희생에 의지해 자기 나라 및 집단의 안보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MD 구축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러는 사상 처음으로 흑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 열병식에서는 이례적으로 중국군이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며 양국간 군사 협력 강화를 과시했다.

IV. 결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 2008년 모기지론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쇠퇴 일로로 들어서자 등장했던 대외정책과 관련한 축소론과 개입론의 논쟁에서 개입론의 승리가 귀결한 미국의 새로운 세계패권전략이다. 최근 미국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곤 하지만 급 부상하는 중국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주도해 성립시킨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는 미국의 공개적인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한 50여개국이 대거 참여하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라는 미국의 위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²⁸⁾ 이에 맞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내세워 만회하려 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으며 최근 12개 당사국 각료회의가 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조급증은 군사적 부분으로 집중되고 있다. 올해 4월, 오산 미공군기지를 찾은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군사력이 이곳 전구(戰區)에 투입될 것”이라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인 군사력 배치로 이어지고 있는데, 7월 3일자 ‘미국의 소리’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병력이 24만 4000명에서 26만 6000명으로 증가했으며 해병대 항공기는 416대에서 630대로, 해군항공기는 1056대에서 1111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은 아시아에서 주요한 군사적 파트너인 일본, 호주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천명했으며 최근 미일 안보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력 행사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시켰다. 나아가 미국은 아베정부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행보로 인해 첨예한 갈등에 빠진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며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과거사 문제로 인해

28) AIIB에 예상 밖으로 많은 나라들이 가입하자 영국 유력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는 2015년 3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중국의 돈 자석이 미국 우방을 끌어당기고 있다”며 “AIIB 출범은 21세기 미중 권력이동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역시 AIIB에서의 승리에 대해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입장을 바꾼 것은 중국의 굴기(부상)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AIIB 경쟁에서 미국을 이겼다”며 노골적으로 승전고를 울렸다.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동맹이 지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태도이며 그 핵심에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MD체제의 구축이 자리하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MD 체제 구축과 강화는 살펴본 바대로 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냉전구도를 형성시키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 등과 소원한 상태이긴 하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MD에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일의 MD 체제가 진전되고 중·러와의 군사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 및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형성시키면서 이전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의 항상화와 분단의 공고화를 초래하는 한편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보론> - 사드(THAAD),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문제들

본문에서 언급했다시피,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미국 MD에 대한 직접적 참여의 방식은 사드(THAAD)라고 하는 구체적인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의 도입 여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사드란 어떤 무기체계이며 관련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요격 단계별로 분류할 때 종말단계 상층 방어를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이다. 요격 범위는 지상으로부터 40km~150km 사이이며 PAC-3와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요격하는 방식(hit to kill)을 채용하고 있다.



<THAAD 재원 및 레이더 탐지 범위>

사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첫 번째 논란은 이 무기체계가 한반도 지형을 고려할 때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 본토나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권 안팎의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제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 중심거리가 짧아 만약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가 요격할만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보유 미사일의 제원²⁹⁾을 살펴보면 북이 남한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인 스커드B 미사일과 500km인 스커드C 미사일 정도를 거론해 볼 수 있다. 이때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긴 스커드C의 경우 최고 고도가 140km라는 점을 감안하고 종말단계 미사일이 낙하할 때는 그 속도가 마하 8에 이른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드가 최고 고도에서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스커드C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51초밖에 되지 않는다.³⁰⁾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둔 듯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북한이 사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최고 고도 160km까지 높여 사거리가 600km가 되도록 고각(高角) 발사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미사일 공격 방식은 타격 정밀도를 형편없이 낮춘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으며 미사일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굳이 각도를 높이고 체공시간을 길게 해 노출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사일 방어 무기로써 사드 자체에 대한 한미 당국의 부정적 판단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5월, 진성준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은 2013년 국방부가 미국의 사드 포대를 시찰하고 실시한 운용평가서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배치 시뮬레이션 확인 결과 사드는 고도 30~200km, 사거리 250km 고고도 탄도탄 방어용으로 대구·부산 지역에 배치시 스커드 B, C 노동미사일급 방어에 적합, 수도권 위협 탄도탄(사거리 100km 급인 KN-02 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미제시’라고 적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드가 서울 등 수도권 방어에는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지난 7월에는 미국의 전직 관료도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미 국방부가 무기의 생산과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그 최종적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인 미 국방부 운용시험평가국에서 근무한 필립 코일 전 국장은 미 미사일 방어청(MDA)이 아홉 차례의 사드 요격 시험에서 성공했다는 발표와 관련하여 “그런 시험들도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등 다른 미사일을 포획하지 못한다”며 “북한의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나선형으로 떨어질 수 있어 요격하기 어려운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9) 북한 보유 미사일 종류와 제원

구 분	SCUD-B	SCUD-C	노 동	무수단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신형 미사일
사거리 (km)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10,000	미상
탄두중량(kg)	1,000	700	700	650	500	650~1,000(추정)	미상
비 고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작전 배치	시험 발사	개발 중	개발 중

(출처:2014' 국방백서)

30) 최고 고도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 140km를 마하 8의 속도(2.72km/sec)로 나눈 수치이다.

사드와 관련한 또 하나의 논란은 이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AN/TPY-2(X-밴드 레이더)의 탐지범위 및 목적과 관련한 것이다. AN/TPY-2 레이더는 2만 5천여개의 작은 송수신기를 평면에 정렬한 위상배열레이더로 종말단계탐지방식과 전진배치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우선 종말단계 탐지 방식(Terminal Based Mode)으로 운용될 경우, 약 1,000km에서 상승 중인 탄도미사일을 감지해 600여 km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으며 전진 배치 방식(Forward Based Mode)으로 운용될 경우, 중거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데 최대 탐지거리는 1,800~2,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AN/TPY-2의 광범위한 탐지 범위 안에 중국 전역이 들어가는 점을 들어 이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한·미 군당국은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종말단계 요격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탐지거리는 600~1,000km 밖에 안되며 종말단계용에서 전진배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 레이더로 중국을 감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한미 군당국의 주장을 뒤집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올 2월, 미 국방부가 공개한 ‘미사일 방어청 2012년 예산 추계보고서’에는 “이 레이더(AN/TPY-2)는 이동이 가능해서 위협의 지리적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뒤 “각 레이더는 종말단계모드 또는 전진배치모드로 설정이 가능하고 두 모드는 8시간 안에 전환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또 다른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미사일 방어체계를 수십 년간 연구해 온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MIT, 과학·기술·국가안보정책 담당)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동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 “이 레이더(AN/TPY-2)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미국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향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상단 추진체를 충분한 시간 동안 탐지할 수 있으며 미사일이 한반도 북쪽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3,000~4,000km의 거리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의 조기경보레이더와 연동될 경우 지금보다 더 원거리에서부터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³¹⁾ 이어 포스톨교수는 “사드레이더의 이러한 능력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원하는 부속물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이유로) 중국은 이 레이더를 중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게 될 것임은 분명하며 한국을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1) (단독) “사드, 중국발 미사일 3000km 이상 탐지…중국에 위협” [한겨레신문, 2015년 6월 1일자 보도]



일미 MD 전개과정과 동아시아의 평화 -미군X밴드 레이더와 주일미군, 동아시아

오오완 무네노리 (大灣 宗則) / 미군X밴드 레이더 기지반대 교토·긴키 연락회

‘미군X밴드 레이더 기지반대·교토(京都)/긴키(近畿) 연락회’의 공동대표 오오완 무네노리라고 합니다. 심포지엄에 초대해주셔서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MD 전개 과정과 동아시아의 평화 -미군X밴드 레이더³²⁾와 주일미군, 동아시아>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특히, 왜 일본정부가 이렇게도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헤노코(邊野古) 신기지 건설, 원전 재가동을 고집하는 것인지, 이것이 교토부(京都府) 교단고(京丹後) 지역의 미군 X밴드 레이더의 배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교토부(京都府) 교단고(京丹後) 우가와(宇川)지구와는 어떤 곳인가?

미군 X밴드 레이더가 강행 배치된 겨우가미사키 우가와(宇川) 지구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국정공원 안에 있어서 경치와 환경이 좋고, 멸종위기종인 매를 비롯해, 일본에 얼마 안 남아있는 생물종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나 어린이는 적고 노인이 많은, 불과 17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도에서 보면 X밴드 레이더기지가 배치된 바로 오른쪽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등이 근거지로 삼는 마이즈루 군항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원전 긴자라고 말해질 만큼 많은 (간사이 전력 소유의) 원전이 있으며, 마이즈루 군항의 위아래로 후쿠치야마 육상 자위대기지, 그 위아래의 시가현 다카시마시에 아이바노 자위대연습장이 있습니다. 우지시나 교토시 남구 가투라에는 자위대 병참기지가 있습니다. 앞에 열거한 X밴드 레이더, 마이즈루 군항, 후쿠치야마 육상자위대, 아이바노 군사연습장, 가투라나 우지의 병참기지를 이으면, 일본해(東海)를 향한 최대의 군사요새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역자 주: 사드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고도 40 ~ 150km 상공에서 요격한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미사일 발사대와 1기당 8발씩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미사일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최첨단 레이더로, 사드는 최첨단 X-밴드 레이더를 통해 적 탄도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비롯하여 미사일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X밴드 레이더 배치의 경과

2012년, 오바마 대통령과 당시의 민주당 내각의 노다 수상은 일본 아오모리의 쓰가루 자위 대기지에 이어서 두 번째의 미군X밴드 레이더기지를 일본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장소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2월,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수상 회담을 통해 두 번째의 미군X밴드 레이더기지 배치는 교토부 교탄고시의 우가와지구, 아나몬주가 있는 항공자위대 겨우가미사키 기지로 합의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인접한 토지를 새롭게 임차하여 기지를 확장·배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 방위 및 지역의 활성화 및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다'면서, '토지 임대가격을 평소 가격의 37배로(보통 1단 8,000엔의 곳을 300,000엔으로) 지급' '해당 지역인 교탄고 시에 미군 재편 교부금으로 매년 3억 엔(10년 기한으로 30억 엔) 지급' 등을 혜택으로 내세웠고 이것을 교토부(京都府)에서 추진, 정부·방위성이 주민에게 "책임지고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선전하며 무리하게 기지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14년의 5월에는 기지건설을 착공하였고, 10월에는 X밴드 레이더 반입, 12월 말에는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은 개시되었다!

물론 현지에서도, 교토시에 사는 우리들이나 긴키의 사람들에게서도 반대인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현지에서는 '미군기지 건설을 우려하는 우가와 유지의 모임'(이하 유지의 모임), 교토부에는 '미군X밴드 레이더 기지반대 교토 연합회'(교토 연합회), 긴키에는 '긴키 연합회'가 결성되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지건설에 대하여 2013년, 현지 '유지의 모임' 사람들이 실시한 반대 서명으로 주민의 과반수인 1000명 이상이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실제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으며, 우리들은 고령으로 미래가 없다"라고 하고, 마을의 장래에 대해서는 "정부에 반대할 수 없다, 기지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깊은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토 단고에 미군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이, 현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 일본의 전쟁 정책을 가속화하여 헤노코(邊野古)에 신기지 건설의 구실이 되고 있기에 레이더 반대·철거 투쟁을 오늘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현지피해와 현실 -방위성의 정치적 사기행위,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를 수용하겠다고 표명하면서 토지를 차용하고, 기지 건설에 착수, X밴드 레이더의 본체반입, 운전을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방위성은, "주민 안심, 안전 확보, 정중한 설명과 문제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주민에게 약속해 왔습니다. 결과는 모두 방위성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정치적 사기행위입니다.

오키나와 전쟁을 통해 군대가 주민을 지키지 않는다고 들어왔습니다만, 70년 전 상황만이 아니고, 겨우가미사키의 우가와에 가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 국가의 본질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정확히 하지 않고, 멸종위기종 매의 서식 조사도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는 레이더 기지 특유의 외관으로 절단이 났습니다. 24시간 레이더 가동에 의한 소음과 저주파 소리에 의한 건강피해(두통, 귀 울림, 현기증, 구역질, 유아가 젖을 먹지 않는 등), 160명의 군인·군속의 배치에 의해 사건·사고는 운용 시작 불과 2개월 만에 16건, 현재 18건, 그 중 17건은 '공무중'의 사건이라 일본의 사법과 경찰권은 배제되었습니다.

그 현장뿐만 아니라 교토부나 긴키에서도 설명회를 요구했습니다만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삼 방위성, 교탄고시에 항의했지만, 정부·방위성은 '안보·방위·외교는 나라의 관할사항' '일미지위협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들의 기본방침

우리들은 ①환경·경관이라고 하는 자연은 사람들의 공유재산이며, ②안보·방위·외교가 나라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오키나와의 싸움을 교훈으로 "바다도 하늘도 이 대지도 그곳에 사는 주권자의 것이다", ③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일미 지위협정을 개정해라, ④ 알 권리의 보장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라, 민주주의과괴는 허용하지 않는다, ⑤ '미군X밴드 레이더는 일본 방위 때문'이라고 하는 방위성의 주장에 반론하고, 이 레이더는, 미군·관 기지 방위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행사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항의해 왔습니다.

현지투쟁의 의의와 '교토(京都)/긴키(近畿) 연락회'의 활동

미군X밴드 레이더 기지반대·철거의 싸움은, 현지의 주권자 싸움을 개간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가 싸움의 주체로 나가는 것, 동시에 동아시아의 긴장 격화를 저지해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긴키 연락회'에서는 건설 착공과 레이더 반입에 대하여 각각 400명의 사람들이 기지건설 현장과 게이트 앞에서 시위와 행진 등의 항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 '유지의 모임' 호소에 응해서 초당파에서 두 번에 걸쳐서 800~1000 여 명의 현지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교토 연락회'는 독자적으로 매월 2회, 현지 우가와지구 1,700명을 대상으로 각호 방문 활동을 하여 투쟁 뉴스를 배포하고, 주민과 대화하면서 싸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밖에 교토 및 긴키 각지에서 보고회, 팸플릿 및 회보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활동을 통해, 우가와 뿐만 아니라, 교탄고시의 미네야마, 이네초, 아미노초, 미야즈시 등에서 현지 투쟁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향 조사를 거치지 않고 약 60명의 군속(슈네가사)들의 공동주택 건설이

X밴드 레이더 건설 예정지이었던 토지소유자가 토지임대 계약을 거부하고, 우리들 '긴키 연합회'의 입간판을 세우도록 토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X밴드 레이더 기지 배치가 초래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긴장 격화

미군X밴드 레이더 기지 배치는, 현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과의 정치적·군사적 긴장 관계를 한층 악화시켜, 군비 확장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언제부터 MD(미사일 방위)에 열을 올렸는가?

경과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은 2006년, 2009년에, 미사일 발사 실험은 1993년, 1998년, 2006년, 200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북한에서 대포동 1호가 발사되고 1999년에는 인공위성 로켓 은하2가 발사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방위성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2003년 12월 19일, 안전보장회의 및 임시내각회의를 열고, ‘일본판 탄도미사일 방위(BMD)’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2004년도부터 매년 1,000억 엔에서 2,0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사일 방위 체제의 구축과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중국에서도 군사비를 증강하고 해양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비 증대와 해양진출 및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위협이라고 선전하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6년, 아오모리 쓰가루 자위대기지에 일본에서 최초로 X밴드 레이더를 배치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MD전개

2015년도 방위 백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져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탄도 미사일 방위(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시스템의 정비를 시작했다. 2005년에는 자위대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안전보장 회의와 내각회의를 통해 탄도 미사일 방위용 능력향상형 요격미사일의 일미공동개발에 착수하는 것을 결정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MD전략은, 그 구체적 배치는, PAC-3, SM-3, GMD 및 레이더망의 정비를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또 이지스함을 6척 보유, SM-3은 32발 보유. PAC-3 약 200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방위성·자위대는 이지스함에 대해서 아타고형 2척에의 BMD능력의 부여를 계속하는 동시에, BMD능력을 소유하는 이지스함 2척을 늘려 총 8척을 보유할 태세입니다. 또, 모든 6개 고사군에 패트리엇 PAC-3을 2015년도까지 배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의 탐지·추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경계 관제 시스템의 능력향상이나

FPS-710 고정식 경계 관제 레이더의 정비 및 능력향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일본 독자적 MD체제 정비 이외에, 「미국 보유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일부가, 우리나라에 단계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 샤리키(車力)통신소에 TPY-2 레이더 (소위 X밴드·레이더)가, 같은 해 12월 이후, BMD능력탑재 이지스함이 우리나라 및 그 주변에 전방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오키나와 현의 가데나 비행장 등에 패트리엇 PAC-3을, 07년10월에는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비행장에 통합 전술지상 스테이션(JTAGS: Joint Tactical Ground Station)을 배치했습니다. 게다가, 교단고(京丹後)로 TPY-2레이더(X밴드 레이더)추가 배치가 결정되고, 14년4월에 레이더 반입, 12월에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미 제7함대에는 이지스함이 9척 있어, 모두 SM-3탑재. 제일 미육군도 PAC-3을 배치(384발). 이것에 더해, 유사시에는 미 본토에서 THAAD를 포함한 증원 부대가 파견됩니다. 일본의 탄도 미사일 요격 태세는 세계에서 톱 클래스입니다” (방위 백서).

일본의 MD강화의 이유 미국의 군사전략의 전환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막다른모로부터 미국의 군사전략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 테러 전략과 아시아 회귀에 대표됩니다. 이 전략의 기축은, 미국의 경제패권의 유지·확대이며, 이것에 따른 군사전략의 재편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우주에서의 군사전략은 여기에서는 생략합니다)

미국의 경제패권의 표어는 ‘글로벌리즘(자유 무역)’입니다. 그렇기에 자유 무역을 기대하는 반체제파(우크라이나나 시리아 반정부세력)에게는 원조하지만, 자유 무역에 반대하는 반체제세력(IS이슬람국)이나, 자유 무역을 거부하는 정부(시리아 세력)를 군사적으로 공격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그룹이나 나라와는 사이 좋게 지내고, 자유 무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이나 나라는 파괴·억압하는 군사적 행동 규범을 보입니다. 이것들을 대 테러전으로서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병기체계는, 해병대 스타일이며, 오스프리나 강습양력함, 헬리항모(aircraft carrier), 수륙양용 전투구동차 등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권익확대, 그 때문에 중국, 북한, 이란 등 국가 간 전쟁을 진척시키는 군사적 긴장 만들기도 진행됩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병기체계가 핵개발, 탄도탄이나 MD개발 경쟁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가지는 2개의 요소(대 테러와 아시아 회귀)는 자유 무역 체제를 지키고, 경제 권익의 확대를 도모할뿐 아니라 상시 국가 간의 전쟁의 위기를 연출하면서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통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재정악화에 의해 군사비 삭감을 요구받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해서 유지연합 간의 군사적 공동 작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작전은, 병기의 통일, 공동 생산, 무

기타의 통일, 지휘·정보의 일원화, 군사기지의 공동 사용 등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작전 방식은 연습비용의 분담제에 의한 경비의 삭감과 통일 규격의 병기 판매 등으로 미국의 이익에 연결되고, 동시에 미국병사의 사망자를 적게 하고, 자국의 반전 운동을 억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국 지배자는, 맹주 미국과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이라고 하는 기본가치를 공유한다 (사실상 시장 경제·자본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각각의 역량, 잘하는 분야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적 자위권의 핵심입니다.

왜, 일본정부는 MD(미사일 방위)에 적극적인 것인가?

1. 이웃나라에의 군사적 도발과 국내통합

MD배치는, 통상 MD(미사일 방어)라는 명칭으로 방위적인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선제공격 후, 가상의 적이 보복해 오는 것에 대응한 MD(미사일 방위)입니다. 왜냐하면, 선제공격은 보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전력으로 선제공격을 하면 살아남은 적의 약한 반격에 MD는 효과적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선제공격·전략병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설득이 필요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외적인 군사적 긴장 관계를 연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없으면 국민적인 합의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국, 북한, 이란에 대해 일본정부가 도발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는 이유이며 중국이나 북한이 한층 더 군사적 확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일본의 핵무장 능력의 보유와 억지력

일본이 왜 원전 재가동을 원하는 것인가? 이것도 MD와 관계가 있습니다. 재가동을 하지 않은 채로는, 원전수출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국에 패배합니다. 또, 원전 재가동은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원폭제조에 필수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H2로켓의 개발 및 로켓의 비행 거리, 기체의 내열·내진, 위성궤도에 실는 기기조정 기술도 세계수준으로, 남은 과제는 원폭의 소형화입니다. 현재의 정책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헌법해석까지 바꾸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단행하는 아베 정권을 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이미 우주기본법의 개악으로 우주의 안전보장의 법 정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기타, H2로켓의 개선은 조기경계 위성을 독자개발해 보유하는 목적이 보입니다. 일본의 기술수준이라면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루토늄·U2로켓 핵무장·핵 탄도개발 능력의 유지가 가상 적에게 대한 공격력·억지력이 되는 것이라고 국민을 납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수출 금지를 해제한 일본정부는, 비밀보호법으로 국민의 이목을 막으면서 산학관군의

체제로 무기의 독자개발, 공동 개발, 무기 수출을 진척시키고, 일본의 군수산업,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죽음의 상인(무기 제조업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아베(安倍) 내각의 배외(排外)주의적 도발의 의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영토(센카쿠 제도, 독도(타케시마)), 교과서 등 역사 인식에 있어서 아베는 배타적이고 도발적입니다. 이것은 아베의 개인적 성격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전략수행의 수단입니다.

4. 일본정부는 중국, 북한과의 국가 간의 전쟁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을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아시아(세계)전략 속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의 아시아 전략과 병기체계

겨우가미사키에의 미군X밴드 레이더 배치, 헌법위반의 안보법제안의 강행채결, 그리고 헤노코에 신기지건설 강행, 원전 재가동이라고 하는 이 4개는 일본 지배층의 아시아 전략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아시아 전략, 그것은 일본 독점자본에 의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기업 및 자본의 확대, 이 자본·기업의 경제권의 확대와 방위이며, 그것을 보장하는 군사병기체계의 정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및 기타 모든 국가는, 현대세계의 경제상태가 역사적인 파탄의 위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은 세계의 국가지배층들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에 직면하고, 동맹을 잇고, 공동으로 자국과 해외에서 인민의 반정부투쟁을 억압하는 전쟁의 준비입니다. 일본정부의 안보법안의 강행채결은, 헌법 9조의 해석을 바꾸고, 일본도 해외파병을 해서 타국과 공동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헌법위반의 해외파병입니다. 이 해외파병의 출격 거점이야말로 헤노코의 신기지 건설입니다.

왜 아베내각은 집단적 자위권·해외파병의 법정비를 서두르는 것인가?

작년 7월1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과, 동시에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시작하는 내각회의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중국의 해양진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위협, (이러한) 안전보장 관계의 국제적 변화 아래에서 일국에서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집단적 자위권이다', '위험한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과 역지력의 확보,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원칙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는 속셈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어떠한 사태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을지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째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해외권익입니다. 2015년 환경제산업성의 백서에 의하면 아시아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은, 중국·ASEAN에 약 30,000개, 남서아시아·중동·러시아·CIS·중남미에 약 3,000개, 아프리카에 약 500개라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에는 세계에서 투자되고 있는 자본의 약60%이상이 일본 자본입니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 업체에서 일하는 현지의 노동자 열악한 노동조건, 차별적인 노무관리(일본 본국의 비정규노동자 2,000만 명의 실태와 그 이하로 노동하고 있는 아시아의 노동자 실태를 상기할 것)는 도처에서 노동 쟁의, 때로는 폭동으로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 독점자본의 권익이 위협되고 있는 것의 위기감이, 아시아 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해외파병, 출격 거점으로서의 해노코 신기지 건설 강행이며, 아베 내각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전쟁 법안의 강행채결 배경입니다.

물론, 일본정부는 ‘안보법제=해외파병’이라고 것을 ‘아시아에서의 일본 기업의 권익·인명 보호’의 의도를 국민에게 명백하게 표명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전면에 내서 안보법제에의 국민의 동의를 얻어, 아시아 인민억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신당이 전쟁 법안의 일부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의 중동원유 도입로 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그만두게 할 목적의) 경제적 이유로 집단적 자위권행사(해외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민당·공명당·유신당은 협의를 하였지만, 자민당·공명당은 수정안을 승인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기뢰철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아시아 및 기타 전 세계에서 일본의 경제권익을 위협하는 노동 쟁의, 반정부 투쟁이 일어났을 때,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일본의 해외파병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자본가 계급은 체제위기를 예감해서 (집단적 자위권)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자본의 국제경쟁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와 지배의 국제경쟁을 의미하고 있어, 이 표어야말로 생산성 향상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자간의 경쟁과 대립이 일어나고, 격차, 차별과 빈곤, 평화와 인권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국적 자본 아래에서 일하는 현지노동자의 자본가에게 대한 반역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자본가계급 공통의 눈으로부터 보면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그것을 자각하고 있지 않기에, 자본가계급이 집단적 자위권을 서두르고 있는 참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위대가 조달하고 있는 병기체계와 그 목적

현재, 일본정부가 조달하고 있는 병기체계로부터 일본의 아시아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2014년의 중기 방위 계획(5년 계획)로 25조 엔을 확보했습니다. 이 25조엔

안에서 이미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으로 자위대가 조달하고 있는 병기는 d 오스프리(17기),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 수륙양용 전투구동차, F35스텔스 전투기, 강습 양력함, 이외에 국산 헬리 항모(aircraft carrier)형 호위함·이즈모(出雲)와 고성능 잠수함 등입니다. 이 병기는 현대의 핵이나 미사일 보유국끼리의 국가 간 전쟁으로 사용하는 병기가 아닙니다. 이 병기체계는 해군 해병대 기준입니다. 이것들 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①적대국 또는 적대 세력이 제해권·제공권을 다투는 병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미국이 간 이라크 전쟁 또는 아프간 전쟁), ②내전상태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자유 무역 세력(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 또는 세력)로부터 요청과 동의를 얻고, 그 나라의 영공·영해·영토에 해외파병 할 때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 월남전쟁, 현재의 시리아에 있어서의 반체제파 지원 등).

국회에 있어서의 「안보법제논의」는 표적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

군무기 조달로 일본의 자위대를 해병대 기준의 군대로 변화시키면서, 아베 정권은, 중국·북한을 ‘가상의 적’처럼 여기고 국가간 전쟁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국민의 관심을 끄는 트릭입니다.

핵이나 미사일 병기를 가진 미국이나 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돌아서 국가간 바다, 상공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양쪽 모두 전멸을 각오하지 않고는 결단내릴 수 없습니다. 만일 전쟁이 시작되면 양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생물이 생존 불가능한 사태가 됩니다.

미중, 일중 등 ‘가상의 적’ 들은 금융, 무역 등 경제적 상호의존이 긴밀한 상황이기에 국가간의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바다나 공중에서 부분적으로 군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한들, 그것은 각각의 국가에 있어서의 애국적 내셔널리즘을 부채질 하고, 국내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연출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MD군비 확장 경쟁은 사실은 그 군사적 필요보다도 경제적 욕망으로부터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국가는, 서로 의존하면서도 항상 전쟁의 위기 상태를 선동하는 것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모순 속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시키는 전쟁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과 헤노코 신기지의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헤노코에 만들어지려고 하는 신기지는 오스프리 기지이며, 수륙양용 전투구동차가 상주하고, 헬리 항모(aircraft carrier), 강습양륙함을 접안할 수 있는 군항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신기지 건설이 만들어지는 캠프슈와부 옆에는 해군 해병대 훈련 기지인 캠프 한센이 있어 헤노코 탄약고나 야에다케 에 미군통신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노코 신기지는 오스프리를 위한 종합적인 기지입니다. 정부는 헤노코의 신기지 건설이 일본 방위의 억지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오스프리 기지가 국가 간의 전쟁 때문인지, 권익옹호의 아시아 인민억압 기지인지를 점검해 봅시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국가 간 전쟁 목적이 아니기에 억지력이 될 수 없고, 분

명 히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를 향한 경제권의 옹호 목적의 출격의 거점입니다.

다시 한 번 해노코 신기지 건설의 개요를 생각해주세요!

먼저 오스프리에 대해 검토합니다. 오스프리는 추락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인구 밀집지에서 훈련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무기로서 오스프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스프리는 수직이착륙기이기 때문에 활주로나 필요하지 않고, 사막·정글·산악·시가전에 알맞은 병기입니다. 이 오스프리의 비행은 상대국의 동의를 받고 제해권·제공권이 확보될 때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수륙양용 전투구동차와 해병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국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영해·영공·영토에 침입하면 상대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침략이 되고 '유엔헌장 위반'이 됩니다.

해노코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강습양륙함이나 헬리 항모도 접근할 수 있는 군항이 설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수륙양용 전투구동차나 오스프리를 운반하는 함선이며, 이것들 전체의 병기체계는, 아시아에서 예상되는 반정부인민투쟁의 진압 부대의 병기체계입니다. 해노코 신기지건설 반대 싸움에 국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쟁법안, 해노코 새기지건설과 교단고 X밴드 레이더 기지배치의 관계

이상과 같이 아베 정권의 군사전략은 한편으로는 MD도입이나 로켓 개발, 원전 재가동 등 국가 간의 전쟁을 대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전쟁 법제의 성립과 해노코 신기지 건설임이 명확합니다.

이 군사전략실현을 위해서,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애국적 배타주의입니다. 야수꾸니, 위안부, 교과서, 영토 문제 등의 역사문제의 대립을 부채질 하고, 패트리엇나 X밴드 레이더 미사일 방위(MD)등에 의해, 중국과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위협을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 기지의 역할은 괌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캐치하고, 그것을 일미 공유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으로 요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사람들은 느낍니다. 이 작전이 실행되면 틀림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 레이더 기지의 역할은 집단적 자위권에 의한 핵전쟁의 전선기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 괌 기지를 공격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 북한이 군사대국인 미국에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그럴 능력도 미국과의 경제적 갈등도 없습니다.

아베는, 만일 일본해로 항행중인 미군함선에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서 미군 지원을 위해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만큼 어리석은 논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요코스카에 미 제7함대가 있어, 일본해에 미군 이지스함 등이 기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즈루를 모항으로 하는 일본의 이지스함도 일본해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 전면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선제 공격을 예상하는 국회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미군이 자력으로 응전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고 일본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베 수상의 논리를 겨우가미사키의 X밴드 레이더에 적용해 봅시다. 만일 북한이 선제공격 미사일을 미군 괌에 발사한다면 북한 지휘관은 그에 대한 보복을 예상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시킬까요? 그럼에도 만약 괌이 목표라 우선 겨우가미사키의 레이더를 공격한 후에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닐까? 보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보복해 오는 미군의 오키나와, 일본, 한국 등의 군사기지도 애초에 목표로 삼아서, 괌 기지 공격과 동시에, 또는 그 보다 앞서 공격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쨌든 북한의 미군 괌 기지에의 선제공격은 비현실적이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중전이 일어났을 경우 이 지구와 함께 우리 모두도 생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군 X밴드 레이더는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합니다.

단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확장에 부채질 하고, 군수기업을 돈 벌게 하는 것 뿐입니다. 정부는 ‘안보관계의 중대변화’를 말하지만,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냉전시대의 피크 때에 소련이 약 4만발, 미국이 약 3만2000발의 핵탄도가 둘러쳐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그 당시보다 국제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국제연대만이 평화의 성채

이렇게 겨우가미사키의 X밴드 레이더는, 군사적 필요가 아니고 정치적·군수산업적 이권으로부터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X밴드 레이더 철거의 싸움은 주민의 목숨과 삶, 건강·안전을 지키는 싸움, 나아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제거하고, 아베 정권이 진행시키는 전쟁법안인 ‘해외파병 법안’, (그 전진기지로서의)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하게 호소합니다.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통해 본 환경오염문제

신수연 / 녹색연합(Green Korea United)

괴물이 되어버린 땅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문제와 그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왔다. 장기간 극심한 소음, 오폐 및 불발탄 사고로 인해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던 매향리 사격장 투쟁(2000년),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사건(2000년) 등을 기점으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 피해를 개인이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동맹관계라는 외피 속에 주둔국의 환경을 마구잡이로 오염시켜도 주둔군을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현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향리 사격장은 2005년에 폐쇄되었고,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한미 SOFA 협정에 부속서 형태의 환경조항이 만들어졌지만,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는 계속 발생했다.

2003년 11월,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Global Posture Review)이 발표되고, 2004년 용산미군기지 및 미2사단 이전협정이 체결되어 국회 인준을 받은 이후 한반도 내 미군기지의 폐쇄, 반환, 이전 등 대규모 재편 계획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도 여러 차례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불거져 나왔다. 2007년에 오염상태 그대로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개는 오염된 정도가 너무 심각하였기에 정부의 협상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릴 정도였고, 2011년에는 퇴역한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고엽제 매립과 핵무기 사고를 증언함으로써 환경 피해의 심각성, 그 규모와 정도에 대한 의혹을 널리 퍼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반환 예정이거나 계속 사용 중인 미군기지에서의 환경오염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군 측에 오염책임을 묻지 못하는 한국 정부

올해 3월, 주한미군기지 중 2곳(부산DRMO, 동두천 캠프 캐슬)의 반환협상이 완료되었다. 이번에도 한국 정부는 오염된 상태 그대로 미군기지를 돌려받았고, 관계 부처 어느 곳에서도 협상이 완료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공개질의하자 답변서를 통해 확인해주었을 뿐이다. 이번 협상은 2016년까지 반환이 예정된 29개 미군기지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한미 SOFA 환경양해각서에 적시된 오염정화기준인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 위협)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자, 보완책으로 한-미간 합의에 의해 2009년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처음 적용되어 반환 협상을 진행한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2009년 JEAP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전체면적 53만 3830㎡ 중 오염토량 1,356㎡ (0.26%), 정화비용 3억 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2011년 반환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면적 53만 3830㎡ 중 오염토량 9만 5,877㎡(17.96%), 실제 정화비용 146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캠프 하야리아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는 JEAP 절차에 대한 개선 없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환미군기지에 대해 JEAP을 적용키로 합의했었다. 다만, 부산 하야리아의 경우를 선례로 남기지 않겠다고 공표하였으나 부산 DRMO, 동두천 캠프캐슬의 경우 오염도에 위해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정화 책임을 미군 측에 묻지 못한 것이다.

반환협상이 완료된 미군기지 뿐만이 아니다. 향후 2016년까지 반환이 예정된 서울 용산기지, 부평 캠프마켓,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도 기지 내부의 오염원으로 인한 오염 징후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사례

용산 미군기지로 인한 유류오염사고(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 킴 인근) 당시,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측은 '기지 내부는 주한미군 측이, 외부는 서울시가 정화 작업을 하도록 협의'하였다. 사고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서울시가 기지 외부에서 오염 지하수를 양수처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용 기준치의 수십 배에서 1000배가 넘는 벤젠, TPH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오염지하수를 양수처리해도 내부오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 기지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서울시의 지적과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거듭된 항의에 SOFA 환경분과 실무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용산기지 내부의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시민단체 연대단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처분을 받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용산미군기지 녹사평역 주변(South Post) 연도별 지하수오염 최대농도 (단위: mg/L)

연도별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크실렌	석유계 총탄화수소
정화기준	0.015	1.0	0.45	0.75	1.5
2004	29.354	17.4	1.57	8.39	65.2
2005	20.997	17.2	2.23	9.16	13.7
2006	29.229	12.2	2.88	12.71	133.2
2007	20.810	12.2	2.30	7.57	102.1
2008	28.122	10.2	1.95	8.36	81.7
2009	22.752	9.9	1.55	8.63	218.0
2010	15.556	6.6	5.41	25.76	228.1
2011	42.745	9.5	34.06	52.13	8,060.1
2012	19.671	8.4	1.21	8.77	74.4
2013	15.200	3.1	2.02	4.79	6.4
2014	8.678	3.515	1.305	4.215	56

- 용산미군기지 캠프 킴(Camp Kim) 주변 연도별 지하수오염 최대농도 (단위: mg/L)

연도별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크실렌	석유계 탄화수소
정화기준	0.015	1.0	0.45	0.75	1.5
2008	16.680	145.74	271.46	813.35	9,867.4
2009	0.011	0.013	0.623	0.128	4,315.0
2010	0.007	0.04	0.694	0.221	2,382.0
2011	0.004	0.11	0.24	0.030	1,436.8
2012	0.014	0.07	0.015	0.007	966.2
2013	0.006	0.10이하	0.018	0.005	1,821.7
2014	0.008	불검출	0.023	0.037	6651.3

자료 출처: 2014년 녹사평역 주변/ 캠프 킴 주변 오염지하수 확산 방지 및 정화용역보고서 및 정보공개청구 결과 정리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및 DRMO) 사례

역시 2016년 반환 예정인 부평 캠프마켓 및 DRMO 주변지역 토양에서 벤젠, 납, PCB 등 오염물질이 확인되고 있으며 과거에 각종 오염물질을 취급했던 기록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2012년 부평구, 2014년 환경부에서 부평의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및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약8만8천㎡)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매우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다. 다이옥신이 2,3,7,8-TCDD, 독성등가환산 농도로 55.748 pg-TEQ/g까지 검출되었는데 이는 2009년 우리나라 전국평균 2.280의 24배, 최고농도 16pg-TEQ/g의 3.5배에 해당한다. 특히 표토뿐 아니라 심토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열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다이옥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평미군기지 내부에서 유독물질 매립 등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무색, 무취의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로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맹독성 물질이다.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한번 인체에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과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다이옥신 뿐 아니라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각종 유류 및 중금속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또한 1987~1989년 부평 DRMO에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PCB(Transformer oil)448드럼, 수은폐기물 10파운드, 석면2580파운드, 배터리산(Battery acid) 118켤, 솔벤트슬러지(Solvent sludge) 82드럼, 하이포솔루션(Hypo solution) 77드럼으로 명시되어 있는 과거 미군 측 자료³³⁾도 확인되었다.

위 사례 외에도 소음, 오인 사격, 지뢰 등으로 인해 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다양하게 발생한다.

반복되는 미군기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반복되는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원인은 한-미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환경사고로 인해 관련 절차 및 제도가 바뀌어도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동맹 등 군사·안보의 프레임과는 별개로 환경오염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미군기지는 서울, 부산, 부평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 속에도 있고 농·어업, 작물재배 등 토지·해양을 직접 이용하는 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 속, 유류/중금속/유해 화학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국민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되는 문제이다. 이미 소음, 지뢰 및 오인 사격 위험 등에 노출된 주민들의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조사 결과 및 오염사고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부터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지 내부에 대한 접근권 및 조사권 보장, 한-미

33) 1991년 미공병단 내 건설연구소가 외부용역을 통해 발간한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최소화방안 (Hazardous Waste Minimization and Treatment Opportunities in the Eighth U.S. Army and the U.S. Army, Japan)

공동조사 보장, 평상시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 강화, 반환 절차 개선 및 SOFA 환경조항 개정까지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미군 측에 기지 내 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정보공유를 요구하고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료 제출과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금보다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함께 현실적이고 개선된 협상안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몇 차례 소송을 통해 한국 사법부에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를 환경 주권과 국민의 권리문제로 해석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를 포함,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일본 안보법제 추진과 문제점

이토카즈 게이코(糸數 慶子) / 일본 참의원의원

소개

이토카즈 게이코(糸數 慶子)

일본 참의원의원, 오키나와사회대중당 위원장

1947년, 오키나와현 요미탄촌에서 탄생. 미군 점령 하에 자라는 과정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실감함. 요미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스가이드로 취직하고 평화의 관점 및 자연,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오키나와를 소개. '평화 가이드'의 선구자가 됨.

1992년 오키나와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더 평화롭게, 더 공정하게”를 호소하며 첫 당선. 시민 본위의 정치와 도전 정신이 왕성한 자세가 폭넓은 지지를 받아 3기 연속 당선

2004년 참의원의원 선거에 도전, 첫 당선. 2006년 11월에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 출마. 평화, 환경, 교육, 복지, 여성 문제를 주제로 활동

현재, 오키나와사회대중당 위원장 역임. '기지·군대를 용서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 공동대표, '카지노 문제를 생각하는 여성들의 모임' 공동대표, 평화네트워크 회원, 오키나와 존타클럽 회원, 오키나와현 승마술연맹 회장.

저서 “생명의 소리- 여성, 환경, 평화의 관점으로”, “오키나와 전투와 평화 가이드”, “오키나와의 바람을 풍겨라” (2015년 8월 현재)

한국 · 오키나와 · 일본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즈음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모인 여러분 안녕하세 요? 참의원의원 이토카즈 게이코입니다. 일본 국회 회기가 전후 최장으로 연장되어 이번 심

포지엄에는 국회 일정상 참석할 수 없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올해 8월 14일, 아베 수상이 전후 70년을 기념하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를 둘러싸고 지난 2차 세계대전에서 아시아 각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는지 여부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고, 아시아 각국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표현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얻기 위해 아시아 근린 제국을 식민지로 삼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본의 국회의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행동해 나갈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안보법제 추진, 국민들의 반대 움직임

일본 국회에서는 7월 중순에 중의원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강행타결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후 70년간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로서 평화국가의 지위를 확립해 왔습니다. 그것은 일본 헌법이 무력에 의한 국제 분쟁 해결을 금하고, 전쟁을 포기한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헌법을 경시하고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한 학자 3명 모두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많은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권력으로 억압한 것입니다. 국회 밖에서는 이 법안의 폐안을 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반대해서 항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조직원이나 정치 단체 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일어서서 시위를 합니다. 이것은 최근의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드시 폐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주둔과 주민피해

지금 일본에서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입니다. 오키나와 본섬의 면적 중 18%를 미국 기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노완시의 32%, 요미탄촌 35%, 차탄정 52%, 긴정 57%, 가데나정에 이르러서는 83%를 미군기지가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외국 부대가 자국의 영토를 계속 점령하는 것은 이상 사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 부담을 오키나와에만 지우도록 밀어붙인 채 또 새로운 기지를 만들어 미군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군기지가 주는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군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 미 군인 또는 군 관계자가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 그 중에는 강간 등의 흉악한 범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또한, 최근에는 기지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기지에 땅을 제공 하는 것보다 반환받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수십 배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

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기지가 오키나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현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기지에 대한 오키나와 현민들의 불만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사고, 환경 문제가 발생해도 일미지위협정에 의해 현민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일본의 법률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사례도 많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미군을 우선하고 일본 국민의 생활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제국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맺고 동북아시아 지역을 안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베 정권이 안전보장관련법안, 야스쿠니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근린제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저도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연대하고 함께 걸어갑시다.

“올리 오키나와” 의 헤노코 · 전쟁법안 반대

다카하시 도시오(高橋 年男) / 후텐마 기지 폭음소송단

올해는 ‘일본 본토 방위’, ‘천황제 수호’를 위해 오키나와를 희생시킨 오키나와 전투가 일어난 지 70년째를 맞이하는 해다. 1945년에 전투가 끝난 후에도 오키나와는 미소간의 냉전 구조와 신생 중국에 겨냥한 중요한 군사 거점으로 미군 통치를 받았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반공 방과제’가 되기 위해 미군기지가 확장되었다. 총검과 불도저에 의한 토지 강탈은 주민들로부터 고향, 생활, 인권 등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4분의 3이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기지의 섬’이 되는데 한반도 분단 상황도 일조했다. 그 후 오키나와는 ‘악마의 섬’으로 베트남을 비롯해 아시아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다. 평화를 위협하는 성조기는 아시아에서 물러나라!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 전쟁법안 반대!

2011년에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하면서 오키나와에 사는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더욱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일상적으로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미MD(미사일 방위) 시스템 구축은 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것이다.

올해 4월 28일에 합의된 ‘일미 신 가이드라인=일미 군사 동맹 강화’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 중심지가 되는 오키나와는 아시아의 화약고이다.

‘전쟁 의존증’이 있는 미국에서는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경제 구조 속에서 군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쟁의 씨앗을 흩뿌리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북한을 비롯한 일본의 인근 국가와의 대립을 부추기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 무기와 장비를 강매하고 군사 이권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런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 군사적 일체화를 가속시키고, 종속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아베 정권이 헌법을 위반해서 추진하는 ‘전쟁 법안’이다.

이 전쟁 법안을 둘러싸고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급격히 높아졌다.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강행 체결된 전쟁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모여 국회를 포위한 시위가 실현된 배경에는 틀림없이 오키나와 현민의 민의를 짓밟고 강행되는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꾸준히 저항해 온 오키나와 사람들의 직접 행동이 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작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그 날에 아베 정권은 ‘헤노코 공사 착공’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언했다. 오키나와에서 항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헤노코 신기지 건설이 좌절되지 않을지, 아베 정권의 실행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내세운 퍼포먼스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석면이 혼입된 군 병사 바깥쪽의 블록담 일부를 깎아내는 작업만 하고 다음날 위법 공사는 중단되었다.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를 내세우고 작년 12월에 탄생한 오나가 지사를 지지하는 “올 all 오키나와”의 행동으로 인해, 매립 공사의 사전 단계인 시굴 조사의 경우 19개소 중 15개소가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언제 완료될지 아직 목표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적 수속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오키나와에서는 바다에서도 육상에서도 직접 행동 투쟁을 전개하고, 현내 각지에서 “시마구루미(온 섬) 회의”를 결성하는 등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6월 23일에 개최된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 위령제에서는 단상에 오르려던 아베 수상에게 한 유가족이 “전쟁꾼은 나가라. 아베는 나가라!”고 크게 외치는 장면이 있었다. 이 모습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언론사를 통해 해외에도 보도되었다. 며칠 후, 6월 25일 자민당 본부에서 개최된 문화 예능 간담회에서 야쿠타 나오키가 “오키나와의 2개의 신문사는 파산시켜야한다”는 발언을 하고 그에 동조한 자민당 의원이 “광고 게재를 중지하도록 경당련에도 협력을 요청하자”고 기세를 올렸다. 그것이 아베 측근과 아베 본인의 본심일 것이다. 오키나와의 진정한 소리를 전국, 전 세계에 전해서 그들의 속셈을 꺾어 나가자!

특정비밀보호법 성립에서 “전전(戰前) 회귀”를 노리는 아베 정권의 폭주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20만 명이 희생된 오키나와 전투처럼 오키나와를 다시 전쟁터로 만드는 시대착오의 정책이다. 한 번 전쟁이 시작되면 오키나와의 생명선인 해상 수송은 끊어지고 생활물자가 결핍할 뿐만이 아니다. 오키나와의 군사기지는 모두 중국이 보유한 핵 미사일의 사정권내에 들어가 불과 2, 3발로 괴멸된다. 일미군사훈련(야마사쿠라61)에서는 오키나와와 대만은 파괴 지대로 소멸되고, 일본 본토가 전쟁터로 되어 폐허가 되는 시나리오가 사용된다. 미군은 중국 미사일의 사정권 밖을 확보하고 피해를 피하려는 작전이다. “국경의 섬”인 요나구니 섬에 레이더 기지를 만들고 연안감시부대 150명을 배치하는 계획은 미군이 만든 시뮬레이션을 따른 것이다.

국경을 넘어 연대하자! 군사기지 반대

일미 양정부가 강행하는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대해 <올 오키나와>로 맞서는 저지 투쟁에 뜨거운 관심을 기울여 주는 사람들이 있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평화행진과 현민 대회에 한국(제주)에서 16명이 참가했다. 폭염 속에 같이 걷고, 함께 시위하고, 국제 연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제주(한국)와 오키나와는 아시아의 평화적 연대를 위한 핵심 현장이자 3만 5천명이 결집한 현민대회에서는 <올 오키나와>의 열기를 함께 느꼈다. 한국의 기지 반대 운동이 오키나와와의 연대를 원하는 것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는 주한미군, UN 군사령부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이다.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가 만들어지면 아시아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초래할 것이고 오키나와는 다시 전쟁터로 된다. 만약 전쟁법안이 성립되면 일본 국민은 다시 “동양의 괴물”로 될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막아내야 한다.

1995년에 일어난 소녀 성폭행 사건, 2004년 오키나와 국제대학교 미군 헬기 추락 사고, 2007년 교과서(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역사 개찬)문제, 2010년 헤노코를 내어주겠다며 미국에 백기를 든 민주당 정권의 배신. 오키나와는 역사적 분기점에 설 때마다 10만 명 규모의 현민 대회를 열어 항의를 해 왔지만 정부는 진흥개발비나 관방기밀비 등 돈을 투입함으로써 선거 때마다 오키나와의 민의를 분단해 왔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1960년대에는 미군기지 관련 수입 의존도는 50%에 가까웠지만, 반환 받은 부지를 개발해서 큰 경제 효과를 얻은 결과 지금은 기지 경제 의존도는 약 5%에 불과하다. 고용, 세수의 관점에서 봐도 ‘기지는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하토야마 전 수상이 “억지력은 핑계였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오키나와에 미 해병대를 배치할 만한 지정학적 근거도, 결합투성이 오스프리를 오키나와에 배치할 이유도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다.

“오키나와는 깨어났다. 후퇴는 절대 안 한다.”

군은 결의에 찬 시민 10만 명 이상이 2012년 9.9 현민대회에 모였고, 실행위원회는 2013년 1월 “오스프리 철회, 후텐마 폐쇄, 헤노코 백지화”를 담은 건백서를 지니고 일미 양정부를 상대로 도쿄 행동을 전개했다. 이때 오키나와의 모든 시정촌(市町村) 장, 의장, 국회 의원 현의회 의원들 참가한 도쿄 긴자 시위에서는 우익 단체가 일장기를 휘날리며 참가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들은 일본에서 나가라, 시궁쥐들, 바퀴벌레들...” 온갖 욕설, 증오의 말들을 도쿄에서 잔뜩 듣기도 하였다. 오스프리를 둘러싸고 ‘도쿄와 오키나와 충돌’을 겪으면서 오키나와에서는 ‘구조적 오키나와 차별’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잘 쓰이게 되었다. 더 이상 미군기지 문제로 주민들이 보수, 진보로 갈라져서 대립해야 할 이유는 없고, 전후 70년을 앞둔 작년의 현 지사 선거에서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아이덴티티”, “기지를 없애고 자랑스럽고 풍요로운 오키나와를 실현하자!”라는 표어가 만들어졌다.

오나가 지사는 이번 여름에도 헤노코 기지 건설의 위법성, 부당성을 밝히고 현지사 행정권

한을 행사함으로써 공사 중지를 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의회도 류큐열도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헤노코 매립 토사를 현 외에서 반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또한, 13지방의 시민들이 만든 “헤노코 토사 반출 반대 전국 연합회”도 결성되었다. 9월 하순에는 오나가 현지사가 UN에서 연설할 것이 결정되었다. “오키나와에 관한 일은 오키나와가 결정한다”고 자기결정권을 당당히 주장하고 아시아의 밑바닥에서 연대를 구하고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헤노코 신기지 건설공사를 꼭 막아낼 것이다.

올해 2월, 헤노코 매립 예정지 천탄에서 발견된 ‘닷돌’이, 6월 30일 오키나와 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재로 인정받았다. 중국, 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 류큐 왕국이 번영했던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화재다. 이것은 류큐인이 인근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다양한 문화가 공생하는 풍부한 사회를 이루었음을 지금 시대에 전해주는 것이고, 중국과의 군사 대립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일미 양정부의 헤노코 신기지 건설 계획에 대해 “멈추라”며 시대를 넘어 들려오는 경고 같기도 하다. 앞으로 이 닷돌 발견 장소에서는 문화재 조사가 시작되고 매립 공사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가 오래 계속된다. 닷돌이 공사를 막아내고 있다. 헤노코 공사를 저지하고, 전쟁 법안이 폐안될 때까지 아시아의 사람들과 연대하고 직접 행동의 움직임을 더 널리 알려주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미래

고권일 /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들어가며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가 3000일을 넘어섰다. 그 지난한 세월을 어떻게 싸워올 수 있었으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이제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의 문제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 사업의 결과만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속의 아픔도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조금 더 확장되길 빌어본다. 이러한 취지로 사업추진 초기부터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 조금이라도 강정해군기지문제에 관심이 넓어지길 바라며 작성한 글임을 밝힌다. 이하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어떠한 문제가 이슈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문제점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7년 4월이다. 이 시기는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으나 미국과의 FTA체결과 부동산정책 실패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고,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실패로 끝나는 시점이었으며 악화일로에 있던 미국경제 상황과 연동하여 아시아 회귀전략과 함께 동맹국에게 역할 분담을 강요하는 시기였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 협약'을 맺음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보수진영에 전시작전권 반환 유보의 커다란 명분을 제공하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자주국방론은 사실상 막을 내린다. 전시작전권 환수논란은 전략적 유연성 협약의 골자인 미군의 역할을 한국군이 일정정도 떠맡음에 따라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군의 참여를 공식화'하는 협약으로 엄연히 위헌적 요소가 다분함에도 이를 이슈화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미군기지의 이전과 건설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문제도 사회적 여론에서 멀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들어온 것이다.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은 경제회복을 빌미로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한 편, 국방비가 대폭 감소하여 한국형 항공모함 계획은 물론 이지스 순양함 2척 건조 후 추가 확보계획을 중단 하였고 차기 고속초계함(PCX) 계획마저 중단하는 와중에도 토건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만큼은 강하게 밀어붙였다. 오키나와에서는 물러날 것 같았던 미군이 도로 재배치되며 오히려 기지 확장에 나서게 되고 이에 따라 제주도내 미 해병대 이전 우려가 사라진 배경을 이용하여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 해군의 자체 계획임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나아가 순수한 해군기지가 아닌 제주도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임을 강조하여 도민들의 여론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1. 절차적 문제 이슈시기 (2007~2008)

이에 강정마을은 순수 대한민국 해군의 사업임을 강조하는 사업을 정면으로 반대할 경우 중폭으로 내몰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강정마을회는 '주민과 마을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모토아래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주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유린한 사업이라는 이슈로 집중하여 반대운동을 펼친다. 또한 입지타당성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마저 없었던 사업이라는 점, 사전에 사업설명회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절차적 문제에 집중하였다.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2008년 예산 부대조건인 '민군복합 기항지' 이슈를 간과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전체의 82%가 반대하는 여론을 등에 입고 있었고, 아직 사업고시가 된 시점이 아니며, 무엇보다 사업대상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당시 강정마을회는 해군이나 국방부보다 제주도정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2008년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방대를 호소하며 전 도내를 일주하는 도보행진을 하였으나 도민분위기는 그 전처럼 뜨겁게 달궈지지 않았다.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빠져있던 제주도는 해군의 관광미항 홍보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2.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이슈시기 (2009~2010)

2009년 1월 29일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시하자 강정마을회는 즉각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 고시한 위법을 문제 삼고 크게 이슈화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절대보전지역 사수 투쟁에 돌입한다.

연일 도청 앞 집회가 열리고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도정과 도의회를 압박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반납하고, 2차 도보행진을 하였으며, 수십 명의 삭발투쟁과 수백 명이 도의회 봉쇄투쟁을 전개하였으나 2009년 8월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나오고, 2009년 12월 17일 도의회가 날치기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자, 해군은 2010년 3월 사업변경고시를 하였고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군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김태환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이었다. 주민소환운동의 기폭제는 제주도와 해군간의 MOU 체결이었다.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1988년 알뜨르 비행장 공군기지 건설반대 이후 제주도는 이 토지를 공군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이 도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나중에 이 MOU가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로 사업명칭이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MOU 내용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여론과 맞물려 순식간에 끓어올랐다. 공식적으로는 7만여명의 소환서명을 받아 발표했으나, 주소가 애매하거나 서명을 정자로 기입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12만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이 소환운동에 가담했다. 도지사의 직권이 정지되고 투표가 실시되었지만 행정기관이 투표방해에 적극 나서며 투표율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개표조차 되지 못하는 운동이 되고 말았다. 소환운동 실패는 강정주민들에게 커다란 좌절이었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법원의 패소판결은 거기에 켜기 역할을 했다.

3. 운동 소멸기 (2010말~2011초)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전국을 뒤덮었다. 천안함 사건은 그 해 지방선거에서 야권을 몰락하게 만들었다. 제주도 역시 야권후보인 고희범이 아닌 우근민 후보가 도지사가 되었고, 우근민의 원원전략의 실체가 드러난다.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지를 최초의 후보지였던 화순으로 옮기되, 화순주민이 반대하면 강정마을이 수용한다는 조건부 이전 계획이 그 것이었다.

강정주민들은 절망 속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되어 양심적이지 못한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만대투쟁은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고 강정마을은 반대세력내의 갈등이 격화되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 내분을 틈타 해군은 토지수용을 마무리 짓는다. 제주도가 농로를 해군에게 매각하여 협의매수지분이 50%를 넘자 나머지 토지를 강제수용 한 것이다. 이 시기에 반대 측 주민들이 결속되어 있었다면 토지측량과 감정평가, 수용단계에서 훨씬 완강한 저항이 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해군은 전투복을 착용한 채로 수십 명씩 몰려다니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는데,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과 더불어 아쉬움이 큰 시기이다. 또한, 해군은 지역발전계획을 1조 4천억이 넘는 덩지로 크게 부풀려 선전해대기 시작했다. 사실 이 발전계획은 대부분 제주도 도시계획에 수립된 국비보조 사업들을 무차별로 끼워 넣기 한 것에 불과하나 여론조성에서 해군은 언제나 유리했다. 사실, 이때라도 '민군복합형 기항지' 이슈를 부각하며 싸웠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 설계오류 이슈시기 (2011중~2014)

2010년 12월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사무소 건설을 시작으로 2011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되었다. 부지 전체를 펜스로 둘러치려는 해군과 주민들이 곳곳에서 싸

움을 벌이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공사저지투쟁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때마침 생명평화 결사와 평통사가 4·3을 즈음하여 차례차례 마을에 들어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으며, 직후 구럼비 파괴를 막으려던 양운모 영화평론가의 구속과 단식투쟁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전국의 많은 양심시민이 자발적으로 강정마을로 모여들었고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전국대책회의가 꾸려졌다. 이시기의 핵심 아이콘은 '구럼비'였다.

공사진행을 막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펼쳐졌다. 그 중 한 축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각종 협의사항 준수였고, 다른 한 축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한 항로문제와 선회장 규모 문제 등이었다.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논쟁은 2012년 8월 제주도 중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WCC(World Conservation Congress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정점을 이루었고,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독립적인 영향평가를 전제로 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결의안이 상정되어 압도적인 NGO단체의 지지가 이루어졌지만 정부기관들의 반발로 결의안 통과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5년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유치한 제주도에게 서귀포 앞바다 연산호군락 보존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중 하나이다. 현 도정은 제주해군기지 주변 해양환경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설계오류 측면은 2012년 제주도가 독자적인 검증T/F를 꾸려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전국적인 사안이 되었고 총리실이 직접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군이 시행한 1, 2차 시뮬레이션 이외에 제주도가 참여한 형태의 3차 시뮬레이션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30도 항로 변경과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항로변경은 준공 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가변식 돌제부두에 대한 설계변경은 공동사용협정에 강제조항으로 담겼으나 해군은 2년간 설계변경을 미루다가 2015년 6월 준공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중단의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 두 이슈의 움직임은 2012년도 해군기지예산을 94%까지 삭감하는 결과를 내기도 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 반영 시 70일간의 검증 후 집행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등 다양한 정치력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해군은 단 한 번도 공사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유일한 공사중단은 불법으로 초중량 장비를 야간에 밀반입하는 것을 주민들이 막아서서 공사장정문을 틀어막는 농성을 시작하고 오탁방지막 없이 해상공사를 감행하던 바지선을 접거하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공사행위에 대해 허가권자인 제주도정은 공사중단을 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육상공사 부분 역시 도로법위반 장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직접적인 행정조치가 취해진 기간에 불과했다. 이 3년간의 기간에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람들의 숫자는 700명이 넘어서고 특히 구럼비 발파가 이루어졌던 시점에 연일 최고치를 갱신했다. 38명의 구속자 수와 589건에 이르는 기소 건수는 막중한 사법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로부터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인권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기지확장 저지투쟁과 향후 과제

2015년 벽두부터 마을내부로 들어오려는 군관사 건설에 대한 저지투쟁이 불을 뿜었다. 1월 31일 행정대집행은 24명의 연행과 크고 작은 부상자를 발생시키며 전국에 아직까지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보여줬다.

군관사 건설 문제는 분명 해군기지 확장의 문제다. 2010년 제주해군기지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시기만 해도 외부군관사 문제는 없었다. 2012년에 들어서서 해군은 해군기지 외부에 군관사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시계획수립의 전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정이 허용하면서 군관사 건립문제가 불거졌다. 동일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해군은 마음만 먹으면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마을을 완전히 잠식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강정마을회는 판단하고 있다. 3차례에 걸친 주민동의 과정에서 실패한 해군은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1만평방미터 이하 72세대 군관사 사업을 밀어붙였고 그나마 건립 예산도 조건부 예산으로 통과하자 기재부 수시배정예산 없이 사고 이월된 군관사 매입 비용을 전용하여 군관사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가기관인 해군은 브로커들이나 하는 행태까지 보이며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앞서 해군기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정의 정치력으로도 해군의 공사강행의지를 막을 수 없었으며 유일한 공사중단은 주민들이 군관사 공사장 정문을 천막농성하며 막았던 3개월 남짓한 기간 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군관사 건설과정 두 사례를 보았을 때, 직접적인 공사중단의 힘은 주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지회복과 공동체적 삶을 복원하는 것이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얼마 후면 해군기지 우회도로 공사로 인하여 평화의 거점인 삼거리식당 일대에 대한 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싸움은 앞으로의 싸움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전이 될 것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준공 후 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해군이 MOU 체결 시 기지경계선 바깥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용협정에서는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제주도 지사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변질되어 있어 기지외부에 보호구역 지정가능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법의 통신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근거로 특정시설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가능성이 또한 높은 상황이다. 각종 혼란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대비하여야 함에 따라 반대대책위 존속은 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의 THAAD배치 여부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는 해상MD의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제주해군기지에서 운용될 기동전단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인해 제주도 남방해상에서의 공동 해상작전이 강화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이어질 것이므로 동북아 평화운동은 해당 당사국들의 민중들의 연대를 통해 더욱 넓어지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생물무기반입 및 실험·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이미현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세 달이 지났다. 한미 정부는 지난달에서야 합동 실무단을 꾸려 탄저균 오산 기지 반입 과정 및 이후 조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발표는 없다. 미 국방부가 전 세계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경위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는 이는 거의 없다.

2015년 8월 16일 현재까지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Laboratory Review)에 따르면,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직접 또는 한 차례 건너 받은 실험실은 총 194개이며 탄저균이 유입된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총 9개국이다. 9개국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가 포함된다. 미국령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도 탄저균을 받은 지역으로 확인됐다.³⁴⁾

사안의 심각성이나 방대한 규모에 비해 미 국방부가 내놓은 조사결과 보고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용납될 수 없는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탄저균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현대 과학 지식의 부족으로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다만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아 규정 표준화를 권고안으로 결론지었다.³⁵⁾ 또한 10년 넘게 살아있는 탄저균을 생산해 온 더그웨이 연구소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34) http://archive.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

35) 2015. 7. 13. 미 국방부 발표

http://archive.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docs/Review-Committee-Report-Final.pdf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의문점들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탄저균이 반입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월 27일 미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처음 언론에 발표했다. 미국 유타 주에 위치한 미 육군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가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 1ml를 민간 운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배송했다는 것이다. 이는 5월 22일 메릴랜드의 한 민간 연구소가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받은 탄저균 샘플에 문제가 있음을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오산기지에서는 이미 5월 21일 22명의 인원이 주피터(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 위협 인식, JUPIT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신규 유전자증폭(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분석 장비 시연회를 위해 해당 탄저균 샘플을 해동하고 실험 전처리를 실시했다. 이후 5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의 지시사항을 통보받고 탄저균을 폐기하고 실험실을 폐쇄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만든다. 오산 미군기지에서는 무슨 내용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왜 주한미군은 사건이 신고된 지 5일이 지나서야 조치를 취한 것인지 오히려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미 육군 관련 책임자들은 주피터 프로그램이 2013년에 시작됐으며 2014년에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피터 이매뉴얼(Peter Emanuel) 박사는 2014년 12월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은 지난 18개월 간 반복적으로 실험한 끝에 각 실험실들은 자신의 지역에 적합한 생물식별 장비를 갖췄으며, 미국에서 실시한 야외 실험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만 남겨뒀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3월 26일 미 육군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U.S. Army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는 주피터 프로그램 최종 단계의 작동시연(Operational Demonstration)을 위해 오산으로 2톤에 달하는 장비를 배송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PCR 장비 시연을 위해서 처음으로 탄저균을 들여왔다고 했지만 정황상 이를 믿기 어렵다. 게다가 PCR은 약대생이나 의대생이라면 이미 학생시절 해봤음직한 흔한 미생물 검사 방법이다. 신규 장비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시연하기 위해 굳이 탄저균까지 활용했어야 하는가 의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황들을 볼 때 오히려 이번 탄저균 반입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인 작동시연(OD)을 위한 것이었다는 추측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최종시연 준비를 위해 이미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를 활용한 사전 모의실험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을 해 온 미국

한미 당국은 주피터 프로그램이 "북한의 생물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의 생물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군이 그동안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곳은 한국만이 아니다. 8월 말 기준 미국 내 50개주, 3개 미국령과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9개국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걸쳐있다. 게다가 탄저균이 배송된

시기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경우 2005년 도쿄 남서쪽 40km 떨어진 카나가와현 자마시에 위치한 주일미군기지 캠프 자마로 탄저균 샘플이 배송됐고 2009년에서야 폐기되었다고 한다. 폐기될 당시 탄저균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바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미 국방부는 밝히고 있지만, 탄저균 샘플이 일본에 반입된 바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하다.³⁶⁾

미국령의 하나인 괌에도 탄저균 샘플이 배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독일의 경우도 2005년 란트슈틀시에 위치한 미군 의료 연구실로 탄저균을 배송받았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 탄저균 샘플을 배송하고 미군 실험실을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한미 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주피터 프로그램은 북한의 생물무기 방어용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항변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한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가? 더 이상 일본, 독일 등에 탄저균 샘플이 더 이상 배송되지도,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미국이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생화학전 대응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97년 '생화학무기 국가안보 프로그램'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이후 2001년 우편물을 이용한 탄저균 배송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생화학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방어용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으로 미군의 생물무기 개발 및 관련 실험이 다 합리화 되는 것은 아니다. 방어용 실험에 사용되는 탄저균이라도 언제든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탄저균의 개발·보유·운송·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다.

한국을 탄저균 시험장 삼은 주한미군

게다가 북한이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 때문에 한국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고, 대응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피터 이마뉴엘 박사 역시 주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 국방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과 미군에 호의적인 한국 정부 덕분에 주피터 프로그램의 실험장을 한국으로 정했다고 설명하며 "한국에서 설계된 틀은 미군의 아프리카·유럽·태평양 사령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³⁷⁾ 다시 말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적용할 전형을 만들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물무기

36)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sample sent to Camp Zama contained live Bacillus anthracis, as it was destroyed in 2009. An inventory of the Camp Zama laboratory conducted in June 2015 verified that there were no remaining proficiency samples. There were no cases of infection related to the 2005 sample, and there is no health risk to the laboratory personnel or the general public in Japan, as it was properly transported and stored prior to destruction.

http://archive.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Pentagon_Issues_Statement_On_DoD_Laboratory_Review_Update.pdf

37) <http://www.cbrneportal.com/interview-with-dr-peter-emanuel-the-joint-united-states-forces-korea-portal-and-int>

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을 시험장 삼아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기 어렵다. 탄저균을 배송받은 오산 미군기지의 위치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오산 공군기지 담장 바로 너머에는 민간인이 거주하는 주택지구와 상업지구가 펼쳐진다. 만일 살아있는 탄저균을 최종 시연 또는 야외 실험에 사용했다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탄저균을 활용한 생물무기 방어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했다. 한국 정부 역시 거의 같은 태도를 취하는데 그쳤다. 의혹이 해소된 것은 거의 없고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 요원하지만, 주피터 프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정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로 의혹 해소해야

그동안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초지일관 “배달 사고”일 뿐 “위법은 아니다”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탄저균 반입은 단순한 배달 사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탄저균이 활성화되었든 아니든,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내법 생화학무기금지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어디에도 ‘살아있는’ 탄저균만 신고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 고위험병원체와 생물작용제의 종류로 ‘탄저균(Bacillus anthracis)’이라고만 명시되어있을 뿐이다. 또한 동 처벌규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신고 없는 탄저균 반입은 처벌해야 할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다.

지난 6월 22일 한국 시민사회는 ‘국민고발단’ 8704명의 시민들의 이름으로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예방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주한미군 책임자들을 고발했다. 오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살고 있는 평택 시민들도 다수 참여했다. 기지 주변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의 생물무기 위협도 ‘생물무기 방어 프로그램’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방어용과 공격용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방어적’ 목적으로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을 한다고 하면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해결책은 어느 누구도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가 약속한 바이기도 하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검증 의정서가 아직 채택되지 않았고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평화운동 세력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다시는 탄저균 반입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함께 간다

-아시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미사일 방어 전략에 반대한다

미군이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다. 전세계 정치·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미군 재배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재균형’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부담의 증대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또 다른 군사적 결속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냉전구도를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는 적국의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을 넘어 상대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 국가들에 대한 MD 참여 요구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MD 참여는 주변 국가들과의 분명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자극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사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는 거대한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오키나와의 방어가 아니라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해병대 기지가 지금 오키나와의 헤노코에 건설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북 방어와는 무관한 최남단 제주도에는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미국의 MD 정책에 따라 일본 교토 교당고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X밴드 레이더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국방비 지출을 크게 증액하며 미국의 군사무기 수입을 크게 늘려가고 있으며, 주둔 미군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하고 있다. 부족한 국내의 복지에는 등을 돌린채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을 지원하는데 대규모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한다고 경고한다. 더 이상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의 민중들이 희생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은 불행한 미래만을 가져올 뿐이며, 오로지 평화는 화해와 우호와 연대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군사적 힘으로 평화를 지키려 한다면, 사람과 환경과 모든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경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군사기지로 고통 받는 동아시아의 시민들과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며, 폭력적 군사동맹에 대항하는 평화의 연대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2015년 9월 4일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第8回 東アジア米軍基地問題解決のための国際シンポジウム プログラム

- 14:00 開会** 挨拶 `歓迎辞` 祝辞
ユギョンヒ (グリーン코리아 常任代表)
チャン・ハナ (國會議員)
ハン・チュンモック (韓國進歩連帶 常任代表)
- 14:20 発表1** **米国のアジア回帰戦略と韓國での展開過程**
パク・ソクチン / 開かれた軍隊をめざす市民連帶
- 14:40 発表2** **日本におけるミサイル防衛(MD)展開過程**
大灣 宗則 / 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反対京都/近畿連絡會
- 15:20 映像1**
- 15:25 報告1** **米軍基地返還協商を通して見た環境汚染問題**
シン・スヒョン / グリーン코리아
- 15:40 報告2** **日本の安保法制推進と問題点**
糸數 慶子 / 參議院議員、沖縄社會大衆党委員長
- 16:10 映像2**
- 16:30 報告3** **オール沖縄の辺野古・戦争法案反対**
高橋 年男 / 普天間基地爆音訴訟団
- 17:00 報告4** **濟州海軍基地建設過程と未來**
コ・クォンイル
/ カンジョン村會副會長、濟州海軍基地反対對策委員會
- 17:15 報告5** **駐韓米軍の生物兵器搬入 `および實驗・訓練の實態と問題點**
イ・ミヒョン / 參與連帶・平和軍縮センター
- 17:30 質疑応答**
- 17:50 宣言** **韓國・沖縄・日本の平和宣言文**

米国のアジア回帰戦略と韓国での展開過程

パク・ソクチン / 開かれた軍隊をめざす市民連帯(Civilian Military Watch)

1. 序論

米國は2011年末、アジア回帰戦略を闡明して以来、軍事的側面から中國を主な対象とする一連の軍事戦略と、米軍再配置政策を進めてきた。また同時に、全世界を対象とするもうひとつの巨大軍事プロジェクトを進めており、これこそがまさしく「ミサイル防御體制(Missile Defense, MD)」だ。敵國のミサイルから米國を防御するという概念でスタートしたこの軍事戦略は、ふたつの重要な問題を抱えている。一つ目は、MDが米國とその相手國間の、戦略的安定を破壊する代表的な武器體系であり、軍事戦略だということ。二つ目は防御ではなく、威力的な攻撃の側面をもつという点だ。このような理由から、ロシア、中國など、米國のMD対象國は、米國MDの展開様相と擴張に敏感な反應をみせている。問題は最近、米國が既存の日米MDを強化する一方、韓國を米國MDの主要参加國として設定し、強力に壓迫してきていることだ。

1990年代末からスタートした米國の韓國へのMD参加要求は、アジア回帰戦略が本格化するにつれ、より具體的な形となってきている。そのやり方は大きく分けて三つに分けられる。一つ目は韓國に對する直接的な米國MDへの参加要請。二つ目は既存の日米MDに、韓國を編入するやり方だ。三つ目はいわゆる韓國型MD(KAMD)と、米國MDとの連繫(相互運用性)性を強化するというもの。どのようなやり方であれ、韓國の米國MD参加は、東北アジアの政治・軍事的な地形を大きく変えるだろう。また關聯國間のより一層の軍事的葛藤と、政治的對立を深める結果を招くだろう。

本稿では米國のアジア回帰戦略と、ミサイル防御體制の構築との相關性をさぐり、韓國での

MDの展開方式を分析する。あわせて韓国の米國MD参加が持つ問題点について述べ、補論の形で韓国内で導入可否と関連して問題となっている、MD武器體系であるサード(THAAD)がもつ軍事的效用性と、技術的問題を検討してみるつもりだ。

本稿を作成している頃、安部政府の安保法制に反対する日本の主要な政治家と良心的な學者たち、そして市民の動きが、韓国マスコミを通じて連日主要スクープとして報道されていた。東アジアの米軍問題を 持続的に提起してきたこの国際シンポジウムが、東アジアの平和をめざす韓国と日本の市民の實踐的連帯として深まるための一助となることを願う。

II. 米國のアジア回帰戦略とミサイル防御体制

1. 米國のアジア回帰戦略

周知の通り、現在米國が闡明している世界覇權戦略は、‘アジア回帰戦略(Pivot to Asia)’だ。2011年11月、オバマ米大統領のキャンバラ宣言で可視化されたこの戦略は、以後經濟・外交・軍事的側面において具體化されてきた。

經濟的側面でこの戦略は、危機に陥った米國經濟の活路として大幅な輸出の擴大を設定した。主な市場として、世界人口の40%が集まっており、世界GDPの半分をこす規模の經濟力保有しているアジア市場に注目した。輸出擴大政策を實現するために、米政府は5大重點課題を設定し、主要實現手段のひとつとして、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rans-Pacific Partnership, TPP)を提案して、積極推進しはじめた。あわせて米國は、貿易赤字の半分を占める中國を相手に、大幅な人民元切上を要求した。外交的側面では、米國は既存の傳統的同盟國(日本、韓国、オーストラリア)との関係を深め、東アジアの多者間國家協議體により積極的に介入し始めた。最後に軍事的側面で米國は、2012年1月、‘新國防戦略指針’を通じて米國の戰略的中心をアジアに移動し、中國の反接近・地域拒否戦略に對抗できる公海戦闘戦略として、作戦の優先順位を変更すると発表した。そのため米國は、アジア太平洋地域に現在52%水準である米海軍戰力を60%まで引き上げ、建造中の新型航空母艦ジェラルドフォード号を含む、現在5隻の航母戰團を6隻にまで増やし、B1・B2戦闘機、グローバルホークなど、空軍力の相當部分も一緒に追加配置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このように米國のアジア回帰戦略は經濟・外交・軍事的側面を含む、廣範圍な米國の國家戦略である。特に軍事戦略は、その總體的な國家戦略の成功可否を決定する、梃子の役割を果たす。またその中でもミサイル防御体制の構築は、米國のアジア回帰戦略の主要對象である中國に對して、絶對比較優位を占める軍事的威脅手段となる。

2. 米國のアジア回帰戦略とミサイル防御戦略

ミサイル防御(Missile Defence)という概念が初めて登場したのは、第2次世界大戦當時までさ

かのぼる。1944年、聯合軍の大攻勢への反撃で、ドイツが英國に發射した約1萬のV1ミサイルは、2萬人を越す英國人死傷者を生み、これがミサイル防衛構想のスタート地点となった。以後、冷戦期に米國はソ連と競争的なミサイル開發を進めるとともに、ミサイル防衛體制を研究してきた。このような米國のミサイル防衛概念が、最初に政策化したのは1983年3月、レーガン政府が發表した戰略防衛構想(Strategic Defence Initiative, SDI)であった。しかしこの計劃は、天文學的な豫算と技術的な問題、そして1991年ソ連の崩壊によって事實上廢棄された。レーガンに續くブッシュ行政府は、SDIが追求していた範圍を縮小して、全地球的制限攻撃防衛計劃(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Initiative, GPALS)として推進、クリントン行政府はこれを再び同盟國と海外駐屯米軍の防衛のためのTMDと、米本土の防衛のためのNMDとに分けた。

2001年ブッシュ行政府になるまで約20年間、米國が様々な名前でミサイル防衛體制構築を試みたが、實際武器體系化の段階にまで乗り出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その理由は様々だが、1972年に米ソが締結した彈道邀撃ミサイル制限條約(Treaty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ABM Treaty)が主要要素である。米ソ間の戰略的安定を確保するために成立したこの條約は、ミサイル防衛體制構築を源泉的に禁止していた。言及した米國のMD構想はこの條約を正面から違反するものであり、米國のMD政策は國內外的に正當性の確保が困難であった。しかしブッシュ行政府(2001~2008)はABM條約自體を問題にして、当面する不良國家(北朝鮮、イランなどを指す)からの彈道ミサイルの脅威に對應するため、ABM條約を修正ではなく、新たな枠組みを確立すべきだと主張した。あわせてブッシュ大統領は就任直後、多様なMDプログラムを統合し、ミサイル防衛廳(Missile Defence Agency, MDA)を新設、2002年度豫算案を大幅増額する一方、クリントン行政府のTMD, NMD 區分をなくした。陸地・海・宇宙に基盤するMDとして統合し、本格的な技術開發に乗り出した。2001年に發生した9・11テロは、ブッシュ行政府にMDを推進するための絶好の政治的地形を提供し、2002年6月、ABM條約を公式脱退することで、MD推進が本格化した。2009年に入りオバマ行政府は、基本的にはブッシュ政府のMD政策を承繼しつつ、ヨーロッパではイランの核開發を名分に、段階的MD推進方案であるEPAAを推進しており、東アジアでは北の核開發を名分に、既存日米MDを強化し、周邊同盟國を含ませるという政策を續けている。

東アジア、特に韓國で展開される米國の推進過程は後術するが、米國の新たな覇權戰略であるアジア回歸戰略において、MDがもつ意味を簡略に述べてみる。米國のアジア回歸戰略は、言及したとうり、米國が置かれた經濟的困難を突破するための國家戰略でもあるが、冷戦體制崩壊以後、絶對的强者として存在してきた米國の、新たな世界覇權維持戰略でもある。そしてその力の方向は、經濟・軍事的に勃興している中國に照準が向いている。1970年代末、開放化政策を推進して以來、中國はGDP基準世界第2位國家に成長した。そして軍事費もまた米國に續いて二番目に多く支出する強國として浮上した。先に述べたように、米國のアジア回歸戰略の經濟的、外交的、軍事的な動きは、すべて中國に對する包圍と封鎖、そして壓迫にその焦點

があてられている。そして東アジアで展開されている米國のMDもまた、その主な対象は中國だ。2013年に発表された米議會調査國報告書によると、米國はアジア・太平洋地域で米軍を中心とする兩者同盟關係を連結させる中心軸と、スポークモデルにしたがって同盟國と弾道ミサイル防禦協力を推進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そして中國のミサイル威脅を明示し、韓米日MD協力がアジア回歸戰略と密接に連繫していることを是認している。結局、韓國で今現在進められている米國のミサイル防禦戰略への参加要求は、米國のアジア回歸戰略の重要な一部分なのだ。以下、韓國で展開されているMDの様相とその問題點について述べる。

Ⅲ．韓國のMD展開過程

1. 米國の韓國に対するMD参加要求

米國が初めて韓國にMD参加を要求した時期を特定すること難しい。しかし1996年、中國が臺灣にミサイルを發射し、1998年に北朝鮮が人工衛星光明星1号を發射した頃だと思われる。この發射體が成功したかどうかが問題となったが、米國はそれは人工衛星ではない、弾道ミサイルだと規定して、以前から日本と進めていたMD協力を強化、韓國にMD参加を要求した。日本は北のミサイル發射を主要安保脅威だと規定し、政府次元で弾道ミサイル防禦體制構築を検討し始めた。そしてその年、米軍と海軍全域防禦(Navy Theater Wide Defence, NTWD)に関する共同研究を始め、2002年に日米安保協議委員會を通じて、弾道ミサイル防禦に関する協力を強化することに合意した。續いて2003年には、日本安全保障會議と閣議の決定にしたがい、當時米國が開発していた地上邀撃ミサイル體系のPAC-3と、海上邀撃ミサイル體系のSM-3(Block I A)を獲得、構築することを決定した。

しかしながら韓國の場合、当時の金大中政府は南北關係、および周邊國との關係、經濟的負擔、費用對比效果の問題をあげて、明確な反對立場をあらわした。しかしMDにより積極的なブッシュへと政權が変わると、韓國へのMD参加要求が強くなった。2001年2月当時のチョンテ國防長官は、“わが國の地域特性を考慮し、現段階でのTMD参加は検討しないが、わが國の實情においてはミサイル防禦體制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とみて、代案を検討している”と言及、初めてMDの必要性を認めた。以後金大中政府は、イージス艦とパトリオットミサイル導入を決定し、韓米聯合社内に聯合合同ミサイル作戰機構(Combined and Joint Theater Operations Cell, CJTMOC)を新設し、MD参加への端緒を開いた。以後、盧武鉉政府もまたMD参加には否定的であったが、政權の末期には韓米、または韓米日海上MD體制の前進基地として利用される濟州海軍基地建設を決定し、駐韓米軍基地内にMD體系の一部である早期警報レーザーと、パトリオット指揮部隊の配置を強行し、MDの朝鮮半島展開のための手段を講じ始めた。

金大中、盧武鉉政府がMD参加に否定的、消極的であったのに反して、韓米同盟強化を安保の最優先課題とした李明博政府は、MD参加にも積極的であった。2010年10月に開催された第42

次韓米年例安保協議會議(SCM)において、韓米は擴張抑制政策委員會設置に合意したが、米國の擴張抑制が核の傘、在來式戦力、MDなど、3種からなるという点を鑑みると、韓米間MD協力が制度化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がわくのも当然であった。實際韓米SCM以後に開かれた國會國防委員會國政監査で、'擴張抑制政策委員會設置に合意しつつ、MD體制に加入せねばならない反對給付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民主黨シン・ハクヨン議員の質疑に、キム・テヨン当時の國防長官は、"擴張抑制政策委員會で扱う議題のうちのひとつとして、北朝鮮の核・大量殺傷兵器(WMD)脅威から朝鮮半島を防衛するために、米國側の'地域MD'に関する情報共有と手段運用などを論議する"と發言、疑惑は現實化された。2011年4月、ブレッドリーロバーツ米國防部核・ミサイル防禦政策擔當副次官補は、聽聞會で"私たちは韓國と兩者MD協力問題を論議し、最近韓國がMDプログラムの有用性を關して決定を下せるよう、韓米兩國が要求・分析を施行する約定と協定に署名した"と發言した。これはすでに韓米間でMDに関する研究がきめ細かく進められてきたということを反證するものだ。日米MDの場合も、日本がMD参加を公式化した2003年よりはるかに以前から、彈道ミサイル防禦研究を米國と共同で進めてきた事例を鑑みると、MDに参加するための事前段階としてみるに十分な出來事であった。

2013年2月12日、北朝鮮の3次核實驗は出帆したばかりの朴槿惠政府を、安保危機に追い込んだ。國連の安保理を通じて、核・彈道ミサイル開發との關聯が疑われる北朝鮮の金融取引の一切の禁止を含む、對北制裁決議案を推進した。一方オバマ米大統領は、任期一年目の國政演説で、北朝鮮の3次核實驗を強く批判し、對應策としてミサイル防禦網の強化を宣言した。以後オバマ政府は、米本土防禦のため、米西部海岸のMD戦力を50%増強するとし、アラスカとカリフォルニアに配置されていた地上基盤ミサイル邀撃體制(Ground Based Interceptor, GBI)30基に加え、14基を追加配置するとした。一方、グアムに高高度ミサイル邀撃體制のTHAAD配置を決定した。續いてアジア太平洋地域のMD強化と、韓國とのMD協力強化を推進し、2013年6月1日、シャングリラ會議でジャック・ヘーグル当時の米國防長官は、"米本土と友邦を保護するために、太平洋地域のミサイル防禦を大幅に強化する"とし、"北の脅威に對應するため、韓國、日本と緊密に協力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それに先立つ5月7日、ワシントンで開かれた韓米首腦會談直後に發表された'韓米同盟60周年共同宣言'では、韓米間のミサイル防禦協力が明示化されていた。

最近、韓國でのMD参加論議は、具體的な武器體系の導入問題だ。それはまさしくサッド(THAAD)だ。1980年代後半から開發されたとされるこの邀撃ミサイルは、ミサイル防禦體系のうち、終末段階の上層高度からミサイルを防禦する武器體系だ。



< MD 개념도 >

後術するが、北朝鮮のミサイルに對應するための韓國政府の公式的な立場とは別途に、韓國型ミサイル防禦體系(KAMD)の推進を意味する。このような狀況で、MD體系の核心邀撃ミサイル體制の導入は、韓國型ミサイル防禦體制の全面的な修正を意味する。そのような理由から、韓國政府と國防部はサッドの導入に關して是が非でも否定している。しかし、進められている一連の情況を見ると、政府の言葉どうり信じるわけにはいかない。そしてその破裂は米軍需業體を通してあらわれた。2013年9月10日、最大の軍需企業であり、サッド製造業體であるロックヒードマーチンの副社長マイケル・トロッキーは、社内で開かれたミサイル防禦説明會で、“韓國のパトリオット邀撃システム導入後、次の段階の彈道ミサイル邀撃システム構築を推進しており、彼ら(韓國政府)がロックヒードマーチンのサッドにたいへんな關心をみせている”と發言した。これに對して國防部當局者は、“聞いたことのない話”だと一蹴したが、數ヵ月後に米國防部はサッドの韓國配置を檢討し始め、すでに敷地調査も實施したと明らかにした。米軍需業體マーケティング擔當者の投資誘致を目的にした、機密漏洩となるわけだが、そこには米軍當局の韓國MD參加の重要な政策的判斷が盛り込まれていたのだ。以後、より本格的に韓國にサッド導入を強要し始めた。韓國内サッド配置のために敷地調査が實施された事實が報道されてからしばらくすると、カータス・スケバラティ駐韓米軍司令官は、公式的にサッドの韓國配置を本國に要請したと發表した。これに對して國防部は、“米側から公式的に協調要請があれば検討する”とし、従前の立場とは違う態度を見せた。駐韓米軍司令官のサッド配置要請と關聯して二ヶ月後、韓米聯合軍事演習參觀を兼ねて韓國を訪れたロバート・ウォーク米國防部副長官は、“我々が眞に望むのは、THAADとKAMDとの相互運用性の確保”だと言及し、朝鮮半島のサッド配置に關聯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た。

2015年3月、駐韓米大使へのテロ事件は、サッド問題にまで影響を及ぼした。事件による韓米同盟の弱화를憂慮した韓國保守與黨の議員たちは、韓米同盟の強化のためにはサッドを導入すべきだという論理を繰り広げ、黨論で決定しようと試みた。これに政府は、サッド導入問題と關聯しては、米國からの要請もなく(No Request)、協議したこともなく(No Consultation)、

決定された事項もない(No Decision)という、いわゆる3NOと呼ばれる‘戦略的 曖昧性’立場を闡明し、鎮火につとめた。しかし政府発表の次の日、駐韓米軍司令部はすでに約1年前の韓国内サッド敷地の調査結果を再び発表し、韓国政府壓迫を試みた。5月9日、北朝鮮の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SLBM)発射公開後、韓国のサッド導入攻勢は一層強くなった。5月18日、訪韓したジョン・ケリー米國務長官は、龍山米軍基地で駐韓米軍の前で演説し、“我々はすべての結果に備えなければならず、これこそが我々がサッドに言及する理由だ”と言及した。婉曲された表現だが、MD参加に對する韓国政府の立場を知らないわけではない米外交部の首長發言だという点で、見過ごせないものがある。次の日フランク・ローズ米國務府軍縮・検証・履行擔當次官補は、“サッドが韓国で稼働されれば、全的に北朝鮮の中・短距離ミサイルに對處可能な防衛用武器體系となる”とし、“朝鮮半島にサッド砲臺の永久駐屯を考慮中”と、朝鮮半島サッド配置に對するより露骨な意圖をあらわした。續いて7月12日米議會調査局は、2015年年例韓米關係報告書で、“韓国が獨自在にサッドシステムを購買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そしてある程度配置できるのか憂慮を感じる”と摘示し、韓国政府のサッド導入が韓米關係を判斷する基準となると壓迫した。

2. 韓米日情報共有約定と韓米日MD

記述した韓国に對するMD参加要求は、日米MDと密接な關連がある。クリントン政府當時、米國防部アジア擔當選任輔佐官と、ブッシュ政府當時のホワイトハウス國家安保會議(NSC)アジア選任局長を歴任したマイケル・グリーンは、クリントン政府當時から、この韓米日三角同盟の推進を本格化してきたと發言した。そして天安艦と延平島事件以後、韓米日外交長官たちが集團安保に關する合意文(collective security agreement)をほとんど完成に近くまで作成したが、韓国が最後の瞬間に手をひいてしまった、つまり韓・米・日間の‘準軍事同盟’が準備されていたことを證言した。そしてこの‘準軍事同盟’はアジア回歸戰略宣言以後、MDを通じて進展している。アジア回歸戰略は軍事的な側面から、中國の反接近/地域拒否戰略の核心であるミサイル攻撃能力に對する防衛を主要目標として設定しており、韓米日軍事協力の核心とはMD協力を意味する。そのような観点から、2014年の末に締結された韓米日情報共有約定は、韓米日MD構築のための基盤の準備という重大な意味をもつ。

韓・米・日情報共有約定の母體は2012年6月、李明博政府が秘密裏に推進して韓国國民の強い反對にあい諦めた、‘韓・日軍事情報保護包括協定’(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だ。すでに米國と韓国間では軍事秘密保護協定(1987)が締結されており、日米間にも軍事秘密保護協定(2007)が締結されている状況で、韓・日間にだけ軍事情報共有がなされれば、韓・米・日間の軍事情報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判斷の元、推進された韓・日GSOMIAは、先にマイケル・グリーンが言及した‘集團安保に關する合意文’のもうひとつの形であった。韓・日GSOMIAが失敗すると、韓国と日本の間に米國を挟み込む方式で、韓・米・日軍事情報共有方案を摸索した。

2014年3月25日、オランダのハーグで開かれた韓・米・日頂上會談でオバマ米大統領は、演説で“韓米日間外交と軍事の兩部分に關する結束を強化する、特別に進展された討論が續くことを望む”とし、“その協力はMD體制と合同軍事訓練を含んでいる”と發言した。これは米國の大統領が、韓・米・日MD體系を構築するという公式的發言であった。sのような意味では、以前の政府當局者の發言と質を違えるものであった。そしてその影響はすぐに實質的に可視化した。オバマ發言の2ヶ月後の5月31日、シャングリラ會議で韓・米・日國防長官は、3國軍事情報共有のための實務論議を始めることに電撃合意した。12月8日、上・下院軍事委員會は國防授權法を確定し、“(米)國防長官は(韓米日)3國ミサイル防禦協力強化方案を評價し、これを法案發效後に上・下院 軍事委に報告する”と明示した。これにより韓・米・日情報共有約定を本格的に推進することを示唆した。國防授權法が確定してからわずか20日余りたった12月29日、國防部は韓・米・日情報共有約定が發效されたと發表した。しかしすでに1週間前の12月23、米國が署名し、韓國と日本は26日に署名を終えた状態であった。2012年韓・日GSOMIAが土壇場で霧散した經驗を生かした政府の國民だましであった。

このような韓・米・日情報共有約定は三つの特徴をもつ。一つ目は言及したように、韓・日軍事情報共有のために米國を含ませたという点だ。これは日韓軍事協力に對する韓國人の拒否感を、相殺しようという政治的な意圖が見えかくれする軍事情報共有體系を意味する。二つ目は條約(TREATY)や協定(MOU)ではない、‘約定(PACT)’の形式で締結したという点だ。條約や協定の形の場合、國會の同意を得る必要あり、その過程で社會的な公論化過程が伴うが、それに反して約定にはその必要がない。三つ目はMDを遂行するためには、敵のミサイルに對する探知・識別・追跡・邀撃などに關聯する情報共有が必須的だ。しかし韓・米・日3國は約定を通じてそのような基盤を構築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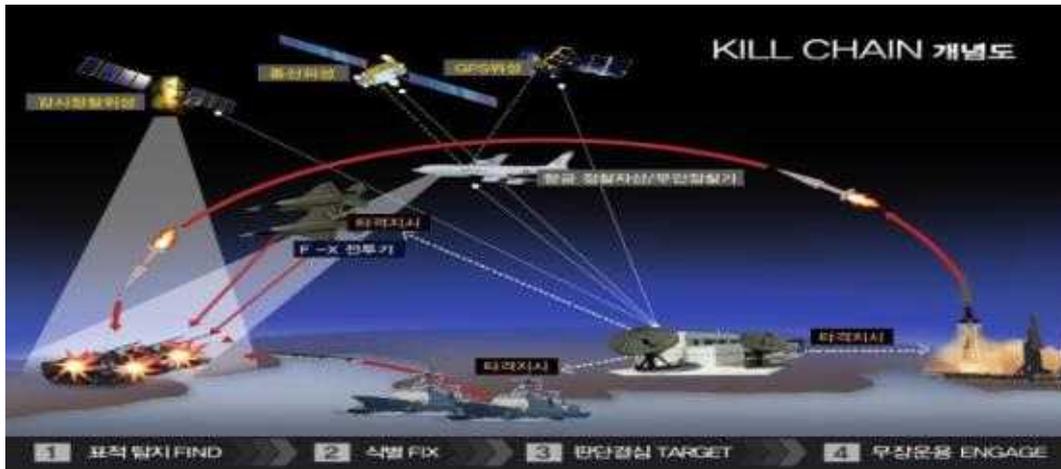
米國は韓・米・日情報共有約定締結について喜びを隠さず、韓・米・日MD協力をより具體化してきた。今年の2月、米國務府軍縮局首席副次官補のアニタ・フリッドは、“昨年末に締結された韓米日情報共有約定がどれほどうれしかったか、私たちはこのような成功を土臺に、韓米日の三角協力を擴大して深めていく”と發言した。續いて3月に訪韓したマーティン・デンプシー米合參議長は、“アジア太平洋地域に統合されたミサイル防禦傘構築が進展しており、韓國と日本は MD體系間相互運用性を高めるために、各自の立場で(MD體系)購買を一部約束した”と發言した。

3. 韓國形ミサイル防禦體制(KAMD)構築問題

韓國はミサイル防禦體制構築と關聯して、日本とは違う立場をとっている。それにともない違った状態へと展開されてきた。日本が初期からMDへの参加を宣言して共同MDを推進してきた反面、韓國はMDへの参加を否定し、獨立的なMD構築というのが現在までの公式的な立

場だ。いわゆる韓国型ミサイル防御体制(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がそれだ。KAMDの概念への初めての言及は、先に記述したとうり、MDを本格的に推進したブッシュ政府が、韓国へのMD参加攻勢水位を高めた2001年チョ・ソンテ当時の国防長官の立場発表であった。当時、金大中政府のKAMD構想は、天文學的な費用對比効果が明らかでなく、上層防御本位のMDが實情にあっていないという現実的な理由にのっとっていた。しかし北朝鮮と中國の反對が火をみるように明らかな状況で、米國の強力なMD参加攻勢を防ぐ代案が必要だという政治的な必要によるものであった。構想としてだけ存在していたKAMDが本格的に推進されたのは、李明博政府の時期、2009年2月、國防部が北朝鮮のミサイル探知・邀撃任務を專擔する彈道誘導彈ミサイル作戰統制所(AMD-Cell)構築を、2012年までに完了すると明示してからだ。朴槿惠政府になり、KAMDはより具體化した。朴槿惠政府は出帆の翌年2013年10月、建軍65周年記念辭を通じて、“キルチェーン(Kill Chain)と韓国形ミサイル防御(KAMD)體系など、北の核・ミサイルに對する對應能力を早期に確保する”と發表した。續いて2014年11月、政府はKAMDの核心構成要素だと言及してきたパトリオットミサイル(PAC-3)136基の導入を決定し、2015年4月、‘2016~2020國防中期計劃に、キルチェーンとKAMD構築豫算として8兆7千億ウォンを配定した。

韓国形ミサイル防御体制のもうひとつの特徴は。たいへん攻撃的な状態で展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KAMDと連繫して推進されるキルチェーン(Kill Chain)がそれだ。キルチェーンは北朝鮮が核、ミサイルなどを發射する前に、韓国軍がこれを先に探知して、先制打撃するという概念で、探知(find)-識別(fix)-判斷・決心(target)-武装運用・打撃(engage)の4段階で構成されている。探知(find)段階では、情報衛星・無人偵察機など、偵察資産を利用して標的を發見する。このとき主な標的にはミサイル發射臺や、北の指揮部までも含まれる。識別(fix)段階では探知された標的の正確な座標を探して追跡し、見逃さないようにする。判斷・決心(target)段階では、探知・識別された標的に對する打撃可否を決定して、地上・海上・空中のすべての打撃手段のうちどれを使うかを判斷して、大統領、國防部長官のような交戦承認權者の承認を得る。武装運用・打撃(engage)段階では、判斷された打撃資産を用いて標的を打撃して、その結果に對する評價と再攻撃可否を判斷する。軍當局は一連の過程をすべて30分以内に完了することを目標に、キルチェーンを構築すると明らかにした。韓国軍はキルチェーンを2016年までに完成するという目標だとした‘2016~2020國防中期計劃に、6兆ウォンの豫算を配定している。これは同じ期間、韓国形ミサイル防御体制であるKAMD構築に配定した2兆7千億の、2倍以上の費用だ。



<킬 체인 개념도>

事實上キルチェーンは新しい概念ではない。これは時限性標的に對して探知(Find)-識別(Fix)-追跡(Track)-決心(Target)-交戦(Engage)-評価(Assess)という、米空軍の力動的な標的處理手續き(Dynamic Targeting Step)の別稱で、'F2T2EA'と称する。米空軍は湾岸戦争當時、イラクの移動式スカッドミサイル發射臺を破壊するために、この概念を構想、演習してきたが、その實效性については依然として問題だ。しかしより重要な問題は、國防部が推進するキルチェーンが、明白な先制攻撃戰略に立脚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すでにミサイル防禦體系上からみると、積極防禦をこえた攻撃作戰に該當する、攻勢的ミサイル防禦體系構築に該當し、北朝鮮のミサイル發射徵候に對する攻撃的判斷と、それに伴う先制攻撃は戦争の可能性を現實化する危險性をはらむ。

韓國型ミサイル防禦體系の構築と關聯したもうひとつの問題は、これもやはりMD參加の主要通路として展開されているという点だ。2011年4月、先に述べたように米國防部核ミサイル防禦政策擔當副次官補ブレッドリー・ロバーツが、韓米間で共同MDに關聯した約定を締結し、研究を進めてきたと發言すると、韓國內では韓國がMDに參加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世論がおこった。これに對し韓國國防部は、“それはKAMDの發展のためだった”と言い譯したが、該當約定の當事者である米ミサイル防禦局のバトリック・オライル局長は、“私たちは全世界約20ヶ國とミサイル防禦研究やプロジェクトを進めており、韓國もそのうちのひとつ”だと明らかし、韓米間の協議がKAMDに局限されたものでは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續いて翌年の10月、韓米はミサイル對應能力委員會(CMCC)を構成することに合意し、“北朝鮮の彈道ミサイルの脅威から朝鮮半島を防禦するためのミサイル防禦體系に關する情報共有と、可用資産運用方案などを論議する”と發表した。しかしこれはKAMDを媒介にした韓・米間のMD協力が、共同研究段階において共同運用段階として進展していることを意味した。2012年6月、韓・米軍當局はオサンに構築される韓國軍の對彈道ミサイル作戰統制所(AMD-Cell)と、駐韓米軍のパトリオットミサイル邀撃統制所を連動して、この間別途に推進してきた韓國型ミサイル防禦體系

(KAMD)と、駐韓米軍の朝鮮半島前駆ミサイル防御体系(TMD)を統合運営することと決める、韓・米間のMD協力を武器体系の共同運用にまで進展させた。

韓国型ミサイル防御体系は、韓国が米国のMDに参加せず、独自のミサイル防御体系を構築するという目標で推進された。しかし結果的には、韓国がMDに編入され方向として機能している。これはKAMDを支持する国内専門家や研究者が、終始一貫してKAMDを追究し指揮統制体制や情報通信、および監視体制分野においては、MDと連繫せね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いることから明らかだ。

4. 韓国のMD参加 `東北アジア軍備増強と新冷戦の導火線

韓国のMD参加問題を検討する際、指摘すべき問題は、周辺国の反応、特に中国の立場と態度だ。言及したとうり米国の東北アジアでのMD体制構築が、中国をねらっている。中国はこれを正確に認識しており、韓国のMD参加を韓中関係のマジノ線ととらえているからだ。

中国は1980年代、台湾との葛藤がふかまり、米軍が台湾を支援するために南中国海に進入して以来、明示的・潜在的敵対国が自分達の勢力圏内に入ってくることを阻止するために、軍事戦略として反接近・地域拒否戦略(Anti-Access/Area Denial, A2AD)を採擇した。米国の安保戦略シンクタンクであるレンド研究所の報告書によると、中国のA2AD戦略は、米海軍の航母遮断などをののために最優先的に航空機、ミサイル、潜水艦など、中長距離打撃武器体系を動員した攻撃能力を備えている。あわせて韓国と日本に配置された海外米軍基地の、奇襲・無力化を主要内容としていると摘示した。中国は米国のMD体制構築が、A2AD戦略の核心であるミサイル能力を無力化させ、中国の抑止力を毀損すると認識している。そして東北アジアで展開される日米間、韓・米間MD体制の進展に強い反対立場を表わしている。

昨年の5月、米下院が国防授權法に韓米日ミサイル協力強化方案樹立を立案、米國防部が韓国内のサッド配置を検討しており、敷地調査を終えたという報道が出ると、中国外交部は、“朝鮮半島へのサッドを配置は、地域の安定と戦略的均衡にの妨げだ”という公式立場を發表した。そして中国官營新華通訊は、“サッドを韓国が受け入れる場合、中国との関係を犠牲に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警告し、“このシステムは朝鮮半島情勢の警護員ではなく、雷管になる”という論評を出し、より強硬な立場をみせた。續いて昨年末、韓米日情報共有約定締結が可視化すると、華春瑩中国外交部の代辯人は、12月26日の定例ブリーフィングで、“(韓米日軍事情報共有約定)關聯報道を見守っている”とした。そして、“關聯國が相互對話と信頼を促進し、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を守るために努力し、その反対にならないことを願う”と發言して、遠回しに憂慮意思を表明した。しかし中国官營環球時報は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の環球網で、“米・日・韓軍事情報共有約定は、アジア地域で北大西洋條約機構のような機構をつくり、中国を封鎖しようという意圖が盛り込まれているため、これを實現するために再び北朝鮮を犠牲

にするだろう”と、“結局米・日・韓同盟は、ミサイル防御體系構築に乗り出し、これは中國に不安定な影響を及ぼすだろう”と、より直接的で攻撃的な論調で立場を明らかにした。

韓國のMD参加、そして米日MDの強化は、東北アジアの新たな武器體系導入、および開発と全般的な軍備増強につながっているため、新たな問題を誘発する。2013年2月、日米はミサイル邀撃用レーザーであるX-バンドレーダーを、日本の京都の日本航空自衛隊基地に追加配置することを決め、翌年6月には装備を運用するために、MD指揮統制システムであるC2BMCを構築することも決定した。日本は今年の4月、安部総理の訪問にあわせ、5兆規模の武器を購入することに決めたが、これにはMD體制として運用される可能性のある空中早期警報統制機などが含まれていた。韓國の場合も昨年3月、1兆6千億ウォン規模のパトリオットミサイル(PAC-3)導入と性能改良事業を決定した。1砲隊当たり2兆規模のサッドの導入可否でさえ問題となっている状況だ。中國は米國のミサイル防御網を破ることができる、マッハ10の速度の極超音速ミサイル実験を認めた。中國國防部は、“中國人民解放軍が18ヶ月間、極超音速飛行體を計4回実験したが、これは他國や特定目標をねらったものではない”とした。しかし上海政法學院の何奇松國防政策専門家は、“WU-14(この飛行體を指す)は、ミサイル防御システムをやぶるため設計された”と明かすことで、中國もやはり米國のミサイル防御體制を無力化させるための武器體系開発を進め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

このように、各國のMD關聯武器體系の導入、および開発が東北アジアでの持続的な軍費増強のもうひとつの原因であることは確かだ。昨年、米議會調査局(CRS)がが發刊した報告書によると、2014年國防授權法案に含まれたMD豫算は、計86億8850萬ドル(韓貨約9兆2000億ウォン)で、米國防部が要請した金額より3億ドルが増額されたものであった。財政赤字で國防費削減要求に直面している米國としては異例的な増額であった。これに對して中國もまた持続的に國防費を増額している。今年の3月に開かれた全國人民代表大會は、中國國防豫算が8890億人民元(韓貨約155兆3600億ウォン)にのぼるだろうと發表した。これは米國の國防費5,340億ドル(韓貨約624兆ウォン/ 2015年基準)には満たないが、前年對比で10%の増額金額だ。あわせて韓國と日本もまた持続的に國防費を増強させている。日本は2002年以後、國防費を減縮してきたが、安部總理政權後、3年連続増額して4兆8994億円(韓貨約44兆9500億ウォン/ 2015年基準)に達した。韓國も持続的な國防費増加の勢いを維持しており、國防部は來年豫算として40兆1395億ウォンを提出、史上始めて國防費40兆時代を豫告した。しかしこれにはKAMDとキルチェーン構築のために、今年より70%が増額された豫算が含まれている。このような韓・中・日の國防費増加は、2012年から換算した場合、アジアで増加した國防費の57%に達すると把握される。

このような東北アジアでの米國のMD體制構築がもたらす、より重要は問題は米國のMDに對應するため、中・ロシア間が軍事的協力を強化させ、新たな冷戦を造成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すでにロシアは2002年このABM條約を破棄し、自國に對するMD配置をこえ、東ヨーロッパ

パにMD配置を推進した。するとこれを深刻な核安保脅威要因、または戦略的不安定要因として規定し、ヨーロッパでの米國の独自のMD體制構築に強力に反対してきた。最近になってロシアは軍事的行動まで行うようになったが、2013年11月、プーチンロシア大統領は、米國のミサイル防御をやぶる新型ICBMを、戦略ミサイル軍に 實戦配置すると明らかにした。今年の3月、米國がポーランドで合同ミサイル防御訓練計画を公開し、NATOがバルト海沿岸で合同軍事訓練を実施すると、ロシアは45,000人の兵力を動員して、大規模訓練を実施し、向かい火を放った。ロシアはヨーロッパのMD體制だけではなく、韓國のMDに対しても敏感な反応をみせている。昨年7月、ハン・ミング国防長官が、“駐韓米軍のサッド配置が朝鮮半島安保態勢を強化するに役立つだろう”と発言すると、ロシア外務部は“ MDシステムの朝鮮半島展開は、東北アジア地域の戦略的情勢に否定的な影響を及ぼし、この地域の軍備競争を觸發するだろう”と 反対立場を明らかにした。

米國のアジア回帰戦略にしたがい東北アジアMDが本格化すると、中・ロシアはこれに対応して實質的な軍事協力を推進し始めた。今年の5月、始めて開かれた中・ロシア東北アジア安保對話で、中國の習近平主席と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は、中・ロシア關係を全面的な戦略協力同伴者關係と設定した。そして‘東北アジア地域の平和と安保のための新たな枠組み’を、共同で推進することで合意した。また、中國・ロシアの首腦は共同聲明を通じて、米國のMDを指稱して、“一方的で全地球的範囲のミサイル防御體系を開發、配置することは、國際情勢の安定に有利でなく、國際安保も損傷させる”とし、“他國の安保犠牲に頼って、自國および集團の安保を保障しようという試みを中斷すべきだ”と、米國のMD構築試圖を強く批判した。續いて中國・ロシアは史上初めて黒海での聯合海上訓練を実施し、ロシア戦勝70周年行事閱兵式では異例的に中國軍が最後のフィナーレを飾り、兩國間軍事協力の強化を誇示した。

IV. 結論

米國のアジア回帰戦略は國內的にみると、2008年モーゲージローン事態以後、經濟が衰退の一途をたどり登場した對外政策と關聯した縮小論と、介入論の争いで介入論の勝利が歸結した米國の新たな世界覇權戦略だ。最近になって經濟が多少回復をみせてはいるが、急浮上する中國を制壓するには力不足だと思われる。中國が主導して成立させた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には、米國の公開的な反対と壓力にもかかわらず、英國、ドイツなど、傳統的な米國の同盟國を含む、約50ヶ國が参加しており、世界最強の國家米國の位相に致命的な傷をつけた。これに對抗して米國は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を立てて挽回しようと試みたが、米國內でも批判の聲が高まり、12ヶ國當事國閣僚會議が協定締結をめざす合意に失敗すると、オバマ米大統領は政治的な危機に陥った。

このような状況で、アジア回帰戦略を推進しようという米國の早急症は、軍事的部分に集中し

ている。今年の4月、オサン米空軍基地を訪れたアシュトン・カーター米国防長官は、朝鮮半島を含むアジア・太平洋地域の戦略的重要性を強調して、“米國が今投資している多くの新たな軍事力がこの戦區に投入される”とし、米國のアジア回歸戰略を軍事的に支えていく意思を表明した。これは實質的な軍事力配置につながっており、7月3日の米國の聲放送報道によると、米太平洋司令部隷下の兵力が24萬4000人から、26萬6000人へと増加し、海兵隊航空機は416臺から630臺に、海軍航空機は1056臺から1111臺に増加したという。あわせて米國はアジアから主要軍事的でパートナーである日本、オーストラリアなどとの協力も強化している。特に日本の安倍政権の集團的自衛權行使と關聯しては、すばやく支持と歡迎の立場を明らかにして、日米安保協力指針を改正することで日本の軍事力行使の領域を全世界へと擴張させた。また米國は、安倍政府の退行的歴史認識と歩みによって葛藤に陥った日韓關契と關聯して、露骨に日本の味方となり、過去に執着するなど韓國政府を壓迫している。これは歴史問題による米國推進の韓米日同盟の遅延は許せないとの態度であり、その核心には東北アジアで中國を對象にするMD體制の構築が居着いている。

東北アジアでの米國のMD體制構築と強化は、調べたとうり中國・ロシアの軍事的結束を強化させる結果を招き、この地域での新たな冷戰構圖を形成する要素となっている。北朝鮮が核開發と關聯して中國などと疏遠になっているが、北朝鮮もやはり米國のMDに反對の立場だということを見みると、韓・米・日のMD體制が進展され、中國・ロシアとの軍事的葛藤がひどくなる場合、中國およびロシアは北朝鮮との軍事的協力を強化するだろう。これは韓・米・日の對北・中國・ロシアの對決構圖を形成しつつ、冷戰時代と同じく朝鮮半島での軍事的對決の恒常化と分斷の鞏固化を招く一方、東北アジアの平和を脅かすだろう。

発表2



日本におけるミサイル防衛(MD)展開過程 -Xバンドレーダーと駐日米軍 `東アジア

大灣 宗則 / 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反対京都/近畿連絡會 共同代表

ご紹介にあずかりました「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反対・京都/近畿連絡會」共同代表の大灣宗則でございます。本集會にお招きいただいたことに心から感謝と連帯の挨拶を送ります。私の報告は、「日本でのMD展開過程・・・(Xバンドレーダーと駐日米軍、東アジア)・・・日本におけるミサイル防衛(MD)展開過程」となっています。

与えられた演題を報告しつつ、私は本日、なぜ日本政府がかくも集团的自衛権行使容認や辺野古新基地建設、原發再稼働に固執するのか、このことが京都・京丹後への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の配備とどんな関係があるのかについて報告致します。

京都府・京丹後・宇川地区とはどんなところか？

Xバンドレーダーの强行配備された地元・経ヶ岬(宇川地区)は、風光明媚なジオパークにも指定された國定公園の中にあり、景観と環境、絶滅危惧種ハヤブサをほども日本に残された数少ない自然が豊かなところですが、ただ、若者や子どもが少なく、老人だけが取り残された、人口わずか1700人の過疎化が進んだ地域です。

もう1つの「顔」は、地図で見るとXバンドレーダーが配備されたすぐ右に海上自衛隊のイージス艦などが母港とする舞鶴軍港があり、又その右には原發銀座と言われるほど多くの原發(關西電力所有)があり、舞鶴軍港の右下に福知山陸上自衛隊基地、その右下の滋賀縣・高島市に響庭野自衛隊演習場があります。

更に宇治市や京都市南區桂には自衛隊兵站基地があります。これらXバンドレーダー、舞鶴軍港、福知山陸自、饗庭野軍事演習場、桂や宇治の兵站基地をつなげば、日本海に面した最大の軍事要塞がつくられつつあります。

Xバンドレーダー配備の経過

2012年、オバマ大統領と当時の民主党内閣の野田首相が日本に青森の津軽自衛隊分屯基地につづいて二番目の米軍Xバンドレーダーを配備することを決定、場所は公表されませんでした。

2013年2月、オバマ大統領と安倍首相會談において二番目のXバンドレーダーは京都府京丹後市の宇川地區、穴文殊のある航空自衛隊経ヶ岬分屯基地で合意され、隣接する土地を新たに地権者から賃借して基地を擴張し、配備すると決定しました。

防衛省は、「日本防衛のため」「地區の活性化の公共施設整備」「借地代を通常の37倍超（通常一反8,000円のところ300,000円）」、地元京丹後市には米軍再編交付金として年間3億円（10年期限付きで30億円）で合意を取りつけ、これを京都府が追認するなど、飴と鞭、その上で政府・防衛省が住民に「責任もって皆さんの安心・安全を保障します」、こうして無理矢理基地建設を住民に飲ませました。

14年の5月には基地建設着工、10月にはXバンドレーダー搬入、12月末には運用が始まりました。

闘いは開始された！

勿論地元、京都市に住む私たちや近畿の人々の中から反対の聲が上がりました。

地元では「米軍基地建設を憂う宇川有志の會（通称；「宇川・憂う會）」、京都府には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反対京都連絡會（通称・「京都連絡會）」、近畿には「近畿連絡會」が結成され、闘いに立ち上がりました。

この基地建設に對して2013年、地元・「宇川・憂う會」の人々が行った反対署名で1000人中過半数以上が反対署名に応じましたが、住民の多くは實際の反対運動には立ち上がっていません。

お年寄りたちは「子供は都會にでてもう還ってこない、わしらはもう年で先がない」と、村の將來に絶望して「お上（政府・京丹後市）には逆らえない、基地は仕方ない」と受け入れていきます。過疎化の人々の歴史的な深い絶望が見られます。

私たちは、京丹後への米軍Xバンドレーダー配備が、地元の人々の「安心・安全」を脅かしているだけでなく、東アジアの軍事的緊張を激化させ、日本の戦争政策を加速させ、辺野古への新基地建設の口實となっている、そのように位置付けで反対・撤去闘争を今日まで進めてきました。

予想される地元被害と現実 防衛省の政治的詐欺行為 `地元の住民を苦しめています

Xバンドレーダーの受け入れ表明から土地の借り上げ、基地建設の着手、Xバンドレーダーの

本体搬入、運轉開始、これら一連の過程で防衛省は、「住民の安心・安全の確保」と「丁寧な説明と問題が起こったときの適切な対処」を住民に約束してきました。結果は全て防衛省が嘘をついたこととなります。まさに政治的詐欺行爲です。

沖縄戦で軍隊は住民を守らない、と聞かされてきましたが、それは70年前のことではなく、知りたければ経ヶ岬の宇川へ行けば一目瞭然、これが國家の姿です。

環境影響評価はまともにやられず、絶滅危惧種のハヤブサの生息調査も「関係ない」と退けられました。美しい景観は醜いレーダー基地特有の外観で台無しになりました。レーダー24時間稼働による騒音と低周波音による健康被害（頭痛、耳鳴り、めまい、吐き氣、乳児が乳を飲まないなど）、160人の軍人・軍屬の配備により事件・事故は運用開始わずか2ヶ月で16件、現在18件、その内17件は「公務中」と言うことで日本の司法と警察権は排除されました。

地元だけでなく京都府や近畿でも説明會を求めましたが一度も実施されていません。これらに對して再三防衛省、京丹後市に抗議をしましたが、政府・防衛省は、「安保・防衛・外交は國の専權事項」、「日米地位協定に従って運用している」とのこと。

私たちの現地に関わる基本方針

私たちは、①環境・景観という自然は人々の共有財産であり、②安保・防衛・外交が國の専權事項という政府の言い分を認めず、沖縄の闘いの教訓として「海も空もこの大地もそこに住む主權者のものだ」、③「日米地位協定に國內法を適用するよう改正しろ」、④「知る權利の保障として住民説明會を実施しろ、民主主義破壊は許さない」、⑤米軍Xバンドレーダーは日本防衛のため、という防衛省の言い分に反論し、経ヶ岬のレーダーは米軍・グアム基地防衛の集団的自衛權であり違憲である、と抗議してきました。

現地闘争の意義と「京都/近畿連絡會」の闘い

この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反対・撤去の闘いは、現地・地元の主權者の闘いを掘り起こすこと、そして地元の当事者が闘いの前に出てくること、同時に地元の「安心・安全」だけでなく、東アジアの緊張激化を阻止し東アジアの平和を闘い取る闘いへと發展させることを追求してきました。

建設着工に對して、又、レーダー搬入に對しても「近畿連絡會」としてそれぞれ400名の人々がデモ行進して基地建設現場とゲート前に抗議行動を行いました。又、「憂う會」呼びかけに応じて超党派で二度に亘って800~1000人の現地集會を成功させてきました。

「京都連絡會」は、獨自在毎月2回、地元宇川地區1700人に對して各戸訪問活動を行い、闘争ニュースを各戸配布し、住民と對話しながら立ち上がりと呼びかけてきました。この外、京都及び近畿各地で報告會、パンフと會報の發行も行いました。

こうした地道な活動は、地元宇川だけでなく、京丹後市廳舎所在の峰山や伊根町、網野町、宮津市などに共鳴する仲間と出會えました。

又、現在、軍屬（シュネガ社）約60人の共同住宅建設に関して住民の意向調査を無視して建設が強行されています。この共同住宅建設予定地だった地権者が土地賃貸契約を拒否し、私たち「近畿連絡會」の立て看板を立てることに土地提供して賛同してくれました。

私たちの闘いはこれからもつづきます。

Xバンドレーダー基地配備がもたらした東アジアにおける緊張激化

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配備は、地元の人々に被害と民主主義破壊をもたらしてい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中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朝鮮國と略す）との政治的・軍事的緊張関係を一層悪化させ、軍擴競争に弾みがかかっています。

日本政府はいつからMD（ミサイル防衛）に取り組んだか？

経過はこうです。朝鮮國の核実験は2006年 2009年に行われました。また、朝鮮國によるミサイル発射実験は1993年 1998年 2006年 2009年に行われました。

1998年、朝鮮國からテポドン I が発射され、1999年、同じく朝鮮國から人工衛星ロケット「銀河2」が発射されました。この時、日本政府・防衛省は、「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発射実験を行った」と騒ぎ立てました。

事態を承けて小泉純一郎内閣は2003年12月19日の安全保障會議および臨時閣議において、『日本版弾道ミサイル防衛（BMD）』のシステム導入を決定しました。そして2004年度から、毎年1,000億円から2,000億円の予算を計上し續けて、ミサイル防衛体制の構築と研究開発を續けてきました。

こうした日本政府の対応に応じて中國でも軍事費の増大と海洋進出がありました。日本政府は、中國の軍事費増大と海洋進出、朝鮮國の核とミサイル開発を脅威と宣伝し、それに對応する名目で2006年、青森・津輕自衛隊分屯地に日本で最初のXバンドレーダーを配備しました。

現在 `日本のMD展開

2015年度防衛白書は要旨次の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

2004年度から弾道ミサイル防衛（BMD：Ballistic Missile Defense）システムの整備を開始した。05年には、自衛隊法の所要の改正を行い、同年、安全保障會議と閣議において、弾道ミサイル防衛用能力向上型迎撃ミサイルの日米共同開発に着手することを決定した」と。

2006年から始まった日本のMD戦略は、具体的配備は、PAC-3、SM-3、GMD及びレーダー網の整備として進んできました。

更に「イージス艦を6隻保有、SM-3は32發保有。PAC-3約200發保有」しています。

防衛省・自衛隊は、今後、イージス艦については「あたご」型2隻へのBMD能力の付与を繼續するとともに、BMD能力を有するイージス艦2隻を増勢して8隻態勢とする予定です。また、全ての6個高射群にパトリオットPAC-3を2015年度までに配備する、としています。弾道ミサ

イルの探知・追尾能力を強化するため、自動警戒管制システムの能力向上やFPS-710固定式警戒管制レーダーの整備および能力向上を推進する」、としています。

また、これら日本独自のMD体制整備以外に、「米國保有の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の一部が、わが國に段階的に配備されています。具体的には、米軍車力通信所にTPY-2レーダー（いわゆる「Xバンド・レーダー」）が配備されている。また、同年12月以降、BMD能力搭載イージス艦が、わが國およびその周辺に前方展開しています。さらに、同年10月には沖縄縣の嘉手納飛行場などにパトリオットPAC-3を、07年10月には青森縣の三澤飛行場に統合戦術地上ステーション（JTAGS：Joint Tactical Ground Station）を配備しました。さらに、京都府の空自経ヶ岬分屯基地がTPY-2レーダー（Xバンドレーダー）の追加配備先として選定され、13年12月、配備に必要な施設・區域を米國に提供」、14年4月にXバンドレーダー搬入、同年12月に運用を開始しました。

「米第七艦隊にはイージス艦が9隻あり、全てSM-3搭載。在日米陸軍もPAC-3を配備（384發）。これに加え、有事には米本土からTHAADを含めた増援部隊が派遣されます。日本の弾道ミサイル迎撃態勢は世界でもトップクラスです」（防衛白書）と。

日本のMD強化の理由 アメリカの軍事戦略の転換

イラク・アフガン戦争の行き詰まりからアメリカの軍事戦略が轉換されています。それは「對テロ戦略」と「アジア・リバランス（アジア回帰）」に代表されます。

この戦略の基軸は、アメリカの經濟覇權の維持・擴大であり、これに見合った軍事戦略の再編です。（アメリカが進める宇宙での軍事戦略はここでは省きます。）

アメリカの經濟覇權を求める標語は「グローバリズム（自由貿易）」です。だからこの自由貿易を望む反体制派への援助（ウクライナやシリア反政府勢力）、自由貿易に反対する反政府勢力の抑壓（ISイスラム國）、自由貿易を拒否する政府（シリア勢力）への軍事的恫喝、いずれにしてもアメリカは自由貿易を支持するグループないしは國とは仲良くし、自由貿易を受け入れないグループ又は國は破壊・抑壓するという軍事的行動規範です。これらを對テロ戦として戰略化しています。

これに對應する兵器体系は、海兵隊方式であり、オスプレイや強襲揚力艦、ヘリ空母、水陸兩用戦闘駆動車などです。

今ひとつは、「アジア・リバランス=アジア回帰」に代表されるアジア市場への權益擴大、そのための對中國や對朝鮮國、イランなどとの國家間戦争も辭さずという「軍事的緊張」作りです。これに對應する兵器体系が核開發、弾道弾やMD開發競争です。

このアメリカの軍事戦略がもつ2つの要素（對テロとアジア回帰）は、自由貿易体制を守り、その上で經濟權益の擴大を図る、それだけでなく、常時、國家間の戦争の危機を演出しながら國民に恐怖心を与え、國家に「國民の生命と財産を守って欲しい」、という國民統合を作り出しています。

しかもアメリカは財政悪化の中で軍事費削減を義務づけられており、そのことの解決として軍事的に有志連合間の共同作戦を要求しています。この共同作戦は、兵器の統一、共同生産、武器弾薬の統一、指揮・情報の一元化、アメリカ基地を除く基地の共同使用などアメリカ中心に再編しています。

この共同作戦方式は演習費の分担制による経費の削減と統一規格の兵器販賣などでアメリカの利益につながり、同時にアメリカ兵の死者を少なくし、自國の反戦運動を押さえるという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各國支配者は、盟主アメリカと「自由や民主主義、人権という基本価値を共有する（市場経済・資本主義を守る）」という前提の下で、それぞれの力量、得意分野で利益を追求し、そして何よりも現在の支配体制を維持するということを第一に相互に協力関係を結んでいます。これが集团的自衛權の核心です。

なぜ、日本政府はMD（ミサイル防衛）に積極的なのか？

その1 近隣への軍事的挑発と國內統一

MD配備は、通常、MD（ミサイルディフェンス）といわれるように、防衛的な用語として使われています。しかし、これはまやかしです。先制攻撃をした後、仮想敵が報復してくることへのMD（ミサイル防衛）です。

なぜなら、先制攻撃は報復を前提にしていますから、全勢力で先制攻撃をし、打ちもらしたところからのわずかな反撃にMDは効果的なのです。日本がこのような先制攻撃・戦略兵器体系を導入するには、よほどの説得力、又は「恐怖心」を國民に植え付けなければ導入は不可能です。

だから對外的な軍事的緊張関係を演出する必要がある、これなしに國民的な合意を得られないと判断しているからです。これが對中國、對朝鮮國、更にはイランに對する日本政府の挑発的な外交であり、彼ら中國や朝鮮國が一層軍事的擴張を呼び起こすよう仕向けているのです。

その2 日本の核武装能力の保持と抑止力

忘れがちですが、日本がなぜ、原発再稼働にこだわるのか。これもMDと関係があります。再稼働なしに原発輸出は競争関係にある相手國におくれを取ります。また、原発再稼働はプルトニウムという原爆製造の必需品の生産に不可欠です。

日本にはH2ロケットの開発に見られるようにロケットの飛行距離、機体の耐熱・耐震、衛星軌道に載せる機器調整技術も世界水準で、あと残った課題は原爆の小型化です。

日本政府はこれまで「核の生産、保有は憲法上許される、ただ、非核三原則に従って生産、保有しない、政策として取らない」、とっています。ただ、今は政策として取らないと言っているだけで、これが將來も守られるかどうかは憲法解釋まで変えて集团的自衛權の行使に踏み切った安倍政権を目の前にすれば信用なりません。すでに宇宙基本法の改悪で宇宙の安全保障の法整備を終えています。

その他、H2ロケットの改善は早期警戒衛星を独自開発し保有する狙いが見えます。日本の技術水準であれば簡単にものにするでしょう。プルトニウム・U2ロケット核武装・核弾道開発能力の維持こそが仮想敵に対する攻撃力・抑止力になる、と国民を取り込んでいるのです。

武器輸出を解禁した日本政府は、秘密保護法で国民の耳目を塞ぎながら産學官軍の体制で武器の独自開発、共同開発、武器輸出を進め、日本の軍需産業の確立と裾野を広げ、装いを新たにした「死の商人」を作り出しています。

その3 安倍内閣の排外主義的挑発の意味

靖國神社参拝、慰安婦、領土（釣魚・尖閣諸島、獨島・竹島）、教科書などこれらをまとめて歴史認識において安倍は排外的で挑発的です。このことは安倍の個人的性格ではなく、日本帝國主義が今なさんとしているアジア戦略遂行の手段だと言うことです。

その4 日本政府は對中國、對朝鮮國との國家間の戦争を眞劍に意識しているのか

結論だけ言えばこれは目くらませです。この点は日本のアジア（世界）戦略の中で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本のアジア戦略と兵器体系

経ヶ岬への米軍Xバンドレーダー配備、憲法違反の安保法制案の強行採決、そして辺野古に新基地建設強行、更に原発再稼働というこの4つは日本支配層のアジア戦略と密接に関係しています。

日本のアジア戦略、それは日本獨占資本によるアジアと世界に広がる企業進出と資本投資の拡大、これらの資本・企業の経済権益拡大と防衛であり、それを保障する軍事・兵器体系の整備です。

アメリカはじめ歐州及びその他全ての國家は、現代世界の経済状態が歴史的な破綻の危機にあることに気付いています。

集团的自衛權の行使容認とは世界の國家支配層たちがこの資本主義の歴史的危機に立ち向かい、同盟を結び、共同して自國と海外で人民の反政府闘争を押しやる戦争を準備しています。

日本政府の進める安保法成案の強行採決は、これまでの憲法九條の解釋を変え、日本も海外派兵して他國と共同作戦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です。日本にとっては憲法違反の海外派兵です。この海外派兵の出撃據点こそ辺野古の新基地建設なのです。

なぜ安倍内閣は集团的自衛權・海外派兵の法整備を急ぐのか？

昨年7月1日、集团的自衛權の行使容認と、同時に辺野古に新基地建設を開始する閣議決定を行いました。その理由として「中國の海洋進出、北朝鮮國の核とミサイル開発の脅威、（こうし

た) 安全保障関係のかってない国際的な変化の下では一國では日本を守れない、だから集团的自衛権だ」、「危険な普天間基地を辺野古に移設、沖縄の負担軽減と抑止力の確保、これが唯一の解決策だ」という口實で行われました。

しかし、彼ら政府が建前として言っていることと彼らが準備していることからくりがあります。日本政府が今、いかなる事態に対応せんとしているかを見極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を見極める2つの事実を提供します。

1つは、アジアにおける日本の海外權益です。2015年版経済産業省の「白書」によりますと日系企業のアジアへの進出は、中国・ASEANに約30,000社、南西アジア・中東・ロシア・CIS・中南米に約3,000社、アフリカに約500社と報告されています。特にアジアには世界から投資されている資本の約60%以上が日本資本（權益）です。

アジアにおける日本企業で働く現地の労働者の劣悪な労働条件、差別的な労務管理（日本本國の非正規労働者2,000万人の実態とそれ以下で労働しているアジアの労働者実態を想起せよ）は至るところで労働争議、時には暴動として頻発しています。こうしたアジアにおける日本独占資本の權益が脅かされていることへの危機感こそが、アジア人民を抑圧するための海外派兵、この出撃據点としての辺野古新基地建設強行であり、安倍内閣が集团的自衛権の行使容認・戦争法案の強行採決の背景です。

勿論、日本政府は、安保法制=海外派兵ということ「アジアでの日本企業（權益）と人命救助」という自らの意図を国民大衆にあからさまに表明できません。「中国や朝鮮國の脅威」を前面に出して安保法制への國民の同意を取りつけ、「アジア人民抑壓」に備えているのです。

このことの1つの証明として維新の党が戦争法案の一部に修正案を提出しました。その中味は「集团的自衛権行使から（ホルムズ海峽の機雷掃海することをやめさせる目的で）経済的理由で海外派兵はできない」というものでした。自民・公明・維新で協議の末、自民・公明が飲めないと突き返しました。突き返した本意は、それは単に、ホルムズ海峽での機雷掃海ができなくなるだけでなく、近い将来、アジアその他世界中で日本の経済權益をおびやかす労働争議、反政府闘争が起こったとき、日本の海外派兵に経済的社会的理由で制限が加えられることを嫌ったからに他なりません。

資本家階級は、起こるべき体制危機を予感して（集团的自衛権）同盟を強めています。

世界的な規模で起っている資本の国際競争は、資本の労働に対する搾取と支配の国際競争を意味しており、この標語こそ生産性向上運動です。この結果、世界中で労働者間の競争と対立が起こり、格差、差別と貧困、平和と人権が脅かされています。現在のところ、多国籍資本の下で働く現地労働者のそれら資本家に対する反逆は世界的に起こっており、資本家階級の共通の目から見れば「事態は資本主義体制の危機」と受け止めています。しかし、労働者階級はそのことを自覚していません。資本家階級が集团的自衛権を急いでいる眞の理由を見つけれないでいるのです。

自衛隊が調達している兵器体系とその目的

次に現在、日本政府が調達している兵器体系から日本のアジア戦略を理解することです。日本政府は2014年の中期防衛計画（5年計画）で25兆円確保しました。

この25兆円の中から既に2014年度、2015年度予算で自衛隊が調達している兵器は、オスプレイ17機）、無人偵察機・グローバルホーク、水陸両用戦闘駆動車、F35ステルス戦闘機、強襲揚力艦、他に國産のヘリ空母型護衛艦・出雲と高性能潜水艦などです。

これらの兵器は現代の核やミサイル保有国同士の国家間の戦争で使用する兵器ではありません。これらの兵器体系は海兵隊仕様です。これら兵器が使用できる条件は、①つは、敵對國又は敵對勢力が制海權・制空權を争う兵器を持っていないこと（例えばアメリカが行ったイラク戦争又はアフガン戦争）、②は、内戦状態の國家で、その國の自由貿易勢力（共通の価値觀を共有する國又は勢力）から要請と同意を得て、その國の領空・領海・領土に海外派兵する時に限られます（例として「朝鮮戦争」「ヴェトナム戦争」、現在のシリアにおける反体制派への支援など）。

國會における「安保法制論議」は的を射ていていない。

現實の兵器調達で日本の自衛隊を海兵隊仕様の軍隊に改変しながら現在、安倍内閣は、中國・朝鮮國を「仮想敵」として「國家間の戦争」に備えると國民に説明し、集团的自衛權を行使できるように安保法制案成立を強行しています。

しかし、中國・朝鮮國を「仮想敵」にあげていますがこれは目くらませです。國民の關心を惹きつけるトリックです。

今日、核やミサイル兵器を持ったアメリカや中國が「無人島」の尖閣（釣魚）諸島を巡って國家間で制海權、制空權を争うことは殲滅戰を覺悟しなければ決斷できません。万一始まったら兩國だけでなく、地球上に生物が生存不可能な事態になります。

又、今日、米中、日中など「仮想敵」同士は、金融、貿易など經濟相互依存の情況で國家間の戦争をする根據がありません。仮に海や空で部分的に軍事的接触があったとしてもそれはそれぞれの國家における愛國的ナショナリズムをかき立て、國內矛盾を隠蔽するための芝居に過ぎません。

今日、世界で繰り上げられているMD（ミサイル防衛）を含む軍擴競争も軍事的必要を叫んでいますが、實はその軍事的要請よりも政治的經濟的欲求から行われていると判断します。現代の資本主義國家は、常時「戦争の危機」状態を高進することなしに存立できないという矛盾の中にあります。

次に、日本政府が進める戦争の性格を知るために集团的自衛權と辺野古新基地の關係を検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辺野古につくられようとしている新基地は、オスプレイ基地であり、水陸両用戦闘駆動車が常駐し、ヘリ空母、強襲揚陸艦が接岸できる護岸が計畫されています。この外、新基地建設がつ

くられるキャンプ・シュワブの隣が海兵隊訓練基地のキャンプ・ハンセンがあり、辺野古弾薬庫や八重岳に米軍通信レーダー基地があります。こうしてみると辺野古新基地は、オスプレイのための総合的な基地です。

政府は、辺野古の新基地建設が日本防衛の抑止力になると言っています。

このオスプレイ基地が国家間の戦争のためか、権益擁護のアジア人民抑圧基地であるかを点検してみましょう。結論を先に言えば、国家間の戦争目的ではなく、それ故抑止力たり得ず、紛れもなく日本独占資本と支配者たちのアジアにおける経済権益擁護の出撃拠点としてつくられ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

改めて辺野古新基地建設の概要を思い起こして下さい。

まずオスプレイについて検討してみます。オスプレイは墜落事故率が高い、人口密集地での訓練が人道上危険だと批判されています。それもありますが更にこのオスプレイの兵器としての役割を徹底批判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オスプレイは、垂直離着陸機だから滑走路がいらず、砂漠、ジャングル、山岳、市街戦に適した兵器です。このオスプレイの飛行は、相手国の同意があるか、制海権・制空権が確保されているところしか飛行できません。この点は水陸両用戦闘駆動車も海兵隊それ自身も同じです。相手国の同意なしに領海・領空・領土に侵入すれば相手国の主権を侵す侵略となり、「國連憲章違反」となります。

辺野古新基地の今ひとつの特徴は、強襲揚陸艦やヘリ空母も接岸できる軍港が設計されていることです。これらは水陸両用戦闘駆動車やオスプレイを運搬する艦船であり、これら全体の兵器体系は、国家間の戦争よりアジアで予想される反政府人民闘争鎮壓部隊の兵器体系です。辺野古新基地建設反対の闘いが国際連帯を不可欠にしている理由です。

戦争法案、辺野古新基地建設と京丹後にXバンドレーダー基地配備の関係

以上のように安倍内閣の安全保障に関わる軍事戦略は、一方でMD導入やロケット開発、原発再稼働など国家間の戦争をうたい文句に進めながら、實のところ他方では、海外派兵を可能にする戦争法の成立と辺野古新基地建設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この軍事戦略実現のために安倍が取り込んでいるのが国民の支持を得るために愛國的排外主義です。それは、靖國、慰安婦、教科書、領土問題で歴史認識の対立を煽り、パトリオット配備やXバンドレーダー配備のミサイル防衛（MD）などで徹底して中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對する挑発であり、脅威の宣伝です。

少しまじめに考えれば政府の嘘を暴くことができるはずですが。

ところでこのXバンドレーダー基地の役割はグアムの米軍基地に向けて朝鮮國から發射された弾道ミサイルをキャッチし、それを日米共有の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で迎撃する、というものだそうです。

「そうなんだ・・・」と人々は思われています。この作戦が実践されれば紛れもなく集団的自衛権の行使に当たります。このレーダー基地の役割は集団的自衛権による核戦争の前線基地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

ところで朝鮮國がなぜ、米國のグアム基地を攻撃する理由があるのか、なぜ、朝鮮國が軍事大國アメリカに先制攻撃を仕掛けるのか。朝鮮國にその能力も米國と経済的対立もありません。

安倍は、仮に日本海に航行中の米軍艦船への朝鮮國から攻撃があれば、集団的自衛権を發動して米軍援護のため自衛隊が朝鮮國に攻撃する、と言っています。この答弁ほど愚かな論理はありません。なぜなら、日本には在日米軍が駐留し、横須賀に米第七艦隊があり、日本海に米軍イージス艦、その他朝鮮半島を米軍が取り囲んでいます。勿論、舞鶴を母港にする日本のイージス艦も日本海に展開しています。國家間の全面戦争に發展する恐れのあるこのような攻撃を想定した國會論議は無意味です。米軍は自力で応戦できないほど弱っている、と日本政府は見ているのでしょうか。

安倍首相の論理をもう少し現實に当てはめて考えれば次のようです。経ヶ岬のXバンドレーダーについてみてみましょう。

仮に、朝鮮國が米軍又は米國に先制攻撃をグアムに仕掛けたら、朝鮮國の指揮官はその報復を予想しないでミサイルをグアムに発射させるだろうか。それでももし、グアムが目標なら真っ先に経ヶ岬のレーダーを攻撃した後ではないのか、報復を予想しているとしたら報復してくるだろう米軍及び同盟國の沖縄・日本、韓國などの軍事基地もはじめから攻撃対象にして、グアム基地への攻撃と同時に、又はその前に発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いずれにしても朝鮮國からの米軍グアム基地への先制攻撃は非現實的で、起こりえません。ましてや米中開戦が起こりえた場合はこの地球と共に私や皆さんも生存していない。経ヶ岬の米軍Xバンドレーダーは役立たずで不必要であり、ただ、東アジアの軍事的緊張を高め、軍擴を煽り、軍需企業を儲けさせるものでしかないのです。

政府は「安保關係の重大変化」をいうが、昔を知るものはこの手品にだまされません。「冷戦時代」のピーク時にソ連が約4万發、米國が約3万2000發の核弾道が張り巡らされていた頃と比較して、今がその当時より「國際關係が悪化」しているなどと誰が信じますか。

国際連帯だけが平和の砦

このように経ヶ岬のXバンドレーダーは、その軍事的意義よりも政治的・軍需産業的利害から配備されているものと理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経ヶ岬のXバンドレーダー撤去の闘いは、住民の「命と暮らし」「安心安全」を守る闘いと、それと並行して東アジアの軍事的緊張を取り除き、安倍が進める戦争法案（海外派兵法案）と（その前進基地としての）辺野古新基地建設のための埋め立てを阻止する重要な課題ということを改めて訴えます。

報告1

米軍基地返還協商を通して見た環境汚染問題

シン・スヨン / グリーン코리아 (Green Korea United)

怪物になってしまった土地

米軍基地による環境問題と、その解決を求める下からの抵抗は、幾度も社会的な 이슈 になってきた。長期間のひどい騒音、誤爆、および 不発弾事故にが続き、汎国民的な抵抗運動が展開された梅香里射撃場闘争(2000年)。 駐韓米軍が漢江に劇物を放流した事件(2000年)などを契機に、米軍基地による 環境被害に対する社会的公論化が始まった。國家安保を理由に、その被害を個人が耐え忍ぶことを強要し、同盟関係という殻の中で駐屯國の環境をめちゃくちゃに 汚染しても、駐屯軍を監視、制裁することができない現實に人々は怒り始めたのだ。

梅香里射撃場は2005年に閉鎖され、漢江劇物放流事件以後、韓米SOFA協定に附屬書 という形の環境條項がつくられたが、米軍基地による環境問題は発生し續けた。

2003年11月、米國の海外米軍再配置計劃(GPR/Global Posture Review)が發表され、2004年龍山米軍基地および、米2師團移轉協定が締結された。また國會認准を受けて以來、朝鮮半島内の米軍基地の閉鎖、返還、移轉など、大規模な再編計劃が進行中だ。その過程において、幾度か米軍基地環境問題は膨れ上がってきた。2007年に汚染狀態そのまま返された米軍基地23ヶ所は、汚染の程度がたいへん深刻であったので、政府の協商過程に關する國會聽聞會が開かれるほどであった。2011年には退役した駐韓米軍人が、朝鮮半島での枯葉劑の埋立と、核兵器事故を證言し、環境被害の深刻さ、その規模と程度に關する問題提起がなされた。それだけではなく、最近までも返還予定であったり、使用中の米軍基地での環境汚染事故は絶え間なく発生している。

米軍側に汚染責任を問えない韓國政府

今年の3月、駐韓米軍基地のうち2ヶ所(釜山DRMO、東豆川キャンプ・キャッスル)の返還協商が完了した。今回も韓国政府は汚染状態そのまま米軍基地を返還され、関係機関は全く協商が完了した事実を公表しなかった。市民団体が抗議して公開質議すると、答辯書を通じて確認しただけだ。今回の協商は2016年までに返還が予定されている、29ヶ所の米軍基地の道しるべとなってしまうことが憂慮される。

韓米SOFA環境諒解覚書に摘示された汚染浄化基準である‘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人間健康に対する公知の急迫で 實質的危険)が曖昧だという意見がでると、補完策として韓-米間合意にしたがって2009年、共同環境評価手続き書(JEAP)が導入された。

しかし共同環境評価手続き(JEAP)が初めて適用され、返還協商を進めた釜山キャンプ・ハエリアの場合、2009年JEAPの危害性評価を通じて▲全地面積53萬 3830㎡のうち土壌1,356㎡(0.26%)、浄化費用3億ウォンを豫想したが、實際 2011年の返還以後、土壌精密調査を実施した結果、▲全地面積53萬3830㎡のうち、汚染土壌 9萬5,877㎡(17.96%)、實際浄化費用146億ウォンが使用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このようにキャンプ・ハエリアの事例ででてきた問題点にもかかわらず、韓-米政府はJEAP手続きに関する改善もないまま、今後も持続的に返還米軍基地に JEAPを適用することを合意した。ただ、釜山ハエリアの場合を先例とはしないと公表したが、釜山DRMO、東豆川キャンプ・キャッスルの場合、汚染度に 危害性があるという結果が引き出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浄化責任を米軍側に問いただせない。

返還協商が完了した米軍基地だけではない。今後2016年までに返還が豫程されるソウル龍山基地、プピョンキャンプ・マーケット、今後も使用する平澤キャンプ・ハンフリーでも、基地内部の汚染源による汚染徴候が繰り返し現れている。

龍山米軍基地の事例

龍山米軍基地による油類汚染事故(2001年ノクサピョン 驛近隣、2006年キャンプ・キム近隣)当時、韓国政府と駐韓米軍側は、基地内部は駐韓米軍側が、外部はソウル市が浄化作業を行うことと協議した。事故以後、2015年現在までにソウル市が基地外部で 汚染地下水を揚水処理してモニタリングしているが、依然として許容基準値の数十 倍から1000倍を越えるベンゼン、TPHなどの発癌物質が検出されている。

汚染地下水を揚水の処理しても内部の汚染源が解決にならず、つづいて基地の外部から汚染物質が検出になるソウル市の指摘と市民団体および住民たちの度重なる抗議にSOFAの環境分科の實務會議を通じて韓国政府はこの5月、龍山基地内部の地下水のサンプルを採取した。分析結果について「不平等な韓米SOFA改正國民連帯(市民団体のネットワーク)」が情報公開を請求したが、非公開處分をもらって現在訴訟が進行中である。

- 龍山米軍基地 綠莎坪(녹사피ョン)驛のまわり(South Post)の年度別の地下水汚染の最大濃度(単位: mg/L)

年度別	ベンゼン	トルエン	エチル ベンゼ	キシレン	石油系銃彈 化水素TPH
浄化基準	0.015	1.0	0.45	0.75	1.5
2004	29.354	17.4	1.57	8.39	65.2
2005	20.997	17.2	2.23	9.16	13.7
2006	29.229	12.2	2.88	12.71	133.2
2007	20.810	12.2	2.30	7.57	102.1
2008	28.122	10.2	1.95	8.36	81.7
2009	22.752	9.9	1.55	8.63	218.0
2010	15.556	6.6	5.41	25.76	228.1
2011	42.745	9.5	34.06	52.13	8,060.1
2012	19.671	8.4	1.21	8.77	74.4
2013	15.200	3.1	2.02	4.79	6.4
2014	8.678	3.515	1.305	4.215	56

- 龍山米軍基地 キャンプ・キム(Camp Kim)のまわり年度別地下水汚染の最大濃度(単位: mg/L)

年度別	ベンゼン	トルエン	エチル ベンゼ	キシレン	石油系銃彈 化水素TPH
浄化基準	0.015	1.0	0.45	0.75	1.5
2008	16.680	145.74	271.46	813.35	9,867.4
2009	0.011	0.013	0.623	0.128	4,315.0
2010	0.007	0.04	0.694	0.221	2,382.0
2011	0.004	0.11	0.24	0.030	1,436.8
2012	0.014	0.07	0.015	0.007	966.2
2013	0.006	0.10이하	0.018	0.005	1,821.7
2014	0.008	불검출	0.023	0.037	6651.3

資料の出所: 2014年綠莎坪驛の周辺/ キャンプ・キムの周辺の汚染地下水の擴散防止及び浄化委託報告書の結果の整理

富平(プピョン)米軍基地(キャンプ・マーケットおよびDRMO)の事例

やはり 2016年に返還豫程であるプピョンのキャンプ・マーケットDRMO(廃棄物処理所)周辺地域の土壌からベンゼン、鉛、PCBなどの汚染物質が確認されており、過去に各種汚染物質を扱っていた記録が発見され問題となった。

2012年富平區、2014年に環境部が富平の米軍基地である キャンプ・マーケットおよび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米軍国防再利用販賣事務所, 約8万8千m²)の周辺地域に對するちょうさを實施した結果、猛毒性物質のダイオキシンがとても高い數値で検出された。

ダイオキシンが2,3,7,8-TCDD、毒性等価係數の濃度で55.748 pg-TEQ/gまで検出になったが、これは2009年の韓國の平均だった2.280の24倍、最高濃度16pg-TEQ/gの3.5倍にあたる。得に表土だけではなく深土からもダイオキシンが検出になったのは水にと溶けず、熱科學的に安定しているダイオキシンの特性を考慮するとき、富平米軍基地の内部から有毒物質の埋め立てなど人為的な攪亂があったのを推定させる。無色、無臭のダイオキシンは毒性が青酸カリの1万倍で人類が作った一番の猛毒性の物質である。分解になれたり他の物質と間單に結合にできないため、自然的に消滅されず一度人体に吸収されたら体内に蓄積され種々なガンと健康の障害を起こすダイオキシンだけではなく、キャンプ・マーケットの周辺地域では土壤汚染憂慮基準を超過した各種のオイルおよび重金屬の汚染物質が検出になった。同じように1987~1989年に富平DRMOから處理した廢棄物の量がPCB(Transformer oil)448ドラム缶、水銀廢棄物10ポンド、アスベスト2,580ポンド、バッテリー酸(Battery acid)118缶、ソルベントスラッジ(Solvent sludge)82ドラム缶、ハイポソリューション(Hypo solution)77ドラム缶に明示されている過去の米軍側の資料³⁸⁾も確認された。

この事例の以外にも騒音、誤認射撃、地雷などによって基地の周辺の住民たちの被害は多様に發生する。

繰り返す米軍基地の環境問題 `改選のために

繰り返す米軍基地の環境問題の原因は韓-米の間、力の不均衡によって韓國政府が自分の聲を出すことができず、環境事故により關連手續きおよび制度が変わってもその實効性がないからだ。

韓-米同盟など、軍事・安保のフレームとは別途に、環境汚染問題への解決に乗り出さなければならぬ。米軍基地はソウル、釜山、プピョンなどの、人口密集度が高い都心にもあり、農・漁業、作物栽培など、土地・海洋を直接利用する地域にも散在する。このような生活環境の中で、油類/重金屬/有害化學物質などが長期間流出すると、國民健康權と環境權が侵害される。すでに騒音、地雷および誤認射撃の危険などに露出になっている住民の被害の規模は見当

38) 1991年米工兵団の内の建設研究所が外部委託を通じて發刊した「米8軍と在日米軍の危険廢棄物最小化方案」(Hazardous Waste Minimization and Treatment Opportunities in the Eighth U.S. Army and the U.S. Army, Japan)

がつかない。

返還米軍基地環境汚染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環境調査結果、および汚染事故などに関する情報の公開から、汚染事故が発生する場合、基地内部への接近権、および調査権保障、韓-米共同調査保障、平常時の駐韓米軍の環境管理基準強化、返還手続き改善、およびSOFA 環境条項改正まで、様々な課題が山積している。このため中央政府と該当自治体は米軍側に基地内の汚染の誘発施設に対する常時的な点検と情報の共有を要求して環境事故が発生する場合、資料の提出と解決を積極的に求めるなど現在より前向きな姿勢が必要だと思われる。特に主務部署の環境部は、返還米軍基地環境汚染問題解決をめざし、国防部、外交部など、關聯中央部署と共に、米軍の環境政策に関する情報共有と戦略を通じて、現実的な 協商案をつくるために努力せねばならない。何回の訴訟で韓國の司法府が米軍基地による環境問題を環境主權と國民の權利の問題に解析しただけに、國民の知る權利と環境權を守るための社會的な努力が必要だ。これは環境団体を含め、市民社會が長續き持っている宿題でもある。

報告2



日本の安保法制推進と問題点

糸数 慶子 / 参議院議員、沖縄社会大衆党委員長

紹介

1947年、沖縄県読谷村に生まれる。米軍占領下で育ち、基地の重圧と平和の尊さについて身をもって実感。読谷高校を卒業後にバスガイドに就き、常に平和の視点と自然と文化にスポットを当て沖縄を紹介、平和ガイドのさきがけとなる。

1992年の沖縄県議会議員選挙において「もっとピース、もっとフェア」を訴え初当選。市民本位の政治とチャレンジ精神の旺盛さが幅広い支持を集め、3期連続当選。

2004年の参議院議員選挙に挑み、初当選。06年11月には沖縄県知事選挙に出馬。平和、環境、教育、福祉、女性問題を柱に活動を続ける

○現在沖縄社会大衆党委員長の他、基地・軍隊を許さない行動する女たちの会共同代表、カジノ問題を考える女たちの会共同代表、平和ネットワーク会員、沖縄ゾンタクラブ会員、沖縄県馬術連盟会長などを務める

○著書『いのちの聲—女性・環境・平和の視点から』『沖縄戦と平和ガイド』『沖縄の風よ薫れ』（平成27年8月現在）

第8次 韓・沖・日 国際シンポジウムによせて

韓国そして日本、沖縄から、東アジアの平和実現のためにお集まりの皆様、こんにちは。参議院議員、糸数慶子です。日本では、国会が戦後最長の会期延長となり、今日は国会日程のためにシンポジウムに参加できず、非常に残念に思っています。

さて、8月14日に戦後70年を記念して安倍首相が談話を発表しました。この談話について

は、日本が先の大戦で甚大な損害を与えてしまったアジア諸國に對し、反省の意を表し、お詫びを行うかということが注目を浴びていました。結果として内容は形式的なものにとどまり、アジア諸國に對する侵略戦争への反省と謝罪のことは入っていましたが、誠意に欠けていたと私は感じました。かつて日本は自國の利益のためにアジア近隣諸國を植民地化し、數多くの罪のない方々を犠牲にしました。それに對し、日本人として心から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また、このような悲劇を二度と起こさないように、日本の國會議員として全力をあげて取り組んでいくことを誓います。

日本の國會では7月半ばに安全保障關連法案が衆議院において強行採決されました。この法案は、日本が戦争をできるようにする法案です。戦後70年間、日本は「戦争をしない國」として國際社會のなかで平和國家としての地位を確立してきました。それが可能だったのは、日本の憲法が武力による國際紛争の解決を禁じ、戦争の放棄を定めているからです。しかしながら安倍政権は憲法を軽んじ、閣議決定で憲法解釋を変え、「集团的自衛權の行使容認」を決定してしまいました。國會では、参考人として招かれた3名の學者全員が「集团的自衛權の行使は違憲」と判断し、國民の多くが反對したにもかかわらず、力でねじ伏せたのです。國會の外ではたくさんの國民が法案の廢案を求めて抗議デモを行っています。今日本では、法案に反對して抗議活動を行うのは、組合員や政治団体だけではありません。高校生や大學生、子どもをもつ母親たちが立ち上がり、デモを行っています。これは近年例を見ない動きです。この動きをどんどん廣げていけば、安全保障關連法案は必ず廢案にできる、と確信しています。

現在の日本では國民の意思が反映されない政治がまかり通っています。その最たる例が沖縄の基地問題でしょう。沖縄本島の面積の18%は米軍基地に占められています。現在、宜野湾市の32%、讀谷村35%、北谷町52%、金武町57%、嘉手納町にいたっては83%が米軍基地に占められている状況です。外國の軍隊がこのように自國の領土を占領し續けていることは異常なことです。日本政府は、その負担を沖縄縣のみに押し付けて、さらに新しい基地をつくって米軍に提供しようとしています。

韓國でも同様だと思いますが、米軍基地の負担は様々な面に及びます。米軍機による爆音被害、米軍人、軍關係者が起こす事件、事故、なかには強姦などの凶惡犯罪。深刻な環境汚染問題。そして最近特に話題になっているのが、經濟發展の阻害です。今や沖縄では、基地に土地を提供するよりも、返還して有効利用したほうが、數十倍の經濟効果が得られることがわかってきました。基地が沖縄の經濟發展の機會を妨げ、縣民の生活の向上に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沖縄縣民の基地に對する不満が募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なかで、事件、事故、環境問題等が発生しても、日米地位協定によって、縣民は非常に不利な立場に立たされます。日本の法律では裁けない事例も多々あり、泣き寝入りを強いられることも日常茶飯事です。日本政府はこれまで「日本の安全保障のため」という名目のもと、米軍を優先して日

本國民の生活をないがしろにしていますが、それでは本末転倒です。日本の平和な未来のためには、東アジア諸國と政治、経済、文化とあらゆるレベルで友好関係を結び、東アジア地域を安定させていく努力を怠らないことが大事です。安倍政権は安全保障関連法案や靖國問題、慰安婦問題などで近隣諸國の人々の日本に対する信頼を損ね續けており、非常に残念でなりません。この現状を打破するために、私も國會のなかで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後も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ともに連帯してまいりましょう。

報告3

オール沖縄の辺野古・戦争法案反対

高橋 年男 / 普天間基地 爆音訴訟団

今年、「本土防衛」「天皇制護持」の捨て石とされた沖縄戦から70年の節目の年である。1945年沖縄戦の後も沖縄は、米ソの冷戦構造や新生中国に対するアメリカのアジアを睨む軍事據点として、米軍統治下におかれた。1950年の朝鮮戦争を契機に「反共の防波堤」として米軍基地の拡充が図られた。「銃剣とブルドーザーによる土地強奪」で住民は故郷を奪われ、生活も人権も何もかもすべてを奪われた。日本の米軍基地の4分の3が集中する基地・沖縄の原点がこの朝鮮分断である。その後も沖縄は、ベトナムをはじめアジアの人々から「悪魔の島」と恐れられた。平和を脅かす星条旗は、アジアから出て行け！

2011年に発表された米「アジア回帰」戦略により、この地域に暮らす私たちは今まで以上に平和的生存権を脅かされ、日常的な基地被害に直面している。アメリカが主導する日韓米MD（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構築は、アジアに軍事的緊張を招きよせるものである。

今年4月28日に合意された日米新ガイドライン＝日米の軍事同盟強化は、アジアの平和を脅かすものであり、その中心に置かれた沖縄はアジアのボトムである。

経済成長が停滞し財政破たんを深める「戦争依存症」のアメリカでは、ますます軍事産業が経済構造の中で比重を増し、生き残りをかけて世界中に戦争の種を播き続けている。アジアにおいて中国・北朝鮮をはじめ日本の近隣諸国との対立をあおり、軍事的緊張を高めることで兵器・装備を売りつけ軍事利権の拡大を狙っているのである。そのアメリカの戦争にのめり込み、軍事的一体化を飛躍的に加速し、従属を深めるのが安倍政権による憲法違反の戦争法案だ。

日本の国会における戦争法案をめぐる安倍政権に対する批判が急速に高まりを見せている。民意を踏みにじる辺野古新基地建設に対する沖縄の直接行動が、国民世論を置き去りにして強

行採決された戦争法案に対して、10万人を超える國會包囲の人々の背中を押したのは間違いはない。

昨年7月1日、「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を閣議決定したその同じ日に、安倍政権は「辺野古工事着工」をマスコミ報道によって大々的に宣言した。アメリカは、沖縄の抗議の拡大が辺野古を頓挫させるのではないかと、安倍政権の実行力を「値踏み」していることに對する政府のパフォーマンスであった。しかし、實際は「アスベスト」の混入した米軍兵舎の外側ブロック塀を一部分削っただけで、翌日には違法な工事は中斷した。

辺野古反對を掲げて昨年12月に誕生したオール沖縄の翁長縣知事を支える縣民の直接行動により、埋立の本体工事の前段階のボーリング調査さえ、19カ所中15カ所が終了したと發表されたが、いつ完了するかいまだに目途さえ立っていない。民主的手続きを踏みにじって強行する政府に、沖縄は海でも陸でも非暴力の直接行動で立ち向かい、縣内各地で「島ぐるみ會議」が結成されるなど、共感を擴大してきた。

6月23日、沖縄戦慰霊祭では、發言台に向かう安倍首相に、沖縄戦の遺族が「戦争屋は出て行け。安倍、歸れ！」鋭い叫び聲をあげた。この映像は世界中のメディアが報道した。

直後の6月25日、自民党本部で開かれた「文化芸能懇話會」で百田尚樹が「沖縄の2紙は潰さないといけない」と發言し、それに同調した自民党議員が「廣告掲載をやめるように経団連にも協力してもらおう」氣勢を上げた。安倍側近と安倍本人の本音である。沖縄のまっとうな叫びが、全國・全世界に波及することに、青ざめさせよ！

特定秘密保護法から打ち續く「戦前回歸」の安倍政権の暴走は、沖縄にとっては20万人の犠牲を出した沖縄戦のように、再び沖縄を戦場にする時代錯誤の極である。一旦戦端が切り落とされたなら、沖縄は生命線の海上輸送・生活物資が枯渇するどころか、中國を睨む沖縄の軍事基地は、逆に中國核ミサイルの射程内の標的となり、わずか2～3發で消滅する。日米軍事演習（ヤマサクラ61）においては、沖縄と台湾は「破壊地帯」とされて消滅し、「日本本土」が戦場になって廢墟となる米中戦争のシナリオが使われている。

米軍は中國のミサイル射程の外を確保、被害は及ばない作戦である。國境の島＝与那國にレーダー基地を作り沿岸監視部隊150名を配備する計畫は、米軍のシミュレーションに沿うものである。

日米兩政府による辺野古新基地建設の強行に對して、《オール沖縄》の阻止行動に熱い想いを寄せる人々がいる。5月15～17日の平和行進と縣民大會に、韓國（濟州）から16名の人々が参加した。炎天下を汗だくで行進し、一緒に座り込み、國際連帯のメッセージを發した。濟州（韓國）と沖縄は、アジアの平和連帯の核心現場であり、3万5千名が結集した縣民大會では《オール沖縄》の熱氣を共有した。韓國の反基地運動が沖縄との連帯を求めるのは、沖縄の米軍基地が朝鮮半島の分斷を固定化する駐韓米軍・國連軍司令部の指揮下にあるからである。

辺野古に新たな基地を造るということはアジアに一触即發の軍事的緊張關係を生み出し、沖縄

を再び戦場に突き落とすものである。戦争法案の強行は日本國民を再び「東洋の鬼」に変えてしまうものである。絶対に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

1995年の少女レイプ事件、2004年沖縄国際大學への米軍ヘリ墜落、2007年教科書（沖縄戦の歴史改ざん）問題、2010年の民主党政権による辺野古回帰。沖縄は節目節目に10万人規模の縣民大會を開いて聲を上げてきたが、振興開發費や官房機密費をバケツの底が抜けたようにつき込んで、政府は選挙のたびに沖縄の民意を分断してきた。

しかし、米軍基地關連収入が沖縄返還前の經濟的困難を抱えていた1960年代には依存度が50%近くに上ったが、今や基地返還跡地の經濟効果などが顯著であり、基地依存度はわずかに5%に過ぎない。雇用や稅收の面からも、もはや「基地は地域發展の最大の障害物」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また、沖縄に米海兵隊を置くことに地政學的根據がないことも、鳩山元首相が「抑止力は方便であった」と告白したように、欠陥機オスプレイを沖縄に押し付ける理由は何もなかった。

沖縄は目覺めた、決して後戻りはしない。こうした決意を込めて10万人が結集した2012年9・9縣民大會實行委員會は「オスプレイ撤回・普天間閉鎖・辺野古斷念」の建白書を携えて2013年1月、日米兩政府に對する東京行動を打ち抜いた。そして、この東京行動銀座デモにおいて、「日の丸」を林立させた右翼集團から「中國共産党の手先、沖縄は日本から出ていけ、ドブネズミ、ゴキブリ、・・・」と、沖縄縣内全ての市町村長・議長、國會・縣會議員などからなる上京団はあらん限りの罵聲・ヘイトスピーチを、《東京で》浴びた。

オスプレイをめぐる一連の「東京と沖縄」の對決から、「構造的沖縄差別」という言葉が沖縄では普通一般に交わされるようになった。米軍基地をめぐる、もはや住民同士が保革に分かれて對立する理由はなく、戦後70年を目前にした昨年の縣知事選挙では、「イデオロギーよりもアイデンティティー」「基地のない誇りある豊かな沖縄を實現しよう！」がスローガンになった。

翁長知事はこの夏にも辺野古建設の違法・不当性を明らかにし、知事の行政權限行使によって工事差止の準備をしている。沖縄縣議會も、琉球列島の自然環境を保全するために、辺野古埋立の土砂を縣外から持ち込むことを規制する條例を可決した。「辺野古土砂搬出反對」全國連絡會という市民運動が13都府縣を網羅して結成された。

さらに、9月下旬には翁長縣知事の國連での演説も決まった。「沖縄のことは沖縄が決める」と、堂々と「自己決定權」を主張し、アジアのボトムから連帶を求めて國際世論を味方につけ、辺野古の工事を阻止していく決意である。

今年2月に辺野古埋立予定地の淺瀬から見つかった「碇石」が6月30日、沖縄縣教育委員會によって本物の文化財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琉球が中國・アジアとの交易で榮えていたことを示す歴史的文化財である。これは琉球の民が近隣諸國と友好關係を結び、多文化共生の豊か

さを享受していた時代を今に伝えるものであり、中国との軍事対立を意図的に煽り立てる日米両政府の辺野古新基地建設に対して、「立ち止まれ！」と琉球の古の時代から歴史を超えた警告のようでもある。ともあれ、礎石の発見された現場では文化財調査が始まり、埋立本体工事には相当の期間、手が付けられない状況が続く。礎石が辺野古を止めている。

アジアの人々と連帯し、辺野古阻止、戦争法案廃案の直接行動の波を、いっそう大きなうねりにしよう！(2015年8月2日、記)

濟州海軍基地建設過程と未來

コ・クォンイル / カンジョン村會副會長、濟州海軍基地反對對策委員會

はじめに

濟州海軍基地建設問題が提起されてから3000日がすぎた。すぎさった歳月の間、どのように闘い、どのようなことがあったのだろうか。濟州海軍基地問題は今やカンジョン村だけの問題ではなく、皆の問題である。この言葉は、事業の結果だけが問題ではなく、過程の中での痛みもまた皆の問題として受けとめね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このような趣旨で事業推進初期からの過程を詳しく探り、少しでもカンジョン海軍基地問題への関心が高まることを願い本稿をまとめた。

以下では濟州海軍基地建設と關聯して、時期別にどのような問題がイシューとなっていたのかをまとめ、今後の問題を豫想してみる。

濟州海軍基地建設過程の問題点

カンジョン村に濟州海軍基地建設問題があらわれたのは2007年4月だ。この時期は盧武鉉政權の末期で、米國とのFTA締結と不動産政策の失敗で守勢に追い込まれていた。國外的には米國の對テロ戦争が失敗に終り、惡化の一途をたどっていた米國經濟狀況と連動して、アジア回歸戰略とともに同盟國に役割分擔を強要していた時期であった。盧武鉉政府は結局、2006年に米國と‘戰略的柔軟性協約’を結び、米國は朝鮮半島の米軍を削減するという態度をみせた。これは保守陣營に戦時作戰權変換留保への大きな名分を提供し、盧武鉉政權の東北アジア均衡論と自主國防論は事實上幕をおろした。戦時作戰權還收論争は、戰略的柔軟性協約の骨子である米軍の役割を、韓國軍が一程度引き受けるにしたがって、‘朝鮮半島以外の地域で韓國軍の参加を公式化する協約’として、違憲的要素が多分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イシュー化することを不可能にした。また米軍基地の移轉と建設費用を韓國政府が負擔する問題も、社會的世論

から遠ざかった。

このような雰囲気の中、カンジョン村に濟州海軍基地問題が舞い込んできたのだ。後に續いた李明博政権は經濟回復を口實に、海外資源開發と4大江事業を押し進める一方、國防費を大幅に削減した。韓國型航空母艦計劃はもちろん、イージス巡洋艦2隻の建造後、追加確保計劃を中斷し、次期高速哨戒艦(PCX)計劃さえも中斷しながら、土建事業である濟州海軍基地建設事業だけは強力に押し進めた。沖縄では撤収するようにみえた米軍がそのまま再配置され、むしろ基地擴張へと進んだ。これにともない濟州道内米海兵隊移轉憂慮が消えた背景を利用して海軍は、濟州海軍基地が大韓民國海軍の獨自計劃であると積極的に廣報した。ひいてはただの海軍基地ではなく、濟州道觀光産業に寄与する軍民複合型觀光美港であると強調し、道民の世論を懐柔し始めた。

1. 手続き問題`イシュー`時期 (2007~2008)

これにカンジョン村は、大韓民國海軍事業強調に反對する場合、親北勢力だと避難されるといふ判斷から、カンジョン村會は'住民と村が生きてこそ、國家も生きる'というモットーの元、濟州海軍基地建設事業は住民主權と住民自治を蹂躪する事業だということに焦点をあてて反對運動を繰り廣げた。また立地妥當性調査と事前環境性檢討さえなかった事業だという点、事前に事業説明會が一度もなかった事業だという点を知らしめ、手続き問題に集中した。

當時カンジョン村の住民は必ずしや勝利するという自信に満ちており、2008年豫算附帶條件である'軍民複合寄港地'イシューを見逃してしまつた。それもそのはず、住民全體の82%が反對しているという世論があり、まだ事業告示前であつた。何より事業對象地が絶対保全地域であつたためだ。したがって當時カンジョン村會は海軍や國防部より、濟州道政を相對に、より強力な闘争を展開した。2008年カンジョン村會は濟州海軍基地反對を訴え、全道内を一周する徒步行進を行つた。しかし島民の雰囲気は以前のように熱くはなかつた。長期的な經濟沈滞におちいつていた濟州島は、海軍の觀光美港廣報に耳を傾け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

2. 環境影響評價`絶対保全地域`イシュー`時期 (2009~2010)

2009年1月29日、國防部長官が濟州海軍基地事業を、國防・軍事施設事業に關する法律にもとずき告示すると、カンジョン村會は即刻、環境影響評價を受けず事業を告示した違法性を問題提起し、行政訴訟をおこすと同時に、絶対保全地域死守闘争に突入した。

連日、道廳前集會が開かれ斷食闘争を續け、道政と道議會を壓迫した。自然生態優秀村の認定を返納し、2次徒步行進を行つた。また削髮闘争と道議會封鎖闘争を展開したが、2009年8月にはお粗末な環境影響評價報告書が出され、2009年12月17日、道議會が強硬に絶対保全地域を解

除すると、海軍は2010年3月事業変更告示を行った。そして裁判所は待っていたかのように海軍に勝訴判決を下した。

この過程での重大な變曲點がキム・テファン道知事住民召還運動であった。住民召還運動のきっかけは、濟州島と海軍間のMOU締結であった。アルトゥルー飛行場無償譲與(1988年アルトゥルー飛行場空軍基地建設反對以後、濟州島においては空軍からの返還が道内最大關心事のうちのひとつであった。後日このMOUが濟州島は軍民複合型觀光美港と、海軍は濟州海軍基地と事業名稱が二重に作成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がなされないMOU内容は、濟州海軍基地反對世論とあわさり、急激に高まった。公式には約7万人の召還署名を受けたと発表した。住所が曖昧であったり、署名を正字で記入しなかった者を除いたとすると、約12万人をこす濟州島民がこの召還運動に参加したことになる。島知事の職權が停止され、投票が實施されたが、行政機關が投票妨害に積極的に動き、投票率が30%に満たず、開票さえできない運動となってしまった。召還運動の失敗はカンジョン住民にとって、大きな挫折であり、絶対保全地域解除と裁判所の敗訴判決はそこにくさびを打つ結果となった。

3. 運動消滅期 (2010末~2011初)

2010年3月天安艦事件が全國を覆った。天安艦事件はその年の地方選舉で野党陣營を没落させた。濟州島もまた野党候補のコ・ヒボンではなく、ウ・クンミン候補が島知事となり、ウ・グンミンのウィンウィン戰略の實體が現れた。カンジョン村から濟州海軍地を、最初の候補地であったファスンにするが、ファスン住民が反對すればカンジョン村が收用されるという条件付きの移轉計劃がそれだ。

カンジョン住民たちは絶望のなかで、藁でもつかむ心情になり、良心的ではない決定をしてしまった。結果、カンジョン村濟州海軍基地反對闘争は消滅したも同然であった。島民たちの視線は冷たく、カンジョン村は反對勢力内の葛藤のために、ひどい状況になってしまった。この内紛の間について、海軍は土地收用を終えてしまう。濟州島が農路を海軍に賣却して、協議買収持分が50%をこえると、残りの土地を強制收用してしまったのだ。この時期に反對側住民が結束していたら、土地測量と鑑定評價、收用段階ではるかに強力な抵抗が可能であったはずだ。海軍は戦闘服を着用したまま、數十人づつかたまって、住民との摩擦をおこしていた。軍人が民間人を相對に物理的暴力をはたらいたことに、組織的な對應を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側面とあわさり、悔やまれる。また海軍は地域發展計劃を1兆4千億をこすと誇張して宣傳し始めた。事實この發展計劃の大部分は、濟州島都市計劃に樹立された、國費補助事業を無差別にあてはめたにすぎないが、世論を操る海軍はいつでも有利であった。事實この時も、'軍民複合型寄港地'イシューに焦点をあてて闘っていたらどうなっていたらと思うと残念だ。

4. 設計の誤りイシュー時期 (2011中~2014)

2010年12月、海軍基地建設事業團事務所建設をかわぎりに、2011年3月から本格的な濟州海軍基地建設がスタートした。敷地全體をフェンスで囲おうという海軍と住民がいたるところでぶつかり、本格的な工事阻止闘争が始まった。折しも生命平和結社と平統サが4・3にあわせて次々と村にやって来た。そして共に闘うことを決意した。その直後クロンビ破壊を防ごうとしたヤンユンモ映画評論家の拘束と、斷食闘争が全國に知られ、多くの市民が自發的にカンジョン村に集まり、參與連帶を中心に、全國對策會議が結成された。この時期の核心アイコンは‘クロンビ’であった。

工事進行を妨げようとする様々な試みがあった。そのうちの一軸が環境影響評價による各種協議事項遵守であり、もうひとつの軸は安全性を基準にした航路問題、旋回場規模問題などであった。お粗末な環境影響評價論争は、2012年8月濟州島チュンムン・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で開かれたWCC(World Conservation Congress 世界自然保全總會)で頂点となり、世界環境首都を目標とする濟州島もまたこの問題から自由ではなかった。獨立的な影響評價を前提とした濟州海軍基地工事中斷決議案に上程され、壓倒的なNGO團體の支持が得られたが、政府機關の反撥で決議案通過には失敗した。しかしその余波は今でも世論に影響を及ぼしており、2015年世界リーダーズ保全フォーラムを誘致した濟州島で、西歸浦の沿岸の軟珊瑚群落保存問題は以前としてホットイシューのうちのひとつだ。現道政は濟州海軍基地周邊海洋還境に関する獨立的な調査事業を検討中である。設計ミスの側面は2012年、濟州島が獨立的な檢證T/Fをまとめ、報告書を發刊することで全國的なイシューとなり、總理室が直接檢證のための委員會を構成した。また海軍が試行した1、2次シュミレーショ以外に、濟州島が参加した形の3次シュミレーションが試行され、その結果30度航路變更と、突堤埠頭を可變式に變更するという決定が下された。しかしながら航路變更は竣工後に協議することとなり、可變式突堤埠頭に關する設計變更は、共同使用協定に強制條項として盛り込んだが、海軍は2年間設計變更を延期して、2015年6月、竣工があと少しというところでの提出のため、實質的な工事中斷の効果を發揮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このイシューの動きは、2012年度の海軍基地豫算を94%まで削減するという結果を生んだ。2014年度豫算反影時、70日間の檢證後執行という結果を導き出すなど、様々な政治力という形であらわれたが、海軍はただの一度も工事を中斷することはなかった。唯一の工事中斷は不法に裝備を夜間に搬入するところを住民が阻止し、工事場正門を塞ぐ籠城を始め、汚濁防止膜もなく海上工事を敢行していたバージ船を占據すると、環境影響評價協議事項だけではなく、公有水面埋立免許附款條項違反工事行爲に對して許可權者である濟州道政は、工事中斷を命じざるをえなくなった。また陸上工事部分も道路法違反、裝備に關する過料が附課されるなど、直接的な行政措置がとられた。この3年間、警察によって連行された者は700人をこえ、特にクロンビが發破された時期には連日記録を更新した。拘束38人と、589件に達する起訴件数は莫大な司法費用負擔となった。このことから濟州海軍基地問題は、深刻な人權問題であることがわかる。

基地擴張阻止闘争と今後の課題

2015年劈頭から村の中まで入ってこようとする軍官舎の建設に対する阻止闘争が火をふいた。1月31日、行政代執行は24人の連行者と大小の負傷者を出し、全国にまだカンジョン村が海軍基地建設に抗い闘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見せつけた。

軍官舎建設問題は明らかな海軍基地擴張問題だ。2010年濟州海軍基地實施設計がでてきた時期には、外部軍官舎問題はなかった。2012年にはいり、海軍は海軍基地外部に軍官舎を建設する計画を樹立し、都市計劃樹立の全權を握っている濟州道政が許可すると、軍官舎建立が問題となった。同一法律による事業なので、その氣になれば海軍は軍事施設保護法によって村を完全に食い荒らすことができる土台を作りだと、カンジョン村會は判断している。3回にわたる住民同意過程で失敗した海軍は、住民同意手続きが必要ない1萬平方メートル以下の72世帯軍官舎事業を押し進めた。それさえ建立豫算も条件付き豫算で通過すると、企財部隋時配定豫算もなく軍官舎買入費用を轉用し、軍官舎建設を進めていると思われる。このように國家機關である海軍はブローカーのごとく振る舞い、住民の平和的生存權を脅かしている。海軍基地の場合と同じく、濟州道政の政治力でも海軍の工事強行意志をまげることではできず、唯一の工事中斷は住民が軍官舎工事場正門を籠城で防いだ3ヶ月の間だけであった。濟州海軍基地建設過程と、軍官舎建設過程のふたつの事例をみると、直接的な工事中斷の力は住民であったことを新たに確認する。従って、住民の意志回復と共同體的の回復が何よりも重要だと言える。

あとわずかで海軍基地迂回道路工事によって、平和の據點であった三辻食堂一帶の撤去が進められる。この闘いは今後の闘いを決める重要な一戦となるため、徹底した備えが求められる。そして濟州海軍基地竣工後、保護區域擴大に対する對備策も必要だ。海軍がMOU締結時 基地境界線の外には、軍事施設保護區域を指定しないと約束したのにもかかわらず、共同使用協定では保護區域指定が必要な場合、濟州島知事と協議するという内容に變質している。基地外部に保護區域指定可能性がでてきただけでなく、軍事施設保護法の通信施設に対する行爲制限規定を根據に、特定施設に対する保護區域を指定する可能性も高い状況だ。各種訓練状況で住民の生活に支障が発生する場合にもそなえなければならず、反對對策委尊屬はその妥當性を備えている。

朝鮮半島のTHAAD配置可否によって、濟州海軍基地は海上MDの據點として活用される可能性が一層大きくなるだろう。濟州海軍基地で運用される機動戰團が、韓・米・日三角同盟によって、濟州島南方海上での共同海上作戦が強化される場合、中國との外交摩擦につながる。これに對抗するために東北アジアの平和運動を、該當當事國の民衆たちの連帶を通じて一層深めていかねばならない。

駐韓米軍の生物兵器搬入， および実験・訓練の實態と問題点

イ・ミヒョン / 參與連帶・平和軍縮センター

駐韓米軍の炭疽菌搬入事件が発生してから3ヶ月が過ぎた。韓米政府は先月になりようやく合同實務團を組織、炭疽菌の烏山基地搬入過程、その後の措置について調査するとしたが、いまだこれといった発表には至っていない。米國防部が全世界での生きた炭疽菌配送の経緯について調査結果を発表したが、事件の全容解明には程遠いものがある。

2015年8月16日現在までに、米國防部が発表した調査結果(Laboratory Review)によると、ダグウェイ研究所(Dugway Proving Ground)から生きた炭疽菌を直接、または間接的に受け取った實驗室は計194ヶ所、炭疽菌が流入した國家は米國を除くと9ヶ國だ。9ヶ國には韓國と日本をはじめとするイギリス、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イタリア、ノルウェイ、スイスが含まれる。米國領グワム、プエルトリコ、バージン 아일랜드も炭疽菌が流入した地域と確認された。³⁹⁾

事件の深刻さや規模の膨大さに比べて、米國防部が出した調査結果報告書は失望させるものであった。報告書は今回の事件を、“ありえない、許されない失敗”と認めてはいるが、炭疽菌が何故生きた状態で配送されたのかに関しては、現代科學知識の不足により具體的に識別できなるとした。そして統一規程の不在による問題なので、規程標準化を勧告案として結論づけた。⁴⁰⁾また10年以上生きた炭疽菌を生産してきたダグウェイ研究所に對しては、規程を守っていたとして、どのような責任も問わずじまいだ。

39) http://archive.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

40) 2015. 7. 13. 米國防部発表

http://archive.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docs/Review-Committee-Report-Final.pdf

駐韓米軍の炭疽菌搬入と疑問点

駐韓米軍烏山基地に炭疽菌が搬入された事件の顛末はこうだ。現地時間にして5月27日、米國防部が今回の事件を最初にマスコミに発表した。米國ユタ州に位置する米陸軍生化學兵器研究所のダグウェイ研究所が、'過って'生きた炭疽菌1mlを、民間運送業者のフェデックスで平澤にある駐韓米軍烏山空軍基地に配送したというのだ。これは5月22日メリーランドのある民間研究所が、ダグウェイ研究所から受け取った炭疽菌サンプルに問題があったことを通告して判明した。しかし烏山基地ではすでに5月21日に22人の人員が、ジュピター(聯合駐韓米軍フォータル、および統合脅威認識、JUPITR)プログラムの一環として進められていた新規遺傳子増幅(Polymerase Chain Reaction, PCR)分析裝備試演會のために、該當炭疽菌サンプルを解凍、實驗の前處理を實施した。以後、5月27日になってようやく駐韓米軍は米國防部の指示事項の通報を受け、炭疽菌を廢棄、實驗室を閉鎖した。

駐韓米軍は“このような訓練は今回が初めて”だと主張する。しかし今までに明らかになった事實を見ると、その言葉どおりに信じることはできない。烏山米軍基地ではどんな内容の實驗が行われていたのか、なぜ駐韓米軍は事件が申告されてから5日もたってようやく措置をとったのか、疑問は膨らむばかりだ。

米陸軍關連責任者たちは、ジュピタープログラムが2013年にスタートし、2014年にはすでに成功的に安着していると主張した。ジュピタープログラムを率いているピーター・イマニユアル(Peter Emanuel)博士は、2014年12月にインタビューで、駐韓米軍は去る18ヶ月間繰り返し實驗した結果、各實驗室はそれぞれの地域に適合する生物識別裝備を備え、米國で實施した野外實驗についてもシミュレーションデータ分析のみを残すと明らかにした。また今年3月26日、米陸軍エジウッド化學生物學センター(U.S. Army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は、ジュピタープログラム最終段階の作動試演(Operational Demonstration)のために、烏山に2トンに達する裝備を配送したと発表した。

駐韓米軍はPCR裝備試演のために、初めて炭疽菌を取り入れたと言うが、その情況をみるにつけ言葉どおりに信じることはできない。しかもPCRは藥科大生や医大生ならば學生の時期に實驗したであろう、ありふれた微生物檢查方法だ。新規裝備だとはいうが、それを試演するためにわざわざ炭疽菌まで活用せねばならなかったのかという疑問がのこる。先に記述した情況をみるにつけ、むしろ今回の炭疽菌搬入がジュピタープログラムの最終段階である作動試演(OD)のためのものだったという推測がむしろ自然だ。ならば最終試演準備のために、すでに炭疽菌のような生物兵器を活用した事前模擬實驗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推測される。

全世界的に炭疽菌を活用した實驗を行ってきた米國

韓米當局は、ジュピタープログラムが“北朝鮮の生物脅威に對する深刻性を認識し、朝鮮半島での生物防禦能力を向上”させるための措置だと主張する。しかし米軍がこの間生きた炭疽菌

を配送した所は韓国だけではない。8月末基準、米国内の50ヶ州、3ヶ所の米國領と韓国、日本、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イギリスなど、9ヶ國など、全世界の様々な地域にわたっている。しかも炭疽菌が配送された時期は2005年にまで遡る。

日本の場合、2005年に東京の南西40km離れた神奈川県座間市に位置する駐日米軍基地、キャンプ座間に炭疽菌のサンプルが配送され、2009年になってようやく廃棄されたといわれる。廃棄された当時、炭疽菌が活性化していたかどうかを確認していないため、生きた炭疽菌が搬入されたとは言えないと米國防部は主張するが、炭疽菌のサンプルが日本に搬入されたという事実だけは明白だ。⁴¹⁾

米國領のひとつグワムでも炭疽菌のサンプルが配送されたと確認された。ドイツの場合も、2005年ランシュトール市にある米軍醫療研究室に炭疽菌が送られてきた。このように世界のいたる所に炭疽菌のサンプルを配送して、米軍は實驗を繰り返してきたのだ。それでも韓米當局は、今回問題となったジュピタープログラムは、北朝鮮の生物兵器防衛用なので大丈夫だと抗辯する。果たしてそうなのだろうか？韓国以外の他の國々はどのようなのだろうか？日本、ドイツなどに今は炭疽菌サンプルが配送されず、存在しないので、もう何の問題もないと言えるのだろうか？

米國がこのように廣範囲にわたる地域で、生物化學戰對應戦力を増強するためにプログラムをスタートしたのは、1997年‘生化學兵器國家安保プログラム’にまでさかのぼる。それ以後、2001年郵便物を利用した炭疽菌配送事件が発生して、米國政府は關聯豫算を大幅に増額して、生化學兵器防衛プログラムを發展させてきた。

しかし‘防衛用プログラム’という説明で米軍の生物兵器開發、および關聯實驗をすべて合理化していいわけではない。防衛用實驗に使用される炭疽菌でも、いつでも攻撃用としての使用が可能だからだ。韓国と米國が加入、批准した生物兵器禁止協約では、炭疽菌の開發・保有・運送・使用などを嚴に禁止しているのも、まさにそのような理由からだ。

韓国を炭疽菌の試験場にしている駐韓米軍

しかも北朝鮮の生物兵器保有を抜きにしても、北朝鮮を口實に韓国で炭疽菌の實驗を行い、對應プログラムを開發するという主張はつじつまが合わない。ピーター・イマニュエル博士もまたジュピタープログラムと關聯して、米國防部のアジアへの回歸戰略(Pivot to Asia)と米軍に好意的な韓国政府のおかげで、ジュピタープログラムの實驗場を韓国にしたと説明し、“韓

41)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sample sent to Camp Zama contained live Bacillus anthracis, as it was destroyed in 2009. An inventory of the Camp Zama laboratory conducted in June 2015 verified that there were no remaining proficiency samples. There were no cases of infection related to the 2005 sample, and there is no health risk to the laboratory personnel or the general public in Japan, as it was properly transported and stored prior to destruction.

http://archive.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Pentagon_Issues_Statement_On_DoD_Laboratory_Review_Update.pdf

國で設計された枠組みは、米軍のアフリカ・ヨーロッパ・太平洋司令部に適用可能だ”と説明したという。⁴²⁾ 言い換えれば、米國が全世界で適用する形式を作るために、韓國で生物兵器を活用した實驗、および訓練プログラムを推進しているのだ。

何より米國が韓國を試験場にして大量殺傷兵器を活用した實驗を行ったという事實は、理由がなんであれ許しがたい。炭疽菌を配送された烏山米軍基地の位置をみても、その怒りが一層大きくなる。烏山空軍基地のフェンスの外には、民間人が居住する住宅地区と商業地区が広がる。もし生きた炭疽菌を最終試演、または野外實驗に使用したならばどのようなことがおこっていたか、想像するだけでも恐ろしい。

にもかかわらず、駐韓米軍司令官は米國防部の調査結果発表直後、炭疽菌を活用した生物兵器防衛プログラムであるジュピタープログラムを続けると発言した。韓國政府もまた、同じような態度をとるにとどまった。疑惑は解消されず、再發防止対策には程遠いが、ジュピタープログラムは続けられるべきだというのだ。

厳正な調査と透明な公開で疑惑の解消を

この間韓國政府は、駐韓米軍が國內法を違反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市民社會の主張に、初志一貫して“配達事故”であり、“違法ではない”と一步も譲ろうとはしなかった。しかし炭疽菌搬入を單純な配達事故だと見過ごすわけにはいかない。炭疽菌が活性化していたかどうかを抜きにして、炭疽菌を活用した實驗自体が、國民の生命と安全に直結するからだ。

國內法、生化學兵器禁止法、感染症豫防法施行令のどこにも‘生きた’炭疽菌だけ申告することという記載はない。高危険病源體と生物作用劑の種類に‘炭疽菌(Bacillus anthracis)’とだけ明示されている。また、同處罰規定は故意犯と過失犯を区分していないため、駐韓米軍の申告のない炭疽菌搬入は明らかに處罰を受けるべき、國內法違反だ。

去る6月22日韓國市民社會は、‘國民告發團’8704人の市民の名前で、生化學兵器禁止法と感染豫防法など、國內法に違反した駐韓米軍責任者を告發した。烏山米軍基地周邊に暮らす平澤市民も多數參加した。基地周邊に住む住民の平和的生存權こそが今回の事件の真相を調査し、再發防止対策を考慮するにおいて、何よりも優先されるべきだ。

どの國であろうと、生物兵器脅威も‘生物兵器防衛プログラム’で對應してはならない。防衛用と攻撃用の區分が無意味な状況で、米國と同じく北朝鮮もまた‘防衛’目的で生物兵器を活用した實驗を行うならば、これを防ぐ名分はない。解決策は生物兵器の開発、生産、移轉の禁止だ。これはすでに國際社會が約束したことでもある。生物兵器禁止協約の檢證議定書がいまだ採擇されず、法的強制力を行使していないという状況で、全世界の平和運動勢力の關心と連帯が必要だ。今回のような事件が再び繰り返されてはならない。

⁴²⁾<http://www.cbrneportal.com/interview-with-dr-peter-emanuel-the-joint-united-states-forces-korea-portal-and-integrated-threat-recognition/>

